

제 3 회

지방자치·분권실현 정책제안 공모

시상식 및 수상작 발표회

□ 일 시 : 2018년 11월 9일 오후 3시

□ 장 소 :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 주 최 :  부산일보사 ,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 주 관 : 사)부산시민재단

□ 협 찬 :  부산은행

- 순 서 -

1부 시상식

- 개회
- 참석자 소개
- 인사말
- 축사
- 경과 및 심사보고
- 시상식
- 기념 촬영

2부 수상작 발표회

■ 대상

- 김지완(대학부: 한국해양대학교)외 1명
 - 주제: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한 주민참여 정책플랫폼 구축

■ 우수상

- 일반부: 신지수(경기도 구리시)
 - 주제: 민관 협력 중심인 지방자치단체 공공후견프로그램 제언
- 대학부: 이제호(강원대 정치외교학과)외 1명
 - 주제: 지방분권의 선행조건 - 강원도를 중심으로 분석

■ 장려상

- 일반부: 김성인(서울 영등포구)
 - 주제: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 및 사회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일반부: 김성훈(부산시 동래구)
 - 주제: 유튜브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지역 모임의 자발적 활성화 방안
- 대학부: 차혜미(인제대 사회복지 및 보건행정학과)외 4명
 - 주제: 부산광역시 장애인 셔틀버스 도입
- 대학부: 정원석(홍익대학교)외 1명
 - 주제: 지방자치분권의 실현 :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심으로

- 목 차 -

● PPT자료

대상

-김지완(대학부, 한국해양대학교)외 1명

-주제: 주민참여 정책플랫폼 구축..... 5

우수상

일반부: 신지수(경기도 구리시)

-주제: 민관협력중심인 지방자치단체 공공후견프로그램 제언
..... 15

대학부: 이제호(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외 1명

-주제: 지방분권의 선행조건-강원도를 중심으로 분석
..... 21

장려상

일반부: 김성인(서울 영등포구)

-주제: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방안
..... 30

일반부: 김성훈(부산시 동래구)

-주제: 유튜브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지역 모임의 자발적 활성화방안
..... 37

대학부: 차혜미(인제대 사회복지 및 보건행정학과)외 4명

-주제: 부산광역시 장애인 셔틀버스 도입
..... 40

대학부: 정원석(홍익대학교)외 1명

-주제: 지방자치분권의 실현 :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심으로
..... 45

● 한글자료

대상

- 김지완(대학부, 한국해양대학교)외 1명
 -주제: 주민참여 정책플랫폼 구축..... 55

우수상

- 일반부: 신지수(경기도 구리시)
 -주제: 민관협력중심인 지방자치단체 공공후견프로그램 제언
 70

- 대학부: 이제호(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외 1명
 -주제: 지방분권의 선행조건-강원도를 중심으로 분석
 81

장려상

- 일반부: 김성인(서울 영등포구)
 -주제: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방안
 93

- 일반부: 김성훈(부산시 동래구)
 -주제: 유튜브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지역 모임의 자발적 활성화방안
 106

- 대학부: 차혜미(인제대 사회복지 및 보건행정학과)외 4명
 -주제: 부산광역시 장애인 셔틀버스 도입
 113

- 대학부: 정원석(홍익대학교)외 1명
 -주제: 지방자치분권의 실현 :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심으로
 123

- 참고자료 1(공모 알림기사, 웹포스터) 132

- 참고자료 2(조직현황) 134

주민참여 정책플랫폼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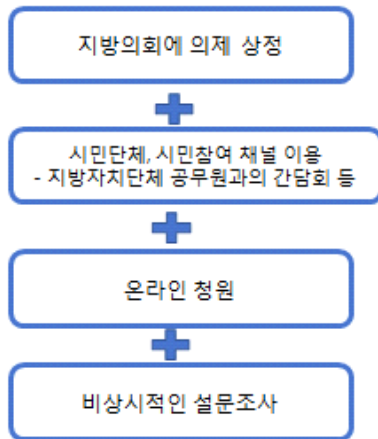
김지완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김정훈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

목차

1. 정책 제안 배경
2. 주민참여 정책플랫폼의 개념
3. 주민참여 정책플랫폼의 작동 메커니즘
4. 주민참여 정책플랫폼의 선행 조건
5. 예상 효과

1. 정책 제안의 배경

- 현재의 주민 정책 수요 파악체계



광역자치단체의 대표적 온라인 정책참여 채널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구성 콘텐츠
서울시	정책포럼형, 민원·이상행, 자유게시판, 참여제언방, 입법제고, 시민의견, 여론조사, 설문조사, 시민포럼
인천시	시민의 소리, 시민제언방, 시민참여, 신고센터, 토론방, 설문조사, 이벤트, 블로그 및 카페
부산시	부산시에 바란다, 정책포럼형, 혁신방, 제안공모, 여론조사, 오피스, 시민포럼대담자추진, 카페, 자유게시판
대구시	정책참여, 시민이론, 정책포럼시스템, 디카존,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동화회
울산시	울산시에 바란다, 신고센터, 자유게시판, 청원합시다, 정책포럼형, 내셔널 제안에 바란다
광주시	광주포스, 제안포스, 시민포럼, 자유게시판, 시민제언방, NGO 제안방, 설문조사, 블로그, 시민참여공동체
대전시	시민단체, 시민포럼, 설문조사, 시민제언, 시민포럼, 이문사랑, 청원합시다, 자유게시판
강원도	자유게시판, 청원합시다, 홈페이지, 제안사항, 정책제언, 행정가자랑
제주도	제주도에 바란다, 청원합시다, 자유게시판, 신고센터, 불만신고센터, 생활게시판, 민원제언방, 정책제언방
경남	정책포럼, NGO포럼, 혁신포럼, 토론회포럼, 올림포스, 여론조사
경북	도민의 소리, 토론방, 토론회포럼, 여론조사, 토론회포럼, 오피스, 전문가 Q & A, 시민포럼, 교육·사회·인간관계, NGO, 블로그
전남	전남신문, 마이페이지, 정보제공방, 주민참여방, 행정혁신방, 행정실용정보
전북	업무혁신방, 토론회포럼, 내도센터, 토론회포럼, 공공·공식, 행정실용정보, 정책포럼, 시민참여, 정책제언방
충남	충남신문에 바란다, 제안방, 청원합시다, 자유게시판, 설문조사, 시민포럼형, 이벤트, 주민참여포럼
충북	충북신문에 바란다, 홈페이지, 불만신고, 토론회포럼, 토론회포럼, 토론회포럼, 토론회포럼, 토론회포럼, 토론회포럼
경기도	도정참여 (정책포럼형, 자유포럼형, 토론회포럼, 토론회포럼, 자유게시판, 설문조사)

1. 정책 제안의 배경

지방분권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대한민국정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집행 용이
예) 노동법, 최저임금, 경제개발계획

정책의 대상이 전국민이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어려움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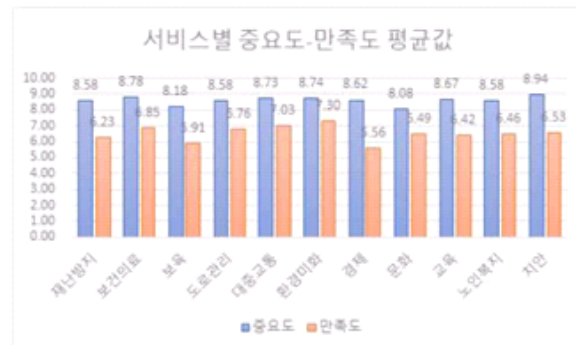
정책의 대상이 주민들에 국한됨



주민들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가 용이함.

과연?

〈그림 2〉 서비스 영역별 중요도-만족도
(Figure 2) Comparison of Importance-Satisfaction by Service Type



1. 정책 제안의 배경

- 중간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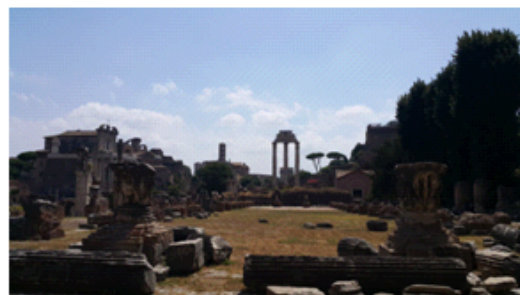
-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주민들의 정책수요를 파악하지 못함
- 지방자치제도의 이론적인 장점이 발휘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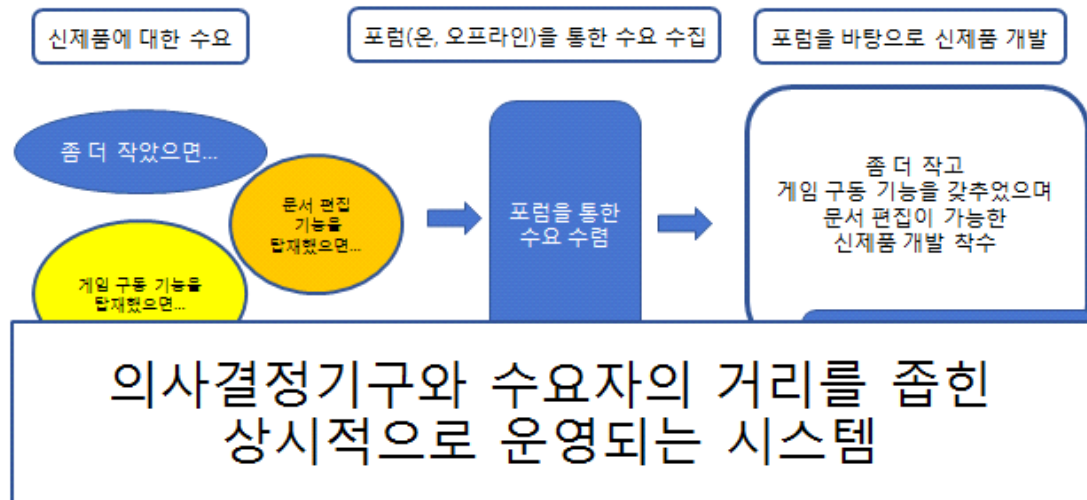
새로운 주민 정책 수요 파악 시스템 필요

2. 주민참여 정책플랫폼의 개념

- 플랫폼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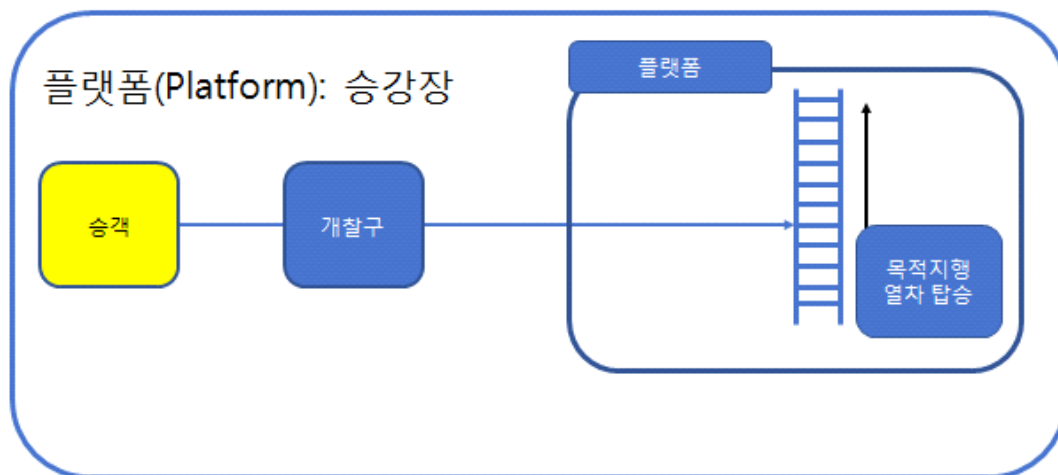
- 포럼의 등장
- 원개념:
의사결정기구가 집적된 곳에
위치한 광장 또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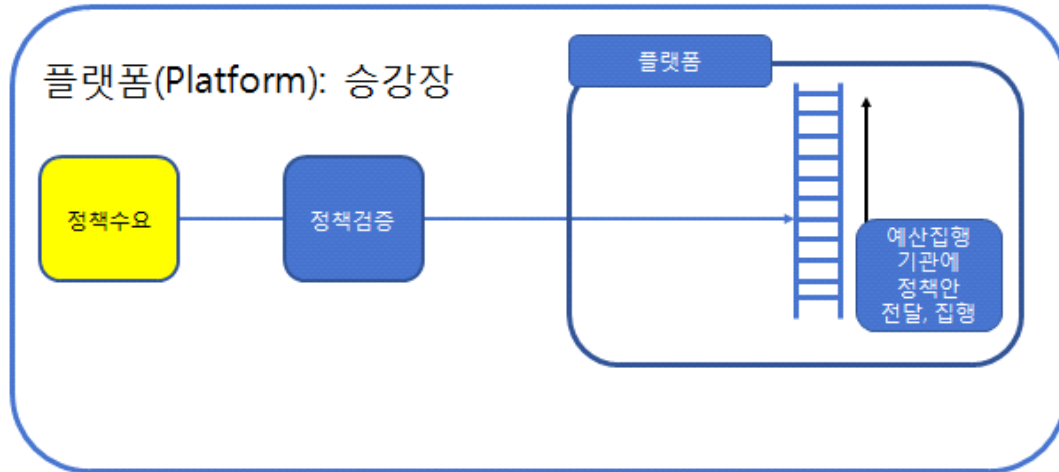
2. 주민참여 정책플랫폼의 개념

- 포럼의 공영 부문으로의 이식,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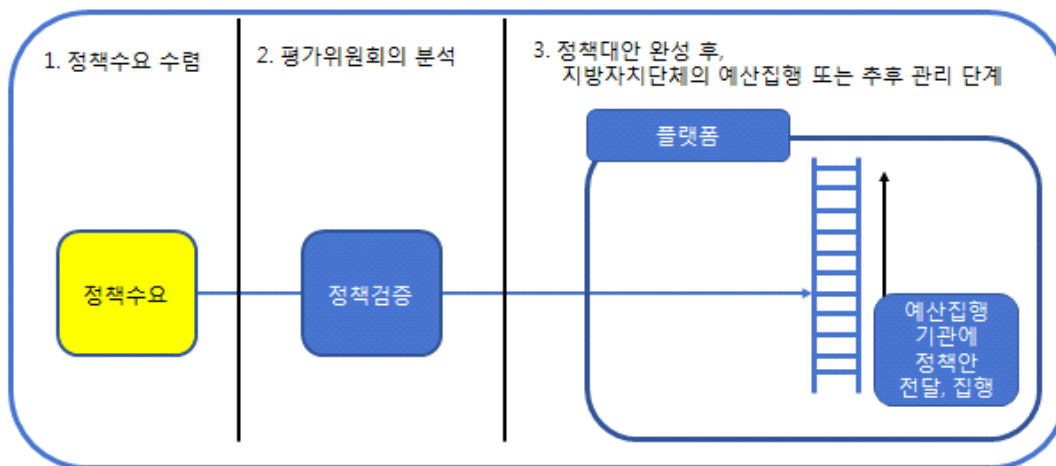


2. 주민참여 정책플랫폼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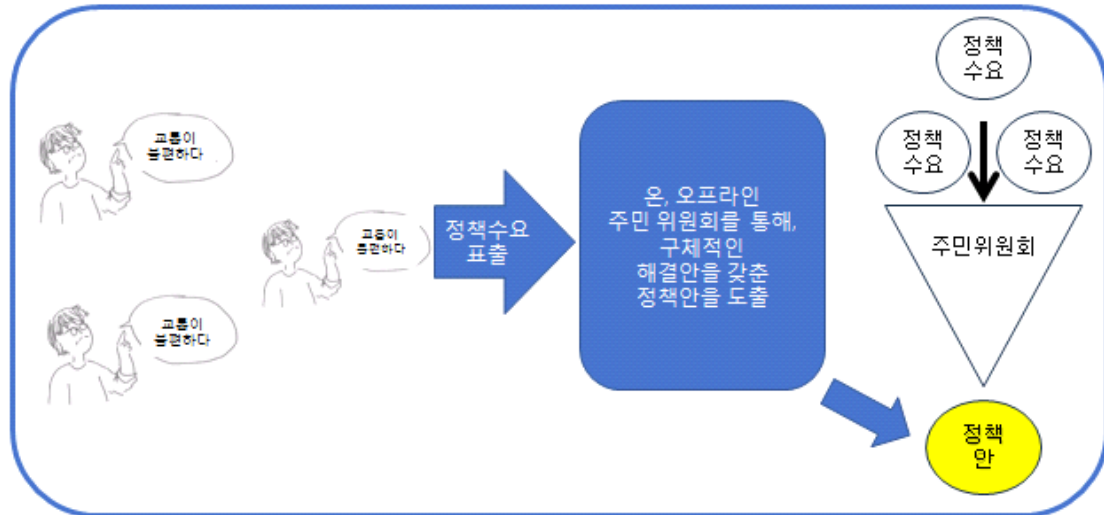
- 포럼의 공영 부문으로의 이식,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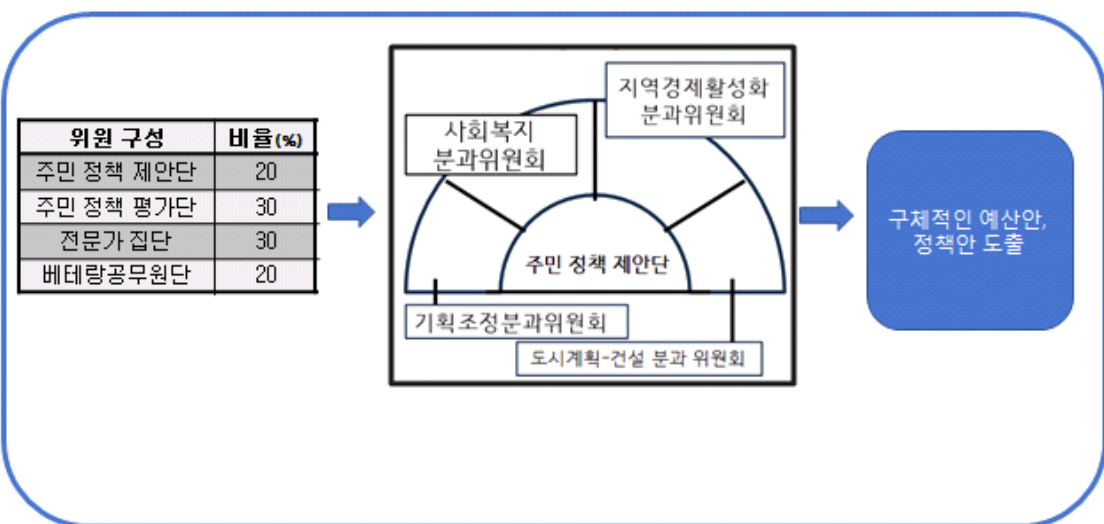
3. 주민참여 정책플랫폼의 작동 메커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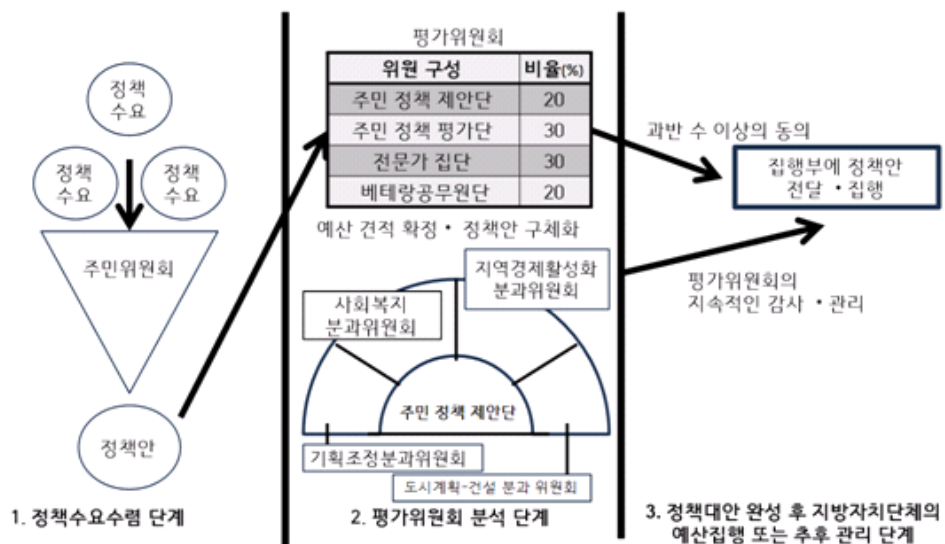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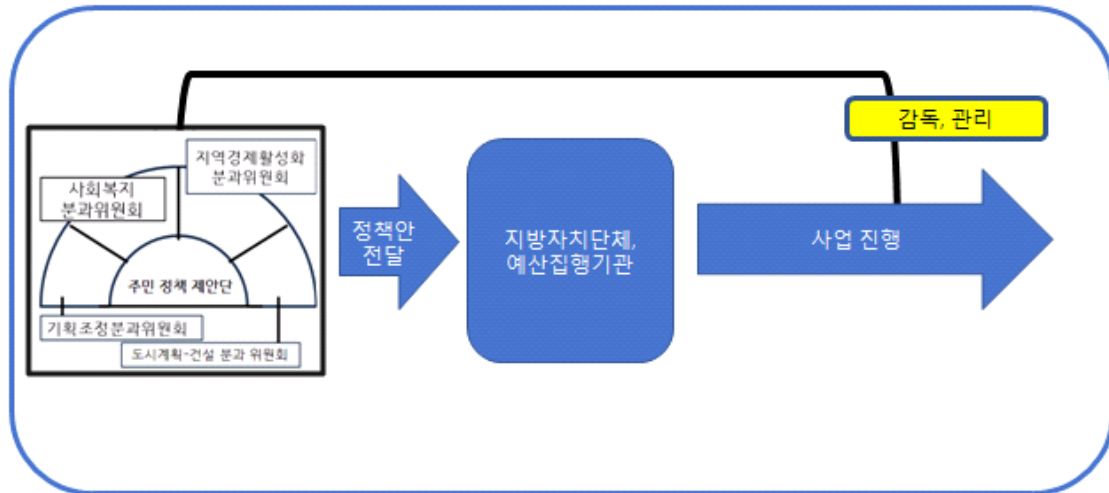
1) 정책 수요 수렴단계



2) 평가위원회의 분석 단계



3) 예산 집행 및 추후 관리 단계



4. 주민참여 정책플랫폼의 선행 조건

- 온, 오프라인을 통한 주민들의 참여 의식 함양
- 평가위원회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 전문성 확보
- 평가위원회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성숙한 토론 문화 함양

5. 예상효과

- 정책 수요 표출 용이
- 정책 수요 파악 용이
- 평가위원회를 통한 현실성 확보
- 평가위원회의 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 방향 개선
- 진정한 민의 수용을 통한 지방 자치실현
-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쁜 주민들에게도 정치 참여 기회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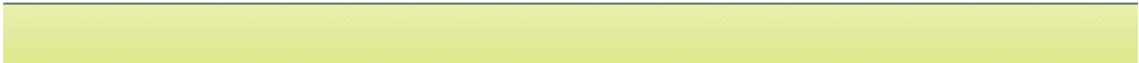
출처

- 강혜진,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기대불일치가 주민들의 지역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52(2), 2018, 80-81면.
- 문신용, 「e-거버넌스와 시민들의 온라인 정책참여」, 한국지역정 보화학회지, 제12권 제2호, 2009.06, 69~70면.
- <https://www.gov.kr/portal/orgInfo> - 대한민국 행정부 마크
- <http://www.busan.go.kr/index> - 부산광역시 마크
- <http://www.jinju.go.kr/main/> - 진주시 마크
- <http://www.tongyeong.go.kr/main.web> - 통영시 마크
- <http://www.daegu.go.kr/> - 대구광역시 마크



민관 협력 중심인 지방자치단체 공공후견프로그램 제언

신지수



목차

- 문제점 및 현황
- 해외사례 연구
- 민관 협력 자원봉사 연계 후견감독 프로그램 제언
- 기대효과

문제점 및 현황



현행 법제도 하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용어를 없애고 후견제도를 도입

성년후견 신청건수는 7000건에 가까워지고 있음

후견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후견인의 피후견인 재산관리 문제

문제점 및 현황

제940조의4(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무적으로 후견센터 마련이나 조사관등이 확충

매년 수천 명씩 확충하는 후견 신청 증가 현실을 고려할 때 공공부조로는 내재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후견 복지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민간에 제공하려면 공공부조만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민관협력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

충청남도 세이브래 연구 - 노년자의 노인 충경리도 사스대

뉴저지 주는 2013년부터 주 정부의 후견 감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웹 기반의 컴퓨터 어플리케이션인 GMS(Guardianship Monitoring System)를 운영

해당 자원봉사 시스템의 봉사자가 되려면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고, 지문 등록과 신원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원봉사자를 위한 행동 강령을 수락하고 준수

후견감독 해외사례 연구 - 아이다호 애이더(Ada) 카운티 자원봉사 후견감독 프로그램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가 이루어
지는 후견감독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들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에
의해 임의로 선정된 피후견인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연간 약 600건의
회계보고서에 대한 기초적인 감사를 수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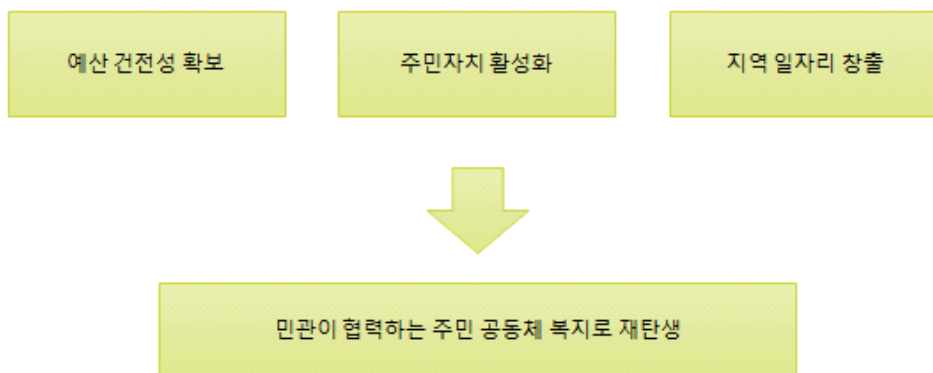
민관 협력 자원봉사 연계 후견감독 프로그램 제언 -일반인 후견 자원봉사



민관 협력 자원봉사 연계 후견감독 프로그램 제언 -법률가 후견 자원봉사



기대효과





참고문헌

- 매디컬월드뉴스, 9월 20일부터 치매공공후견제도 본격 시행… 치매공공후견사업도 시작, 2018.09.12
- 머니투데이, 공공후견제도 시행…노인일자리사업과도 연계, 2018.09.11
- 파이낸셜 뉴스, 올해 9월부터 지자체서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실시, 2018.04.13
- 한겨레, 누가 치매노인을 두 번 올리나…후견 사각지대를 찾아라, 2017.07.10
- 박민제 기자, <후견인이 역대 상속 재산 빼돌린 뒤 0.6평 요양원 방에 피후견인 방치>, 중앙SUNDAY, 2017. 8. 27.
- 현소는 기자, <누가 치매노인을 두 번 올리나…후견 사각지대를 찾아라>, 한겨레, 2017. 10. 10.
- 김윤경,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7.
- 구상열,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연구 - 입법 배경, 입법자의 의사 및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12.
- 대법원 법원행정처, 성년후견제도 해설, 경성문화사, 2013.
- 제철웅,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사법상의 권리 실현 보장체계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21(4), 2014.
- 조형성,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내실화 방안",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공청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 최수정, "고령사회에서 성년후견제도와 실태", 법조 통권 제702호, 2015.
- 외국문헌
- Ellen M. Klem, "Volunteer Guardianship Monitoring Program: A Win-Win Solution", AARP (2007).

지방자치 분권실행 정책제안 공모 대학생부문
〈지방분권의 선행조건: 강원도를 중심으로 분석〉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제호
이지민

목차

1
'웰링턴'
이야기

2
농촌
중심 분석

3
도시
중심 분석

4
결론

웰링턴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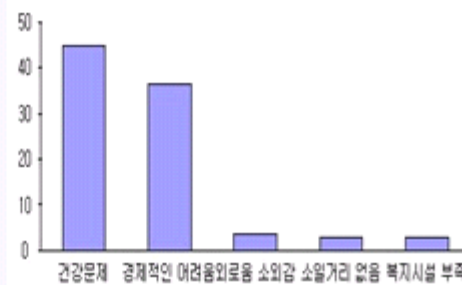


농촌 중심 분석

농촌 문제 해결

- 의료 복지시설, 상권 등 각종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위하여 교통을 개선 필요
- 의료용 소외감의 해결 위한 문화적 접근성 증대
- 지원 사업의 원활한 평가 위한 마을 범위의 축소 필요

농촌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농촌 중심 분석

강원 에듀 버스

- 강원도의 지리적 제약에 의한 교통 문제 해결 위해 도입
- 학생들에게 교통 편의 제공
- 학생들의 통학 시간 제외한 시간에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 인구 구성 고려한 개선책을 통한 삶의 질의 향상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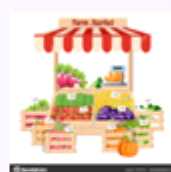


	유소년층(5세~14세)	청년층(15세~29세)	중·장년층(30세~64세)	노년층(65세~99세)
합계	128,901	281,989	786,248	271,304

선택형 운행 버스 노선 예시

선택형 운행 버스 도입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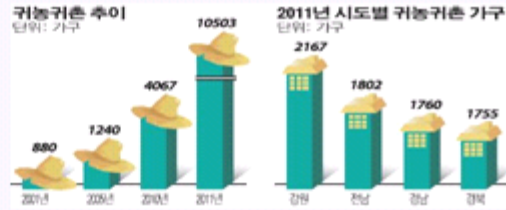
- 마을 주민 의견 수렴한 희망 노선 군정에 제출
- 군정의 버스 배차
- 동사무소에서 선택적 노선 제작
- 노선엔 군청과 연계한 병원, 재래시장, 도서관 필수 포함
- 노선에 따른 운행



농촌 중심 분석

귀농 인구의 증가

- 전국적으로 귀농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중 강원도의 귀농 가구 비율이 가장 높다.
- 강원도 내 귀농 가구수를 보아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 귀농 인구의 안정적인 정착은 지방자치 강화의 원동력이 된다.



농촌 중심 분석

코하우징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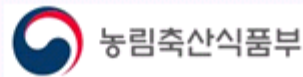
- 북유럽 국가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주거 형태를 의미함
- 주민이 마을 형성의 모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
- 공동공간을 활용한 기존 정착민과 신생 농촌인의 상호보완적인 교육 시스템
- 수트권과 접근성 용이한 강원도 일부 지역은 주말농장으로 개발 가능



농촌 중심 분석

GAP의 단점

- 강원도는 현재 지역 브랜드와
위해 농업경주의 정책인
GAP 제도 전국 활용 중
- 생산자 입장: 제품 까다롭다
- 소비자 입장: 정보 부진
-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



농촌 중심 분석

온라인 마켓의 활성화

- 현재 강원도는 강원도 온라인
몰을 적극 활용해 농산물 상권
확보하고자 함.
- 그러나 트민 대상이기 때문에
농산물 상권 확보 어렵다
- 강원도의 주요 산업인 '관광'
을 활용하여 주요 관광지에서
오프라인 마켓 신설
- 소셜커머스와 협업하여
'강원도 브랜드관' 유치

I LOVE GANGWON

강원도 사회경제적 대표상품관

공감에서 탄생한다
강원공간

강원도원랜드관

+

coupang

특가대표/
위메프

TMON

도시 중심 분석

도시재생 뉴딜사업

→ 현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진행 중이다.

→ 강원도 역시 도시 재생
뉴딜사업으로 최종 확정

도시 중심 분석

도시 중심 분석

지방 기업이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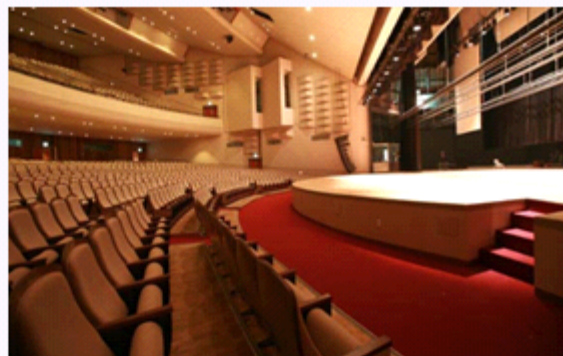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제정으로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용이해지고 있다.
- 본 자료는 2000~2004년 강원도로 이전하는 기업의 수이다.



도시 중심 분석

기업은 이전하는 데?

- 기업이 이전하고 취업 준비생이 강원도로 이주 하고있다.
- 하지만 강원대학교 안에 있는 백령 아트센터의 일경표에는 문화공연만 제공될 뿐이다.



도시 중심 분석

문화공연?

→ TED는
유명한 일종의
재능기부 강연이다.

→ 문화공연도
중요하지만 대학교만의
문화 전용인 만큼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을 위한
컨텐츠도 필요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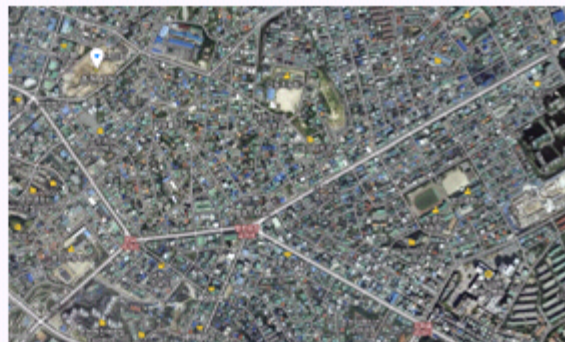
도시 중심 분석

강원도 특성 : 시장

→ 춘천의 모습을
위성사진으로 찍은
사진이다,

→ 아파트 단지보다
주택 단지와
상권 골목이 발달되어
있다,

→ 대형쇼핑몰이 필요한가?



도시 중심 분석

시장의 활성화

- 강원도의 시장은 전통적으로 유명했다.
- 시장의 인기가 떨어지자 정선 아리랑과 같은 문화 공연을 실시
- 시장 역시 문화 공연이 아닌 다양한 컨텐츠를 도입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함



정선 아리랑 시장

정선 아리랑시장의 정기 5일장은 매월 2, 7, 12, 22, 27일에, 주말장은 매주 토요일에 열리고 있는데요. 여름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벤트 공연장에서는 소리 공연, 책매치기 등의 정기 이벤트도 열려요! 또 서울 정학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정선 아리랑 시장에서 전통 시장 특유의 향수를 담은 출격하세요!

결론



- '선택형 운행 버스'를 통한 교통 문제 해결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코하우징 주거 시스템의 도입으로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유도
 - 온라인 물의 활성화를 통한 '강원' 브랜드화 가능
- 강원도의 도시 재생 사업, 지방 기업이전 제도에 맞춰 강원도 특성에 맞춰 발전 시킬 필요가 있어 보임
- 이를 위해 상권 골목(혹은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제안.
- 강원도 만의 정책으로 만들어진 '강원도'가 되어 지방 자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봄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방안



사회서비스 영역의 상호 업무 중복

기관	법적근거	주요업무	관련부처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교육, 지원, 시설관리 등	문화체육 관광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지방채 조례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 마을기반 조성 주민조직 네트워크 구축	환경안전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회적기업 육성법 지방채 조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중앙정부지자체간 대응	고용노동부 환경안전부
지방도시공사	지방도시법	토지취득, 임대, 개발 임대주택관리 주택 및 도시개발사업	환경안전부
자원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자 자원봉사	보건복지부

문화복지 전문인력 활용의 당위성

- 공공인프라는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사회간접자본(SOC)이 있는 반면에 사회·문화적 콘텐츠도 존재함
- 공공인프라 관리 조직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각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는 실정임
 - 국유재산 관리 : 지자체,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공기업
 - 문화재 및 콘텐츠 관리 : 문화재청, 콘텐츠진흥원, 지역별 문화재단
 - 공공시설 관리 : 광역지자체, 시설관리공단
- 부산시의 다양한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정책적 측면에서의 자료 구축과 가치 증대 방안을 추진해야 함
- 문화복지 전문인력이 다양한 형태의 인프라를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 및 수요공급의 접점 역할을 수행

문화복지 전문인력의 운영 거버넌스

지원조직	도시재생뉴딜 유관사업	도시재생뉴딜 연계·협력 방안
지역 문화재단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활성화 지역 역사문화 조사, 스토리텔링 주민 문화활동 지원, 행사 개최	지역 역사 및 문화자원 조사 및 발굴 정책을 통한 지역문화 정책 주민·공공체 역할강화 및 활용프로그램 연계
마을만들기 (공동체) 지원센터	주민공동체 지원 주민·공동체 역할강화 주민조직·공동체 육성 등	주민조직·공동체 의견수렴 원조 역할강화 프로그램 연계 추진 공동체 활동을 통한 지역활성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지역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 컨설팅 및 자금 지원 마을기업 활성화 행사 개최 등	마을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사회적기업 등 지역공헌·비영리 단체 활용거점 지원, 성과 연계
지활센터	취약계층 자활기업 육성 전수리, 청소 등 사회공헌사업	전수리 재능 나눔, 마을청소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 연계 지원 지역공헌·비영리 단체 활용거점 지원 및 성과 연계
지방 도시공사	기초인프라 등 물리적 환경 개선 주거, 공원, 도시개발 등	생활인프라 등 물리적환경 개선사업을 경영재정 등으로 연계 임대주택 등에 대한 주거복지 프로그램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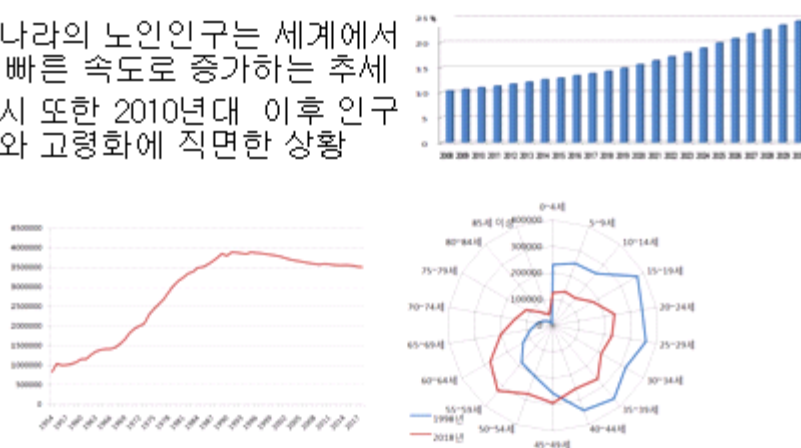
문화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사례

- 1990년 이후 약 30년 간 우리나라의 극장 수는 50% 가까이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 스크린 숫자는 3배 이상 증가함
-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의 멀티플렉스 진출을 계기로 영화산업계는 8배 가까운 폭발적인 매출액 증가를 달성
- 다양성 영화관(노인,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 상용관화와 멀티플렉스화를 추진하여야 함



고령화와 노인인구의 증가

-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
- 부산시 또한 2010년대 이후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한 상황



다양성 영화관의 현실 - 실버영화관

- 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극장은 417곳 스크린은 2575개
- 이 중 노인들이 찾을 수 있는 실버영화관은 10곳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이 광역시 인근에 위치

위치	극장명	비고
서울시 종로구	허리우드 클래식	사회적기업
서울시 종로구	남만극장	
서울시 중구	청춘극장	
서울시 마포구	시네마텍 KOFA	정부운영(실버영화관은 아님)
서울시 서초구	명작극장	
인천시 동구	추억극장 미림	
경기도 안산시	영화극장	
대구시 중구	그레이스 실버극장	
충청남도 천안시	남만극장	

다양성 영화관 활성화의 당위성

- 주류 대중문화에서 소외된 노인들에게 영화라는 친근한 문화 매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복지, 보편적 복지 실현
- 영화를 통한 정서적 안정 도모, 사회적 유대 강화를 꾀함
- 노인의 1년에 1회 이상 문화활동 경험율이 54.8%에 불과하고 문화활동내용은 영화관람이 47.1%로 가장 높음(서울시 고령 사회 마스터플랜)
- 노인은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풍부하므로 놀이문화에 대한 욕구가 강하나 환경과 생활여건, 경제적 제약 등으로 문화활동과 여가생활에 접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음
- 이들의 여가활동 대부분은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TV시청 등에 집중되어 있는 실태
- 이에 반해 이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

다양성 영화관 운영 사례 및 활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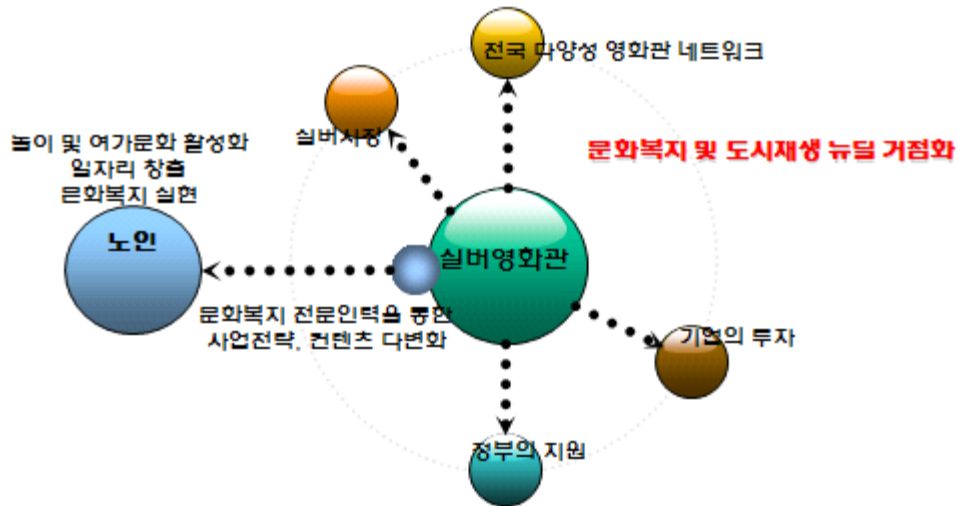
- 허리우드 클래식의 경우 꾸준히 관객 수가 증가

연도	관객 수
2009	65,000
2010	120,000
2011	150,000
2012	200,000
2013	230,000
2014	250,000

- 시네마테크 KOFA의 경우, 실버영화관이 아님에도 관객의 70% 이상을 노인들이 차지함(전좌석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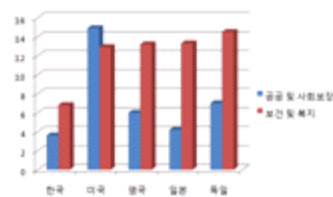
- 허리우드 클래식은 사회적기업으로서 30명 이상의 실버 일자리를 창출 중
- 사회적 기업으로서 SK 등 대기업의 투자를 받고 있음
- 허리우드 클래식이 위치한 종로에 노인문화벨트 형성(서울시 광역도시계획)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유경제(공공인프라 활용), 보편적 복지와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응용할 수 있음
- 문화복지 전문인력(사회서비스 일자리)이 부산시의 유휴 공공자산(토지, 건물)등을 가용 가능한 다양성 영화관으로 활용하도록 관리함

추진 목표



기대효과

- 공공/사회서비스별로 분산된 조직들이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통합되어 광역관리체계를 수립, 문화복지, 문화유산 교육 서비스를 제공
-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등에 기여
- 다양성 영화관(노인,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상품화를 통한 복지정책차별화 및 신성장동력 창출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통한 다양성 영화관 활성화

적극적 지원과 협력

(사회서비스 조직+머르산+국민+정부 및 기업)

친화적 여건

- 보편적 복지
- 사회의 다원화
- 도시재생 뉴딜

추진목표

- 놀이문화 활성화
- 문화복지 실현
- 일자리 창출

리스크 관리

- 재무타당성
- 수요의 유동성 확보
- 중장기 관리계획

유튜브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지역 모임의
자발적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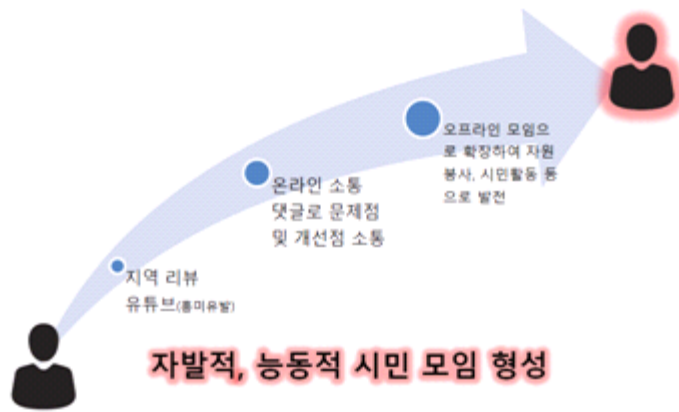
김성훈





SNS 소통 채널의 변화







지방자치 및 분권실현 정책제안 공모 '대학생 부문'

부산 광역시 장애인 셔틀버스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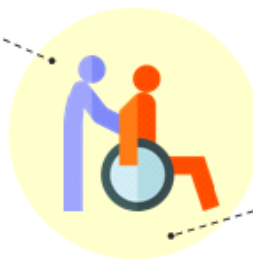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보건행정학과

김 아 름 · 박 재 우 · 윤 규 환 · 이 주 영 · 차 해 미

01.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의 수적 열세

장애인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사회에서 소외와 불편함이 빈번비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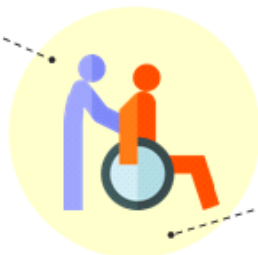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현황

오래 전부터 마련되어 있었으나 장애가 많은 것이 실정이다.

01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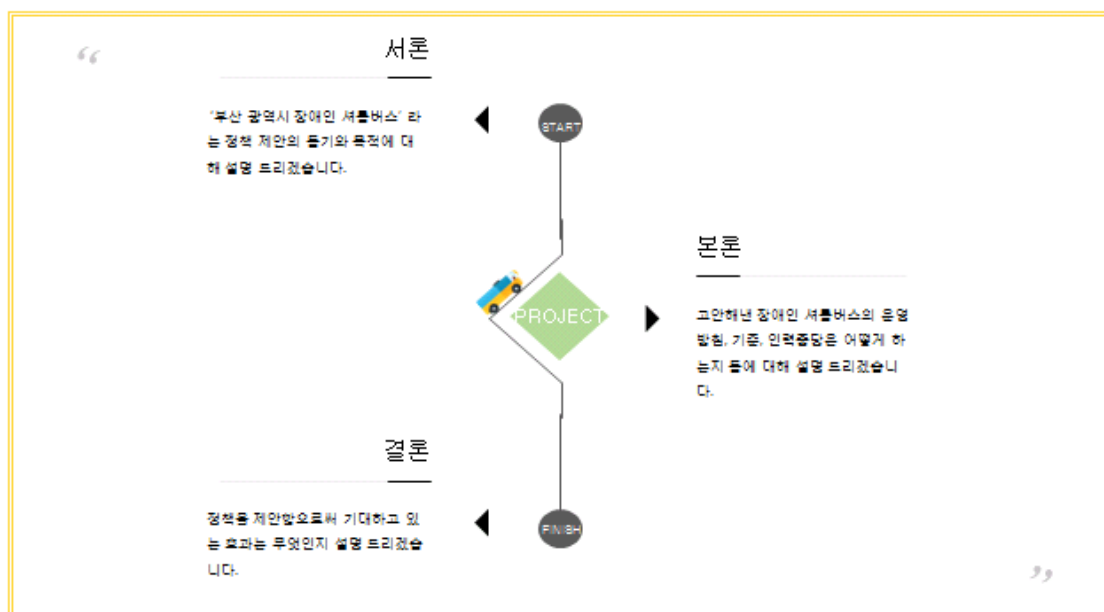
장애인의 수적 열세

장애인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사회에서 소외와 불편함이 비일비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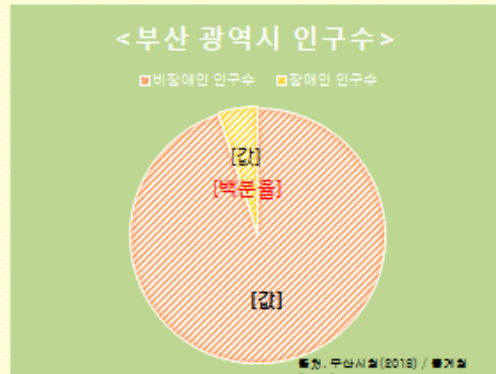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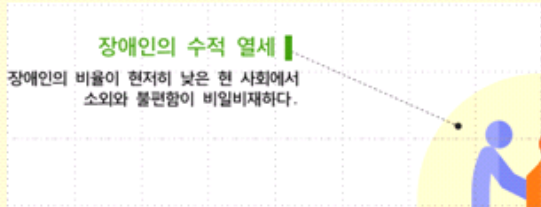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현황

오래 전부터 마련되어 있었으나 질음이 많은 것이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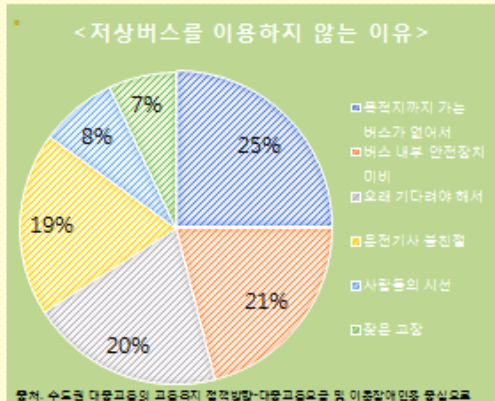


01 현황 및 문제점



부산광역시 전체 인구 수 중 장애인 인구수 비율은 약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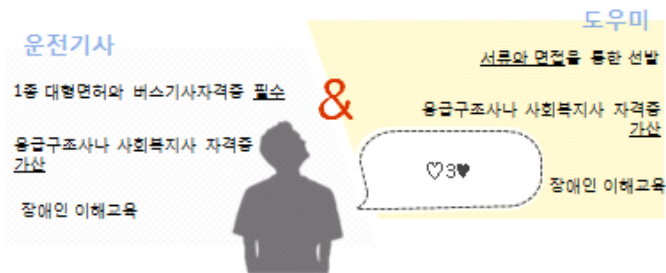
01 현황 및 문제점



02 정책제안 운영



02 정책제안 인력총원



02 정책제안 관련 편의시설



정류장
버스 안내판

: 버스 정류장 내 도착 정보를
디지털 안내판에 나타내어
비둘이나 청연의 터치방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인
교통카드 발급

: 장애인 복지카드와 연계하여
장애인의 교통카드를 발급,
이를 시 차등으로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버스
도착정보

: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여
정류장간 정보를 연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노선 정보를 제공한다.



03 기대효과

B-U-S 기존에 제기되었던 문제점

버스 내부 안전장치 미비
사람들의 시선
배차 간격
운전기사의 불친절

B-U-S 장애인 셔틀버스의 특징

장애인들의 이동권리 보장
개인정보 보호
일자리 창출
자방자치 강화
기존 장애인 대중교통의 이용객 분산

대학생 부문

지방자치 및 분권의 실현

: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심으로

정원석, 박채빈

CONTENTS

01

건강가정지원센터란?

소개, 역할, 현황

02

정책 발의

제안 내용
제안 실현방안
발생효과

03

제언 및 마무리

제언, QnA

선정 이유



국가가 가정 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기 시작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역사회역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 및 분권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

01

건강지원센터란?

소개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체계로서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제안 및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출처 : 건강가정지원센터

01

건강지원센터란? 역할



출처 : 건강가정지원센터

01

건강지원센터란? 현황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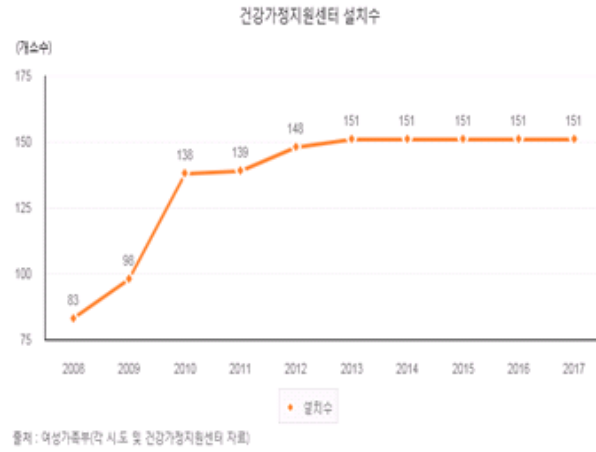
구분1	구분2	2010		
		사례수	들어본 적이 있다	들어본 적이 없다
전체	전체	4,754	20.2	79.8
성별	남자	2,368	20.2	79.8
	여자	2,386	20.3	79.7

응답자의 79.8% 들어본 적이 없다

출처 : 통계청

01

건강지원센터란? 현황



출처 : 통계청

01

건강지원센터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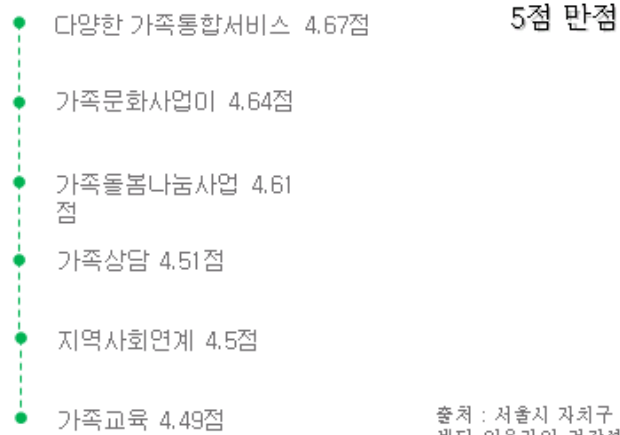
2015년 센터 가족교육사업 연간 참여인원은 약 50.2만 명

출처 : 건강가정지원센터

01

건강지원센터란? 현황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의 만족도 (서울시, 2013년)



출처 : 서울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의 건강성 및 프로그램 요구도 (한국가정관리학회, 2014)

02

정책발의 제안 내용

- 1 결손가정을 포함한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확충
- 2 시설 확충이나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위한 자원 확보
- 3 시설 홍보와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개선
- 4 취약계층에 한하여 프로그램 참여시 수당 지급
- 5 가정지원센터와 실제 현장과의 연계성 강화
- 6 남성의 가정지원센터 이용 독려
- 7 지역커뮤니티의 활성화 독려
- 8 지역사회의 공동육아 장려

1 결손가정을 포함한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확충

02

정책발의
제안 내용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들의 월평균 소득 (서울시,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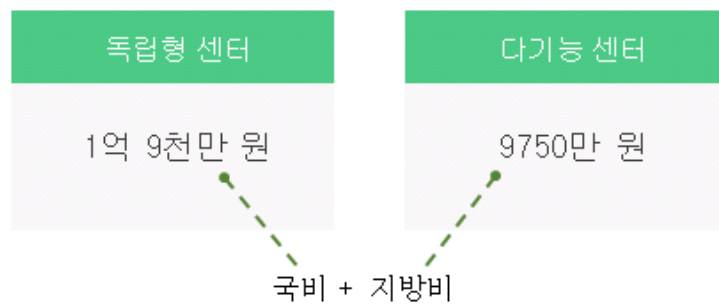
- 100만원 미만 : 2.0%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9.2%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9.4%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29.9%
-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20.1%
- 500만원 이상 : 20.1%

출처 : 서울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의 건강
성 및 프로그램 요구도 (한국가정관리학회, 2014)

2 시설 확충이나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위한 자원 확보

02

정책발의
제안 내용



출처 :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2018, 여성가족부)

3 시설 홍보와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개선

02

정책발의 제안 내용

(단위: 명, %)

구분1	구분2	2010		
		사례수	들어본 적이 있다	들어본 적이 없다
전체	전체	4,754	20.2	79.8
성별	남자	2,368	20.2	79.8
	여자	2,386	20.3	79.7

출처: 통계청

3 시설 홍보와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개선

02

정책발의 제안 내용

1. 홍보방법
 - 종교시설이나 어린이집 방문
2. 프로그램 참여 대한 이미지 제고
3. 전문상담사 영입
 - 전년도 이용자 142% 증가 (2012, 미천시)

“

미천시는 2012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문상담사를 영입, 가족상담실을 운영한 결과 이용자가 전년도에 비해 142%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

4 취약계층에 한하여 프로그램 참여시 수당 지급

02

정책발의
제안 내용



프로그램 참가수당, Payback 제도

5 가정지원센터와 실제 현장과의 연계성 강화

02

정책발의
제안 내용

아동학대 사례를 통한 제언

아동학대 발생시 아동학대 조사관이 아동학대
가해자(부모)를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에
참여 유도하거나 지역 커뮤니티로 연계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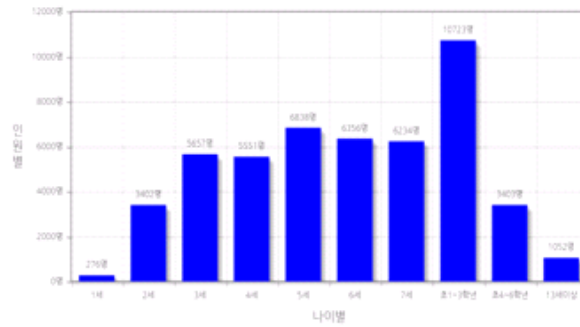


8 지역사회의 공동육아 장려

02

정책발의
제안 내용

연간 이용 아동연령현황(2014)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출처 : 건강가정지원센터

03

제언 및 마무리
제언



<대학생 부문>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한
주민참여 정책플랫폼 구축

2018년 10월 10일

김 지 완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¹⁾

김 정 훈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²⁾

1)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입지관 212호.
전화번호: 010-7632-1505 이메일주소: youandiboth@nate.com

목차

I. 서론

II. ‘주민참여 정책플랫폼’ 정책제안의 배경 및 목적

III. 주민정책참여 사례분석

IV. ‘주민참여 정책플랫폼’에 관한 정책제언

V. 결론

2)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219-15 the 조은 집 504호
전화번호: 010-5171-0640 이메일주소: lwj5038@naver.com

주민참여 정책플랫폼 주제 요약

1. 정책제안의 배경과 목적

정부는 지방경제 활성화 및 지방분권을 위한 법률개정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에서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경우,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에게 필요하고 알맞은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까?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부처, 국회, 이익집단, 관련기업 등은 자신들의 이익을 표출하는 다양한 수단을 확보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일반 주민들의 요구와 주장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제안은 지역 주민들이 능동적 주체가 되어 지역에 알맞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 정책플랫폼을 제안한다.

2. 주민참여 정책플랫폼의 개념 및 작동 절차

주민참여 정책플랫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의 정책수요를 수렴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집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본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주민들의 정책수요를 수렴하여 구체적인 정책안으로 발전시킨다.

① 정책수요 수렴단계

정책수요 수렴단계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수요를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수렴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주민들이 온·오프라인으로 개설된 정책수요 수용창구에 자신들의 수요를 표출하면, 이를 주민위원회가 취합한다. 취합된 비슷한 정책 수요들은 주민위원회가 주관하는 회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탄생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분석 단계

주민위원회를 통해 만들어진 정책대안은 이후 평가위원회를 거쳐 검증받게 된다. 이는 주민들이 제기한 의견에 전문성을 부여하고, 예산과 법률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진행된다. 이때 평가위원회는 전문가들, 실무적인 부분을 조정할 공무원들, 그리고 정책을 제안한 주민과 주민평가위원단으로 구성된다.

③ 정책집행 및 추후 관리 단계

평가위원회에서 채택된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가 되어 사업이 집행된다. 이때 해당 정책대안을 도출했던 평가위원회는 해체되지 않고, 해당 정책이 완료될 때 까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감독과 감사를 진행한다.

3. 예상 효과와 결론

본 제안이 지방자치제도에 잘 융화될 경우, 지방의 정책수요를 종래보다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지방정부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전문성과 현실성을 겸비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내실 있는 정책을 입안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로드맵이 잘

정착된다면 본 제안은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성을 한층 더 끌어올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I. 서론

지방분권이라는 말은 다소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헌법에 지방자치가 명시돼 있지만 각종 입법과 재정 등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부분이어서 실제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미미하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분권 개헌이 추진되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의 실현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지방정부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었다. 여야의 대화 불발로 개헌은 어려워졌지만, 정부는 헌법이 아닌 법률과 다양한 정부정책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주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진정한 의미의 분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궁극적인 지향점은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의 관계를 피라미드와 같은 관계에서 1:1의 수평적으로, 그리고 집단지성을 살릴 수 있도록 법 제도와 의사결정 과정을 구축하느냐다. 즉 협치적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가 분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해야 하는 것이다.

핵심 과제는 신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재정지출 권한의 조정, 경찰과 교육자치의 실현 등 하드웨어적인 분권 로드맵이 아니다. 의사결정 구조를 피라미드 구조에서 수평적 집단지성 구조로 바꾸는 것이 핵심 과제여야 한다. 지방과 중앙의 관계는 나라마다 다르며 정형화된 정답은 없다.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는 공동체 구성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정부와 국민의 거리를 좁혀야 하며, 수준별로 쉽게 접근하고 생활 이슈를 스스로 결정하는 협치로 나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분권형 사회를 만들게 될 것이며, 살 만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³⁾

이 글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시대를 위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정책플랫폼을 만들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아래에서는 현재까지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사이의 소통의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 대안으로 주민참여 정책플랫폼의 구체적인 형태를 제안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II. ‘주민참여 정책플랫폼’ 정책제안의 배경 및 목적

2018년 현재 정부는 지방경제 활성화 및 지방분권을 위한 법률 개정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에서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경우,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에게 필요하고 알맞은 정책을 펴고 시행할 수 있을까?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분권은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통제’가 없으면 지방권력화 될 것이며, 진정한 지방

3) 중앙일보, “[시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방분권화”, 2017.11.25.
<https://news.joins.com/article/22147912>, 접속일자: 2018.09.12.

분권을 위해서는 갖가지 주민참여 정책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⁴⁾

그간 정책결정과정은 소수의 정치엘리트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관료와 정치인들에 의한 정책결정 과정은 일반국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밑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일반국민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부처, 국회, 이익집단, 관련기업 등은 자신들의 이익을 표출하는 다양한 수단을 확보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일반시민들의 요구와 주장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특히 집단으로서의 참여 이외에 개인으로서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됨으로 인해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이익집단과 기업의 목소리만 반영되고 시민 및 주민 개인들의 주장과 이익이 대표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중앙정부보다 작은 지방정부의 경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이권에 있어 특혜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지난해 통영시의 경우 지자체 내에 외국기업의 호텔을 짓는 것에 편의를 봐주고, 시장과 시의원, 시청 고위간부 등이 특혜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런 일이 지금도 자행되는 이유는 지역주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이고, 하향식의 의사결정방식으로부터 생긴 폐단이라고 볼 수 있다.

다행인 것은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된 참여민주주의 그리고 21세기 인터넷 발전이 맞물려 제한적으로나마 주민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어 왔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는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정부의 책임을 강조한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을 선포하는 등, 국민의 정책참여가 실질적으로 가능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여전히 하향식의 정책결정 구조는 크게 변함이 없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원창구운영, 홈페이지에서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바란다, 중앙에서는 각 부별 홈페이지에서의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의지가 있지만, 작금의 환경은 단순히 시민 및 주민들의 민원을 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거나, 일정수의 찬성수가 나와야 담당 부서장이 대답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또한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 정보공개)은 오류나 갖가지 정보 불충분으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궁극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본 제안서는 주민참여 정책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면 그 장점으로 첫째, 정부의 민주성, 정통성 그리고 책임성의 강화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주민참여는 건강한 사회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증진을 가져와 사회구성원간의 신뢰와 협력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시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인해 시민들의 이익과 요구가 반영된 공공정책이 수립될 수 있으며, 이는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넷째, 시민참여의 과정을 통해 개인들의 정치의식과 정치사회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공동체와 사회발전의 역량이 강화된

4) 전북일보, “주민참여정책 활성화-‘매서운 시민의 눈으로’ 지방분권의 지방권력화 막아야” 2018.03.26.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102>, 접속일자: 2018.09.19.

다.⁵⁾

Ⅲ. 주민 정책참여 사례분석

1. 광역자치단체의 온라인을 통한 주민 정책참여 사례분석

1) 국내 광역자치단체의 정책과정별 온라인 참여채널 분석

앞서의 배경에서 언급했듯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사이의 소통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주민들의 정책참여수준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모형으로 정책과정을 의제설정, 정책분석, 정책형성, 정책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 등 5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단계에서의 참여수단을 16개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를 위한 분석모형은 문신용 교수의 논문을 참고하였다.⁶⁾

국내의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웹 사이트를 살펴보면, 정책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다음 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비교적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주민들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플랫폼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온라인 정책참여 채널과 활성화 정도에 대해 주요 도시별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

먼저 서울시의 경우 의제설정, 정책분석, 정책형성, 집행, 모니터링 다섯 단계 중 정책형성의 단계만을 제외하고 모두가 홈페이지의 구성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의제설정 단계에 해당하는 콘텐츠로는 자유게시판, 창작제안마당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활동이 활발한 편으로 볼 수 있다. 정책분석 단계로는 전문가 상담, 정책토론, 여론조사 등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고, 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형성단계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주민투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활성화 정도는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는 16개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중 유일하게 집행단계를 포함하는 ‘입법예고 시민의견’이라는 콘텐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 모니터링은 시민모니터를 통해 이뤄지는데,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시에서 의제설정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부산시에 바란다, 자유게시판이 있고, 활성화 정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정책분석에 해당하는 것은 정책토론방과 여론조사가 있지만, 정책토론방의 경우 최근 수 년 동안 토론활동, 참여가 많지 않아 그다지 활발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책형성과 집행에 해당되는 콘텐츠는 없고, 모니터링의 경우 모니터요원에 의한 모니터가 행해지고 있으며, 활성화 정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5) 윤성이, 「정책과정에서 온라인 시민참여의 제도화 방안」, 한국사회이론학회, (30), 2006, 190-191면.

6) 문신용, 「e-거버넌스와 시민들의 온라인 정책참여」, 한국지역정보학회지, 제12권 제2호, 2009.06, 69~70면.

7) 문신용, 상계논문, 72면.

광역자치단체의 대표적 온라인 정책참여 채널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구성 콘텐츠
서울시	정책토론폰방, 전문가상담, 자유게시판, 창작제안마당, 입법예고 시민의견, 여론조사, 웹동호회, 시민모니터
인천시	시민의 소리, 시민제안방, 시민불편 신고센터, 토론폰방, 설문조사, 이벤트, 블로그 및 카페
부산시	부산시에 바란다, 정책토론폰방, 혁신방, 제안공모, 여론조사, 모니터, 시민표창대상자추천, 카페, 자유게시판
대구시	정책참여, 시민여론, 정책모니터링시스템, 디카존, 자원봉사, 자유게시판, 동회회
울산시	울산시에 바란다, 신고센터, 자유게시판, 칭찬합시다, 정책토론폰방, 내년도 예산에 바란다
광주시	참여코너, 제안코너, 시민광고, 자원봉사, 사회단체제도, NGO 정보방, 설문조사, 빛고을 사이버공동체
대전시	시민단체, 시민토론, 설문조사, 시민제안, 시민모니터, 이웃사랑, 칭찬합시다, 자유게시판
강원도	자유게시판, 칭찬합시다, 홈페이지 개선사항, 정책마당, 웹진기자클럽, 출향도민회
제주도	제주도에 바란다, 칭찬합시다, 자유게시판, 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생활게시판, 민원제도개선, 정책제안방
경남	함께해요, NGO정보, 혁신분권, 도정모니터, 클린경남, 여론조사
경북	도민의 소리, 토론폰방, 도정혁신방, 여론조사, 도정참여, 모니터, 전문가 Q & A, 사이버교육, 특강/세미나, 민간단체/NGO, 블로그
전남	전남사랑, 마이페이지, 정보제공메일링, 주민참여광장, 행정혁신공유방, 행정심판정보
전북	업무혁신공유방, 도민참여공간, 나도헌마디, 알림마당, 공고/공시, 행정심판정보, 명예도민증,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충남	충청남도에서 바란다, 제안마당, 칭찬합시다, 자유게시판, 설문조사, 사이버토론폰방, 이벤트, 주민감사청구
충북	충청북도에서 바란다, 홈페이지 불편신고, 도민아이디어방, 도민공무원제안, 사이버정책토론, 도민예산참여방, 참여마당 신문고, 정책제안
경기도	도정참여 (정책토론폰방, 자유토론폰방, 도민제안, 경기넷모니터, 자유게시판, 설문조사)

2) 정책과정별 온라인 참여 활성화 분석

정책단계별 주민참여 채널의 활성화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의제설정단계에 있어서는 16개 시·도 모두 주민참여가 활발한 편이었다. 둘째, 정책분석 단계에서는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아직 활성화의 정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정책형성과 집행에 해당되는 콘텐츠는 없었다. 넷째, 정책모니터링과 평가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온라인 주민참여가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충남의 경우 271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위촉되어 실제로 활동하고 있었다.⁸⁾

위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실제로 참여채널은 존재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이 전혀 이용하고 있지 않거나 이용 빈도가 낮았으며, 정책형성이나 정책실행 단계의 경우 아예 참여채널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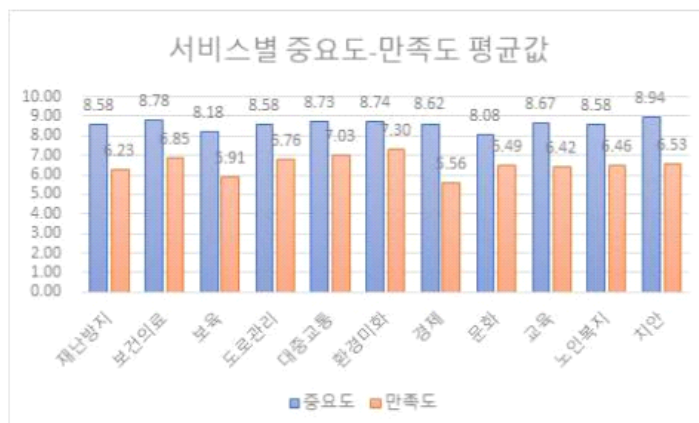
2. 기존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강혜진의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기대불일치가 주민들의 지역만족에 미치는 영향

8) 문신용, 전계논문, 77면.

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면 주민들의 지방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유의미한 측정치를 구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국내의 다양한 시, 군, 구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⁹⁾

〈그림 2〉 서비스 영역별 중요도-만족도
 〈Figure 2〉 Comparison of Importance-Satisfaction by Service Type



본 표를 분석하면, 한 눈에 봐도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기대치 (혹은 중요도)에 만족도가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구성원 규모가 작은 지방정부가 가지는 강점인 수요 파악이 용이하다는 점이, 실제로는 강점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왜 이런 일이 야기되는 것일까? 이는 민원을 수렴하는 창구의 수가 문제가 아닌 민원창구의 질적인 부분의 문제이다. 즉 민원 수렴하는 창구 자체가 민의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오직 방어적인 행정을 수행해왔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을 실현시킨다 한들, 지방에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펴지 못한다면 이는 올바른 지방분권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IV. ‘주민참여 정책플랫폼’에 관한 정책제언

1. 주민참여 정책플랫폼의 개념

주민참여 정책플랫폼이란, 여타 다른 기업이 신제품이나, 제품의 피드백을 받을 때 사용하는 포럼(forum)을 보면 그 개념을 명확히 정립할 수 있다.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생산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기업은 신제품을 출시할 때, 소비자 집단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매개체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몇 가지 시행착오 끝에 기업들은 Forum 이라는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

9) 강혜진,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기대불일치가 주민들의 지역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52(2), 2018, 80-81면.

류하고,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형성된 피드백을 기업의 중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기업은 신제품 개발을 소비자의 기호에 더욱 맞춰서 행할 수 있었고, 이는 매출의 증가로 이어졌다. 즉, 플랫폼이란 소비자 및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공급자에게 전달하여 공급자들이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게 할 수 있는, ‘쌍방향적 소통 창구’ 라고 정의할 수 있다.

플랫폼의 탄생 이래로, 이 개념은 전 사회를 관통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전술한 생산자들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신제품의 청사진을 그려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서비스 개발자들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게 자신들의 시스템을 개선시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플랫폼’이라는 시스템은 사적부문의 시장 패러다임을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고를 조금 더 확장해 보아야 한다. 과연 사적부문에 활기를 준 이 플랫폼이라는 시스템과 지방분권이 결합하면 어떠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이다. 즉, 지방에서 행하는 정책을 종래의 상명하달 식에서, 주민들의 수요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지방정부 실패’가 발생할 확률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본 정책 제안서는 지방주민들의 수요를 정책기획에 적극 수용하여, ‘지방정부 실패’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지방분권을 실현 할, ‘주민참여 정책 플랫폼’을 제안하는 바이다.

주민참여 정책 플랫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자면 ‘지방정부가 지방주민들의 의견과 수요를 플랫폼을 통해서 수렴하고, 이를 적절하게 집적시킨 뒤 정책수립과 디자인에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본 주민참여 플랫폼의 핵심 개념이다.

2. 플랫폼의 구체적인 작동방향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민참여 플랫폼은 결국 주민들의 의견을 지방정부에 효율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당 플랫폼이 작동되는지에 대해, 각각 정책수요 수렴단계, 평가위원회의 분석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대안 완성 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또는 추후 관리를 통한 실현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고자 한다.

1) 정책수요 수렴단계

주민들의 의견을 플랫폼에 올려 정책집행 단계로 승차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수요들을 파악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수렴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본 단계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정책수요는, 구체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한 형태를 갖추지는 않는다. 영도구의 교통체증 현상을 예로 들어보자. 영도나 영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분명 ‘영도의 교통체증 해결’이라는 정책수요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정책수요들이 구체적인 해결안과 함께 제시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자신의 정책 수요를 지방자치단체에 관철시키지 않는 주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수요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주민참여 정책 플랫폼의 첫 번째 역할이다. 즉, 주민들이 자신들이 가진 불편사항을 게시할 수 있는 온, 오프라

인 창구를 개설하여, 앞서 언급한 부유하는 정책수요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수요들을 파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를 하나의 정책대안으로 수렴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이는 ‘주민위원회’를 통해서 이행될 수 있다. 여기서 언급된 주민위원회는 앞에서 언급한 온·오프라인 창구를 운영하는 단체로, 파악된 수요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는 역할을 한다. 영도 주민들이 가진 교통체증에 대한 정책수요를, 신 영도대교 건설로 구체화 시키는 작업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위원회의 구성이다. 우선 정책 수요를 표출했던 주민들 중 정책수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이 이 위원회 구성의 한 축을 담당한다. 여기에 표출된 수요를 좀 더 구체적인 제안으로 다듬을 수 있게끔 온·오프라인으로 회의를 주최하고 진행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이는 소규모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즉, 해당 지역의 문제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인식을 가진 주민조직과 정책제안자들의 회의를 통해, 정책수요를 정책대안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이로써 정책수요는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가진 정책대안으로 변모함으로써, 집행으로 갈 수 있는 주민참여 정책 플랫폼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정책제안이 실현가능성을 갖추지 못하면 이는 유효한 제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주민참여 정책 플랫폼에 진입한 정책 제안들도 실현가능성을 평가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 단계인 평가위원회의 분석을 거쳐야 한다.

2) 평가위원회의 분석 단계

정책수요 수렴단계에서 활용했던 소규모 주민위원회가 주민들의 정책 표출을 위한 창구로써 기능했다면, 평가위원회는 그러한 창구를 통해 수렴된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조사하는 기능을 한다. 수렴된 정책이 현재 배정된 예산안 내에서 실현가능한지, 혹은 중앙에 문의했을 경우 예산을 추후에 배정받을 수 있을지와 같은, 좀 더 법률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가 오고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주민위원회보다 전문성을 더 갖춰야 한다. 한 단체에 전문성을 부여하는 데에는 다수의 방안이 있으나, 본 정책 제안서에서는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원들의 구성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해당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인원 구성으로 조직하고자 한다.

우선, 전체 구성원을 100 %으로 볼 때, 정책을 제안했던 주민들에게서 차출한 인원으로 이뤄진 주민정책 제안단에게 20%의 의석을 배정한다. 이들은 평가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들이 제안했던 정책대안을 어필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집단은, 정책 제안단의 제안 사항을 면밀히 분석할 전문가 집단으로, 위원회 의석의 30 %를 배정한다. 이들은 해당 지역의 대학 교수들 그리고 제안된 현안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이뤄진 인력풀(pool)에서 차출하며, 차출할 인력은 제안된 정책 의제에 따라 결정한다. 이는 평가의 전문성을 더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세 번째 집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베테랑 공무원들로 이뤄진 집단으로, 위원회 의석의 20 %를 차지한다. 제안된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현재 배정된 예산

과 현행법을 기반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예산 상황과 현행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행정직 5급 또는 행정직 6급의 팀장급 공무원들 중에서 해당 정책 사안과 연관되는 부서의 인원들로 차출하도록 한다.

앞에서 언급된 세 집단 이외에, 정책 제안을 했던 인원들을 제외한 일반 주민으로 이뤄진, 주민평가단에게 30 %의 의석을 배정해야 한다. 이들은 서구권에서 현행되고 있는 배심원 제도와 유사하게, 제안된 정책 및 사안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집단으로, 정책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표시를 통해 정책에 민주적 대표성을 부여해주는 집단이다. 주민평가단은 전체 의석의 30 %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집단이기에, 이들을 위원회에 참가시킬 때 확보해야 하는 것은 공정성이다. 따라서 이들은 평가위원회가 개최할 때, 주민평가단 참가 공고를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게재하여 모집하도록 한다. 이때 평가 대상인 정책 제안은 비공개로 한다. 이는 평가대상 정책이 공개될 경우, 해당 정책에 연관된 이익집단들이 관여되어, 평가위원회의 절반(주민 정책 제안단 20 % + 주민 정책 평가단 30 %)을 확보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묵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가위원회 정복 사태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장치로써, 참가신청자가 정원을 넘어설 경우에는, 참가인원 중에서 이익단체 인원들을 후순위로 하는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는 제도가 성립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위에서 전개한 구성원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다음과 같이 도표로 정리할 수 있다.

구성원	배정 의석 비율 (%)
주민 정책 제안단	20
주민 정책 평가단	30
전문가 평가단	30
베테랑 공무원단	20

이와 같은 구성비로 위에서 언급한 안전장치가 잘 작동한다면 주민 정책 제안단은 자신들이 관철하고자 하는 정책을 잘 어필하여, 평가위원회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해당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투명한 추첨과정과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평가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는 정책 결정 메커니즘은, 전문성이 결여된 내실 없는 정책을 집행부가 시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중 안전장치로 기능한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추진한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직접 관리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관설민영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마을공동체 사업이 일반 주민의 공동체성을 회복시키고 복원하려는 사업인가 아니면, 일부 시민사회단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개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논란이 있다. 또한 마을 주민 3명이 모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임이 사업계획서를 내면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 자칫 일부 특정집단의 용돈벌이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¹⁰⁾ 이러한 우려

10) 양세훈, [바람직한 마을사업 공모 제도와 정책제안] “마을공동체 업무·예산 자치구에 일임하자.” 월

가 발생한 것은 일부 주민들만의 의견을 맹종한 결과로 사료되며, 앞에서 언급한 이중 안전장치는 이러한 역효과를 방지할 것이다.

이때 전문가들과 공무원단은 자신들의 전문 분야에 부합하는 분과위원회에 배치되는데, 분과위원회에는 크게 도시계획·건설 분과위원회, 기획조정 분과위원회, 사회복지 분과위원회, 지역경제활성화 분과위원회로 나뉜다. 주민 정책 평가단은 무작위로 배치된다. 주민들이 제출한 정책 제안은 주민참여 정책플랫폼 담당 공무원에 의해 가장 적합한 분과위원회가 선정된다. 이후 그 분과위원회를 대상으로 주민 정책 제안단은 자신들의 정책 수요를 지속적으로 관철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예산 건적과 구체적인 사업 안이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최종안은 평가위원회의 투표를 거쳐서 과반 수 이상의 통과를 얻은 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에 제출될 준비를 마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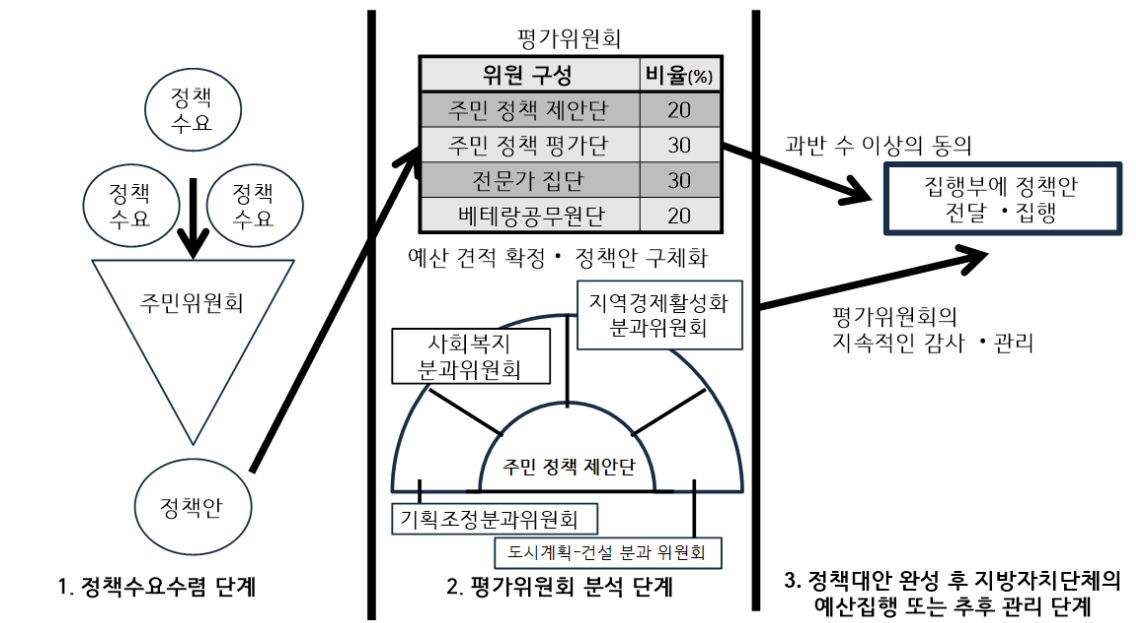
본 평가 과정은 전문가들과 공무원단의 시각에서는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정책이, 주민정책 평가단과 주민정책 제안단의 합작으로 인해 통과되는 불상사를 막아줄 것이다. 현실 구현가능성을 겸한 의견 개진 과정을 통해, 주민정책 제안단이 요구했던 사항은 사업 건적 확보와 예산 확보 방안이 더해져,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만 되면 집행이 가능할 단계까지 구체화시킬 수 있다. 이런 단계에 이를 때까지 평가위원회 내에서 각 집단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개선하는 과정은 지속된다. 본 메커니즘을 통해 정책플랫폼은, 최종적으로 도출된 정책대안이 초기에 제안된 정책대안의 방향과 상이한 모습을 띄게 되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다.

3) 정책대안 완성 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또는 추후 관리 단계

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정책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에 전달된다. 이미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예산안임이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증명되었기에, 집행부는 정책대안을 그대로 집행을 하면 된다. 집행을 한 이후에는 지속적인 추후 관리가 필요하다. 이는 해당 정책을 통과시킨 평가위원회에 의해서 평가되며,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의 방향을 변경할 것을 결의할 경우 집행부는 이에 따라 정책을 변경하도록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주민참여 정책 플랫폼이란, ‘정책 수요를 온·오프라인 소규모 주민조직을 통해서 정책안으로 수렴하고, 이에 평가위원회의 분석을 통해 얻어지는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에 넘기는 총 과정’을 의미한다. 특히 본 정책은 평가위원회가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서 정복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제안된 정책에 대해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예산 건적과 의견을 개선할 수 있는 전문 인력풀을 운용한다는 점에서 종래에 운영되었던 여타 주민참여 채널과 차별화된다. 위의 전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간 주민자치, 2013, 31면.



3. 효과

주민참여 정책플랫폼이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내실화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지방정부 지역주민의 정책수요를 종래의 정책결정 과정보다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주민조직을 통한 정책수요를 수렴하는 과정은, 기존에 해당 안건에 관련된 주민단체만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민주정의 모습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시민단체가 가세하지 않은 온·오프라인 상의 개인 정책 수요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본 정책이 시행될 경우, 일반 군소 주민단체의 민의도 정책 수요 파악 창구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기에, 훨씬 지방자치 완성에 가깝게 정책 결정 과정을 변화시킬 것이다.

또한 주민참여 정책 플랫폼을 통한 정책결정은 정책제안 및 결정 집단과 이해집단이 가까워 집단 지성을 통해서 기존에 소수 엘리트 조직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지방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기존의 전통적 관료제에서의 의사결정 구조인 피라미드 형태가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의견과 의사결정의 병목현상이 발생해 시간 지연과 잘못된 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오히려 컸다. ‘집단 지성’이라는 용어의 창시자인 P. 레비는 “소련과 같은 전체주의 체제의 몰락은 그 사회가 지닌 역량의 유동적·협동적 수행이라는 새로운 형태에 부닥쳐 좌초했다고 볼 수 있다. 전체주의는 집단지성을 구축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집단 지성은 이러한 병목현상을 제거하고, 정책결정자간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여 소수 엘리트주의가 정책 수요를 어설프게 수용하고 충족하는 일종의 관료제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¹¹⁾

이외에도 주민참여에 의한 정책플랫폼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로는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 갈등해소와 사회통합, 정책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역량의 강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¹²⁾

V. 결론

현 정부의 기조가 유지되는 한 지방분권은 이제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며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에 자리 잡은 하향식의 의사결정 구조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을 방해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 정책플랫폼의 도입은 주민들의 필요를 적절히 파악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시스템으로서 지방분권시대를 이끌 것이다.

위에서 제안한 정책플랫폼은 정책수요 수렴단계, 평가위원회의 분석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대안 완성 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또는 추후 관리를 통한 실현단계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 과정을 통해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쌍방향적이고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지역에 가장 필요한 정책이 집행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플랫폼이 지방정부에 자리 잡게 될 때, 지방정부는 더 투명한 주민참여 민주주의를 이룩하게 될 것이며, 그간 지방정부와 주민 사이에 존재하던 갈등이 해소되어 사회적 통합을 완성해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의 정책수요를 종래의 정책결정 과정보다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를 통한 객관적인 정책결정이 가능하여 정책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이외에도 소수 엘리트 조직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지역의 문제들을 집단지성을 이용하여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민참여 정책플랫폼을 통한 혁신적인 정책기획 및 집행과정의 변화는, 지역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11)중앙일보, “[시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방분권화”, 2017.11.25.
<https://news.joins.com/article/22147912>, 접속일자: 2018.09.12.

12)윤성이, 「정책과정에서 온라인 시민참여의 제도화 방안」, 한국사회이론학회, (30), 2006, 190-191면.

참고 문헌

문신용, 「e-거버넌스와 시민들의 온라인 정책참여」, 한국지역정보학회지 제12권 제2호, 2009. 06.

강혜진,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기대불일치가 주민들의 지역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52(2), 2018, 67-99면.

양세훈, [바람직한 마을사업 공모 제도와 정책제안] “마을공동체 업무·예산 자치구에 일임하자.” 월간 주민자치, 2013, 31면.

윤성이, 「정책과정에서 온라인 시민참여의 제도화 방안」, 한국사회이론학회, (30), 2006, 187-211면.

김경수/김형빈,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격차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1), 2006, 129-149면.

김정훈, 「한국 지방공공재 수요의 이론모형과 인구탄력성 추정」, 한국조세연구원, 2011, 제 4~5장.

춘천 행복한 시민정부 준비위원회, 『행복한 시민정부 준비위원회·활동결과 보고서』, 춘천시청, 2018. 09.

민관 협력 중심인 지방자치단체 공공후견프로그램 제언

1. 문제점 및 현황

현행 법제도 하에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용어를 없애고 후견제도를 도입함. 치매 환자나 장애인 등에게 후견인을 연결해 의사결정과 사무 처리, 재산 관리를 돕도록 해 피후견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현재 성년후견 신청건수는 7000건에 가까워지고 있는 등 한국사회에 제도 정착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후견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제도 도입 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들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후견인의 피후견인 재산관리 문제라고 할 수 있음. 후견인이 만약 피후견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임의로 재산을 처분, 관리하는 등 후견 사각지대의 피해 문제가 속출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서는 후견감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후견감독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

근본적인 문제는 후견감독을 상시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임. 민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제940조의4(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은 필수적인 것이 아닌 임의적으로 선임하는 제도임. 따라서 성년후견 감독 시스템이 상시적으로 후견인을 감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물론 후견 보고서 등 후견인이 사후적으로 감독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문서에 의존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 조차도 한계가 있음.

실무적으로 후견센터 마련이나 조사관등이 확충되고 있지만¹³⁾ 매년 수천 명씩 확충하는 후견 신청 증가 현실을 고려할 때 공공부조로는 내재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특히 지방자치단체같은 경우 2018.9.20.부터 개정된 치매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하지만 수요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공공후견사업에 필요한 조직이나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될 것이 예상됨.

결국 ① 지역사회 후견사각지대에 대한 문제 ② 후견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지역사회 후견 복지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후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후견 복지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민간에 제공하려면 공공부조만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민관협력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본 제언은 해외의 공공후견 민관협력 사례를 살펴보고 해당 사례를 국내의 지방자치단체에 도입, 적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공공후견 사업에 대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함.

II. 후견감독 해외사례 연구

1. 개요

후견감독에서 본 제언이 주목한 해외사례는 미국임. 미국은 자원봉사 시스템을 활용해 후견감독에 있어 민관협력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2. 뉴저지의 주의 후견감독 시스템(Guardianship Monitoring System, GMS)

뉴저지 주는 2013년부터 주 정부의 후견감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웹 기반의 컴퓨터 어플리케이션인 GMS(Guardianship Monitoring System)를 운영함. 해당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들이 후견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각종 목록이나 정기적 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됨. 법원은 GMS에 입력된 정보를 이용하여 후견인을

13) 서울가정법원은 이달부터 후견센터를 마련하고, 7명의 조사관 및 참여관이 후견감독 실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신상후견감독을 행기는 사회복지사 24명, 회계와 세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전문후견감독위원 42명 등을 위촉했다. 후견 사건 담당 재판부도 기존의 2부에서 3부로 늘렸다. 하지만 매년 수천 명의 후견사무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봐야 하는 후견감독 사건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한겨레, 누가 치매노인을 두 번 울리나...후견 사각지대를 찾아라, 2017.07.10

계속하여 감독하고 정기 보고 서의 접수를 확인하며 후견인과 연락하고 후견과 관련한 문제들을 분석할 수 있음. 법원에서 요구한 특정 사항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거나 보고서 검토 결과 후 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은 주의사건으로 표시되거나 (flagged)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의 검토가 필요한 등급의 사건이 되는 2단계 구조를 가진 프로그램임.

이러한 자원봉사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자질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해당 자원봉사 시스템의 봉사자가 되려면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고, 지문 등록과 신원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원봉사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수락하고 준수하여야 함. 자원봉사자들은 유언검인판사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소 1년 동안은 해당 봉사활동을 지속할 것이 요구됨.¹⁴⁾

3. 아이다호 애이더(Ada) 카운티 자원봉사 후견감독 프로그램

위의 프로그램이 일반인 중심 프로그램이라면 해당 주의 프로그램은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는 후견감독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음. 미국은퇴자협회(AARP)가 중심이 되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후견감독 시스템을 민간 자원봉사로 운영함. 현재 해당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44명의 자원봉사자가 약 1,400건의 후견사건을 담당하는 정도 되었음. 자원봉사자들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에 의해 임의로 선정된 피후견인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연간 약 600건의 회계보고서에 대한 기초적인 감사를 수행,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는 사건의 경우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요청을 하는 내용이 중심이 됨. 가장 큰 성공 점은 연간 정례보고서 제출 의무 이행비율을 90%까지 높이는 데 일조했다는 것임.

여기에 법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하나의 성공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아이다호 애이더 카운티 법원은 자원봉사자들이 적절한 회계감사, 사건 검토, 후견인 및 피후견인 방문, 법원에 대한 조사보고서 제출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폭 넓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3. 텍사스 타런트(Tarrant) 카운티 제1유언검인법원(probate court no.1)의 자원봉사 방문조사관 프로그램

14) 자원봉사자들은 일정 수준의 컴퓨터 활용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기본적인 회계서류를 읽고 이해할 정도의 경험이나 관심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회복지학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음. 사회복지학 학생들은 해당 프로그램은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참여해 피후견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함.

자원봉사자의 활동 초기에는 후견 절차, 피후견인의 권리, 의사소통 기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후견인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 공식적으로 방문조사를 수행하는 방법, 후견감독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 후견인과 피후견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용한 정보, 즉 장애, 커뮤니티, 지역 사회의 서비스 등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짐. 이를 통해 단순히 후견감독 인턴십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이 분야 사회복지로 진로교육도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2006년에는 텍사스 타런트 카운티 제1유언검인법원의 자원봉사자들이 연간 3,827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당시 시간당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위 법원의 자원봉사자들이 2006년 한 해 동안 71,000달러가 넘는 재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보고가 됨. 이는 학생들의 진로교육, 실무수습, 정부의 복지예산 건전성을 살린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음.

4. 매사추세츠 주 변호사 자원봉사 프로젝트의 활용

해당 프로그램은 전문직 법률가들의 역량을 활용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특징임. 보스턴 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자원봉사 프로젝트인 ‘Senior Partners for Justice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봉사 변호사들이 후견사건의 최초 후견계획서와 연간 정기보고서를 검토함.

여기에서 자원봉사 변호사들의 역할은 후견인이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후견의 적절성, 후견인의 후견사무, 피후견인의 상태에 대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주의를 촉구함.

자원봉사 변호사들은 사전에 계획된 개별 시간대(예를 들어 오전이나 오후 중 3시간)에 봉사활동으로서 후견감독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업무 일정은 유연 하게 정할 수 있다는 점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부담을 더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자원봉사 변호사가 처음으로 후견감독사무를 맡게 된 경우에는 후견감독사무에 익숙한 자원봉사 변호사를 파트너 자원봉사 변호사로 하여 함께 일 하도록 추천해 자연스럽게 실무에 대한 교육을 사수를 통해 진행하고 있음.

5. 소결

미국의 후견감독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법원에서 하지 못하는 업무들을 민관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줌. 거기에 더불어 은퇴자협회나 변호사협회와 협력해 비영리 단체로 운영하는 주도 있음. 성년후견제도에 투입될 수 있는 법원이나 지자체의 인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이때 후견 제도의 사각지대는 계속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미국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민간의 참여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음.

Ⅲ. 민관 협력 자원봉사 연계 후견감독 프로그램 제언

1. 개요

공공후견 프로그램에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지원 - 자원봉사 체계로 간다면 공공후견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은 더 많아지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 본 제언에서는 일반인 후견 자원봉사와 지역 법률가 자원봉사 두가지 프로그램을 제언하고자 함.

2. 일반인 후견 자원봉사

〈그림 1〉 일반인 후견 자원봉사 프로세스



출처 : 저자 작성

1) 일반 프로세스

일반인 후견 자원봉사 프로세스는 일반인이 자원봉사 신청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과 연계해 후견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감독하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음.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일반인이 자원봉사자를 신청하면 해당 지역의 공공후견센터에서 후견사무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이수함. 일정 교육을 마친 일반인은 해당 지역을 방문해 후견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필드에서 확인 한 후 미심적인 점이 있으면 1차적으로는 동사무소 내의 공공후견 담당 공무원에게, 2차적으로는 법원의 전문 후견인에게 보고를 해 후견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독함.

2) 일반인 프로그램의 방식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방식은 각 분야에 있는 주체마다 그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 이를 세부적으로 논해보고자 함.

(1) 일반 시민

자원봉사를 위한 시민들이 해당이 될 수 있음. 무엇보다 이들의 자원봉사 내용은 직장 내에서 할 수 있고 야간에도 집에서 봉사 할 수 있는 문서검토가 주가 될 수 있음. 또한 후견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이상 신분이 보장되고 컴퓨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이들이 해당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주체가 됨

(2) 해당 지역 대학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고령화에 이어 사회복지도 노인 돌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후견에 대한 전문 사회복지사를 충원하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음. 이들은 인턴십 또는 학점 인정제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유인기제를 제공해야 함. 또한 사회복지학을 전문적으로 전공한 이들이기 때문에 집에 직접 방문에 후견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살피는 역할을 함.

(3) 지방거점 국립 로스쿨 대학원생

후견이라는 제도가 법적 보호인 측면이 있는 만큼 현재 로스쿨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무수습에 후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을 통해 로스쿨생이 참여할 수 있는 후견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현재 후견에 관심 있고 이 분야 전문 변호사를 꿈꾸는 로스쿨생 같은 경우 매력적인 실무수습 방안이 될 수 있고 해당 프로그램에 로스쿨생이 참여하게 된다면 이후 트랙인 법률가 전문 트랙에 있어도 예비 전문가를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3) 유인기제 제공

일반인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무형 유인기제 검토가 필수적 사항이라고 봄. 이러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끝나는 날 감사회를 필수적으로 개최하고 감사장, 표창장등을 수여해 이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과정이 필요함. 또한 이전 자원봉사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인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

또한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수의 교육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일반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함. 매뉴얼과 강의 중 실무적 요구가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온라인 강의로 대체해 자원봉사자들이 편하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줄 필요가 있음.

2. 법률가 후견 자원봉사 프로세스

1) 개요

법률가 후견 자원봉사 프로세스는 변호사 및 법률관련 전문인이 주체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음. 이들도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뒤 후견보고서를 검토하고 법원에 피드백을 진행하는 것이 주체라고 할 수 있음.

2) 법률가 프로그램 방식

(1) 일반 변호사 및 법률 종사자

이들은 개인적으로 자원봉사를 실시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음.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만큼 유연성이나 지역 특화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필요하다면 이들을 명예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하고 위의 일반 프로그램 대상자들의 감독관이 되는 역할도 검토할 수 있음.

(2) 지역 로펌 CSR 측면

로펌같은 경우 CSR 측면에서 해당 후견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특히 후견 자원봉사에 전문적으로 참여하는 로펌같은 경우 후견 전문 로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로펌이 협력하는 정책적 연계도 검토할 수 있음.

3) 유인기제 제공 방법

매년 변호사 활동 필수 공익시간에 해당 후견 자원봉사 시간이 포함될 수 있게 해당 지역 변호사협회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또한 로펌같은 경우 후견을 전문적으로 하는 로펌이 생겨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지역 후견사건의 대리를 맡기거나 일정 국가 후견사무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충분히 변호사나 로펌이 해당 로펌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기제를 제공한다고 봄.

IV. 기대효과

해당 프로그램 제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세가지임.

첫째, 예산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 해외사례를 보듯이 텍사스 제1유언검인법원의 자원봉사자들이 연간 3,827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당시 시간당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위 법원의 자원봉사자들이 2006년 한 해 동안 71,000달러가 넘는 재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확인됨. 후견사무에 대한 민관협력 정책을 제시한다면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지 않아도 후견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공약이 될 수 있음.

둘째, 주민자치가 활성화 된 정책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음. 지방자치의 가장 큰 요건은 주민의 참여성이라고 할 수 있음. 공공후견사업이 단순히 공무원들과 사업을 위탁받은 업체가 벌이는 복지사업이 아닌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화한다면 후견을 필요로 하는 지역 약자들과 지역주민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해지고 복지를 직접 지역주민들이 집행하는 주체로 활동해 예산의 효율적, 민주적 집행이 가능해짐.

셋째, 지역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짐. 지역 대학가와 연계한 후견 프로그램은 지역학교를 졸업한 사회복지사 채용연계가 가능하게 하고 이는 지역 공공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음. 또한 지역 로펌이 해당 지역의 후견사무를 대리하면서 법조시장 구축이 가능해지고 이는 지역사회에 법률가들이 유입되는 유인기제를 제공할 수 있음.

현재 공공후견사업은 후견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비교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을 불러올 수 있음. 하지만 위기는 또다른 기회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후견사업을 민관이 협력하는 주민 공동체 복지로 재탄생 시킨다면 주민자치의 새 지평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또한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활용한 복지사업을 성공시킨다면 더 이상 복지영역이 국가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위탁한다는 프레임을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복지정책을 세우고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다는 사례가 될 수 있음.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논리를 제 공함. 직접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건전성을 살리고 간접적으로는 주민참여와 지역 일자리를 창조하는 민관이 협력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후견프로그램이 되길 기 대함.

참고문헌

메디컬월드뉴스, 9월 20일부터 치매공공후견제도 본격 시행... 치매공공후견사업도 시작, 2018.09.12.

머니투데이, 공공후견제도 시행...노인일자리사업과도 연계, 2018.09.11.

파이낸셜 뉴스, 올해 9월부터 지자체서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실시, 2018.04.13

한겨레, 누가 치매노인을 두 번 울리나...후견 사각지대를 찾아라, 2017.07.10.

박민제 기자, <후견인이 역대 상속 재산 빼돌린 뒤 0.6평 요양원 방에 피후견인 방 치>, 중앙SUNDAY, 2017. 8. 27.

현소은 기자, <누가 치매노인을 두 번 울리나...후견 사각지대를 찾아라>, 한겨레, 2017. 10. 10.

김윤정,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7.

구상엽,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연구 - 입법 배경, 입법자의 의사 및 향 후 과 제 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12.

대법원 법원행정처, 성년후견제도 해설, 경성문화사, 2013.

제철웅, 캐나다 브리티시 컬롬비아주의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사법상의 권리 실현 보장체계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21(4), 2014.

조형석,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내실화 방안”,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공청회, 국가인권위원회, 2013.

최수정, “고령사회에서 성년후견제도와 실태”, 법조 통권 제702호, 2015.

외국문헌

Ellen M. Klem, “Volunteer Guardianship Monitoring Program: A Win-Win Solution”, AARP (2007).

지방자치 분권실현 정책제안 공모 '대학생부문'

<지방분권의 선행조건 : 강원도를 중심으로 분석>

<공모전 참가자>

이제호 :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179-19 203호

ehrtjdlwpgh@naver.com

01072967114

이지민 :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15-4 202호

jimin4308@naver.com

01027380909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이제호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이지민

<주제 요약>

한국은 군사정부 시절에 자본주의를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임으로써,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경부 축을 중심으로 한 집중 투자와 분배 정책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효과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내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더하여 정치인들의 이합집산과 소수를 위한 정책의 개발은 정치에 대한 실망감을 주어, 결국 '정치적 무관심'을 야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무관심은 소통의 부재를 불러 일으켜 지방이 다시 도약하는 것에 큰 제한이 되었고, 이를 인지한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뉴딜정책'과 같은 지방 지원 정책을 통과시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뉴딜 정책'은 지방 분권 정책으로서는 효과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기엔 한계점이 많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효과적인 지방 분권을 위하여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강원도의 정책을 제시 할 것이다.

강원도는 위치상 한반도의 동쪽에 위치하여, 한반도의 지형적 특징인 '동고 서저'에 의해 산지가 발달하였으며 교통이 어렵고, 산촌의 형태로 마을이 구성된다. 따라서 강원도의 도시가 아닌 외곽은 교통이 불편하여 의료, 교육,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인구가 적으며,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뚜렷한 정부의 지원 정책을 받지 못하여, 결국 지역 브랜드화를 통한 개발만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강원도에서 실행중인 '강원에듀버스'를 '선택형 운행 버스'로 전환하여 학생뿐만 아닌 농촌민의 교육, 의료, 문화생활로부터의 고립을 방지해야 함을 주장하며, 또한 현재 강원도에서 내 고장 물품 소비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강원마켓', '강원곳간'의 홍보 활성화와 상권 확대를 통한 지역 브랜드화의 추진과, 마지막으로 '코하우징'의 주거 형태의 도입을 기반으로 한 귀촌, 귀농 인의 정착을 통한 인구 증가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강원도의 외곽지역이 아닌 도시는 지방 지원 정책을 통해 비교적 재정이 확충된 상태에서 발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강원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 정부의 정책으로써 '관광' 혹은 '주거'와 같이 도시화에 필요한 요소들에만 치중한 개발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방기업이전제도와 같은 정책에 의해 강원도로 유입하는 취업준비생, 청년들은 그 효과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단지와 시장의 통합 지원을 통한 공동 주차장의 도입, 시장에 '문화의 장' 역할을 하는 강당의 건설을 통한 박람회 혹은 강연과 같은 이벤트의 활성화, 소매업과 요식업 기업 지원을 통한 가게 활성화, 청년 기업 부스를 지원을 통한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 기반 지원과 같이 접근성이 편하고, 이미 다수의 골목 상권을 이루고 있는 시장과 연계한 여러 지원을 통하여 강원도로 유입하는 다수의 인구를 정착시켜야 한다.

한국사회에는 ‘지방이 없고, 지방정치도 없다.’라는 비판이 널리 퍼져 있는 실정이다.¹⁵⁾ 정치가 사회 구성원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장이고 과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에서 정치에 대한 인식은 정치인을 비롯한 소수 세력들의 자기 이익 실현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형태는 정치를 더욱 사회구성원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만들 뿐이며, 정치적 무관심은 정치를 더욱 부패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할 뿐이다.¹⁶⁾

한국의 경우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인 자본주의가 들어서면서 급진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자본주의를 대한민국에 주입한 정부 형태는 군사 정부 시절이었다. 주입하는 과정은 한국의 경제 성장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위해 선택과 집중이라는 명목으로 수도권 중심의 경제 발전을 주도했다. 수도권 중심의 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야기하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민심을 사로잡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술한 정치 비리가 존재하면서 더더욱 시민들은 암묵적으로 한국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 무관심으로 변질된다.

현재에 이르러선, 지방 성장을 위한 지원 정책이 통과되며 지방 자치 정책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슬로건을 앞세우고 과거 한국 정치의 잔재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지원이 향하고 있다. 이번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실시한 이유도 수도권외 지역 발전을 위함이다. 이처럼 현재는 지방 자치의 필요성을 알아차리고 수도권 중심 발전에서 균등한 발전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매스컴과 같은 매체는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해 한국의 균형적인 발전이 어렵다고 보도한다.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발전 방향을 잡기 어려우며 소통의 부재로 결국 수도권 중심 발전으로 돌아갈 것이라 전망한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시민 참여’, ‘시민 중심’이란 키워드가 들어간 정책이나 슬로건이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다.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위해 소통 중심의 정부를 표하며 시민들에게 정치적 관심을 요구하는 것이 최근의 정부 형태이다. 과연 시민의 무관심이 균형적인 발전, 다른 말로 지방 분권이 실현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인가?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적 무관심은 건강한 정치로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단순히 시민들이 정말 정치에 무관심해서일까? 오히려 요즘은 SNS의 발전으로 정치적 참여 수단이 다양해지고 비례적으로 정치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도가 높아지는데 아직도 시민들은 정치적으로 무관심해 보인다.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시민의

15) 신광영, “지방, 지방정치 지역시민사회의 현실과 과제”, 나라정책연구회 편저 (길벗, 1995)

16) 이선향, “주민 참여와 지방자치의 활성화 - 한국 지방정치의 현실과 쟁점”,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2.

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정책이 우선 올바르고 타당했을 때 비로소 시민들은 자신이 한국의 '시민'이라고 자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이 올바르지 않다면 시민들은 그 순간 시민이 아닌 것이다.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한 정치참여의 부족은 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의 상실을 뜻한다. 따라서 정치적 무관심이 지속된다면 무능한 정치인을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무능한 정치인은 소수인 집권권력의 이득을 위한 정치로 효율성 없는 정책을 생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국민은 위한 정책의 생성과 집행은 더욱 더 어려워지며, 국가 전체가 아닌 소수의 이익을 위한 정책으로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발전을 저해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정말 지방 분권을 위한 정책일까? 이는 맞다. 지방 정부에 금전적 원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질문을 바꾸어보자. 정말 지방의 시민들을 위한 정책일까? 이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기 어려운 것 같다. 본 글은 강원도를 예시로 접근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지역공동체 단위에서 '참여와 자치'를 통해 보편적인 국민주권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민주정치의 토대로 지방분권과 시민자치를 기본 자치로 실현된다.¹⁷⁾ 따라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지방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원도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위하여 건강한 정치 환경을 토대로 올바른 정부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는 위치 상 한반도의 동쪽에 위치하여, 한반도의 지형적 특징인 동고서저에 의해 산지가 많다. 강원도의 산지는 높고 험준하다. 따라서 강원도의 주요 도시들은 분지, 혹은 구릉 지대를 개발한 평탄한 지형에 분포하며, 그 외곽에 여러 마을이 존재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산지의 특성상 마을은 대부분 산촌의 형태로 분포하기 때문에 마을 간 거리가 매우 길며 한 마을의 범위가 매우 넓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강원도 농촌의 교통수단은 버스로 한정되어있으며, 오지일수록 배차횟수가 적고, 노선이 길며 대부분의 버스 노선이 같은 행선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노선의 버스가 여러 대 운행되는 것과 다름없다. 강원도 버스의 비효율적인 운행으로 대다수의 도민이 버스보다 택시를 많이 의존한다. 따라서 강원도는 농촌 민의 도시 접근성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효율적인 버스 운행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강원도에서도 외곽 마을, 즉 농촌의 교통수단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통학 거리가 먼 학생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강원 에듀 버스', '작은 학교 희망 버스' 와 같은 제도를 강원도 대부분의 '면'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수단은 학생들의 통학 편의만을 위한 것으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방치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관하다.

17) 정두숙, ……「한국지방자치와 시민참여 연구 : Citizen Governance를 향하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6p.

그러나 아래 표를 통해 강원도의 인구 구성을 살펴보면, 유 소년층과 청년층의 합이 410,890명이며 중, 장년층과 노년층의 합이 1,057,552명으로써 유 소년층과 청년층의 인구 보다는 중 장년층, 노년층의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교통수단을 구축 할 필요가 있다.¹⁸⁾ 따라서 학생들의 통학 시간인 8시~9시, 16시~19시(방과 후 하교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통학 버스의 노선을 올바르게 구축하여 운행한다면 추가적으로 교통수단을 구비해야 한다는 도의 재정 부담감 없이 농촌의 교통수단 불편함이 해소 될뿐더러, 버스를 탄력적으로 운행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택형 운행버스’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유 소년 층 (5 세 ~ 14 세)	청 년 층 (15 세 ~ 29 세)	중, 장 년 층 (30 세 ~ 64 세)	노 년 층 (65 세 ~ 99 세)
합 계	128,901	281,989	786,248	271,304

‘선택형 운행버스’의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10~15시, 20시~22시에 통학 버스를 농촌 민들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사용한다. 이 때, ‘선택형 운행’이란 주민의 필요에 따라 군청, 혹은 시청이 필요한 지역에 한해 버스를 제공하여 선택적으로 운행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강원도의 A마을이 있다면, A마을의 이장 혹은 면장이 주민들의 병원, 은행, 시장과 같은 행선지가 담긴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날 아침 전까지 면사무소에 제출을 한다. 이에 면사무소에 선 군청에 보고를 하여 버스를 제공 받은 후 제출받은 자료를 참고하여 만든 노선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운행을 하게 된다면 꼭 필요한 행선지만 들리게 되어 도시로의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미리 버스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어 경제적인 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대부분의 농촌 민들이 도시에 방문하는 이유는 ‘의료’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 받거나, 더 좋은 상권에서 물건을 구입한다거나,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선택형 운행 버스의 노선이 도시의 병원, 재래시장에 반드시 방문하게끔 설정한다면 농촌 민에게 이동 편의성을 제공 할 뿐더러 농촌 민은 도시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노선에 배치될 재래시장과 군청과 협약을 맺어 ‘지정 재래시장’으로 선정한다. 지정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농촌 민에게 할인과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면 농촌 민의 재래시장 이용 만족도는 더욱 증가 할 것이며, 이는 지역 경제의 순환이 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노선에 배치될 병원이 군청과 협약을 맺어 ‘지정 병원’이 되어 병원에 일정 수 이상의 마을 주민이 방문한다면 그 때마다 그 마을로 출장 의료 서비스를 나가기로 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지정 병원이나 지정 재래시장을 선택형 운행 버스 내부 혹은 외부로 통

18) 통계청, 「연령 및 성별 인구 - 읍면동(2015), 시군구(2016~)」, KOSIS국가통계포털, 2018.01.08,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1N1503&vw_cd=&list_id=&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

한 광고를 무료로 실행한다면 혜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약 시장, 협약 병원과 농촌민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이 되어, 이 역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시, 군에서 설립한 도서관, 미술관 등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과 선택형 노선버스의 연계를 통하여, 도시로 나을 일이 적은 농촌 민을 위해 도서반납 기간의 연장을 허용해준다거나, 전시료 할인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면 농촌 민의 문화생활 만족도 또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는 인구수가 약 155만 명으로 한반도의 광역시와 특별시를 제외한 도 중 가장 적은 수의 인구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인구 부족 현상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하고, 이는 저 출산과 연결되는 등 악순환의 고리가 되기도 한다.¹⁹⁾ 한 편 요즘 귀농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워지며 귀농 인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산과 강, 바다 모두의 자연환경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올바른 시스템을 정비한 후 귀농 인을 대거 유치한다면, 강원도의 인구수는 늘어날 것이고 늘어난 인구는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의 주요 인재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강원도의 지형적 특성 상, 다수의 산지 지형 때문에 마을 간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여 문화적 제약, 교육적 제약 등이 존재하며, 이는 기존 농촌 생활자뿐만 아닌 귀농한 신생 농촌 인에게 어려움을 줄뿐더러 농촌으로의 정착을 어렵게 한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 또는 귀농 지원 사업이 열리더라도 산을 끼고 있는 마을의 특성 상 마을의 범위가 넓고, 교통이 불편하여 지방 정부에서 이를 일일이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일명 ‘코하우징 (co-housing)’ 이라 불리는 주거 형태의 도입을 제안한다.

‘코하우징’이란 덴마크와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주거 형태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협동생활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실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주형태이다.²⁰⁾ 또한 코하우징의 마을은 계획과 시공, 운영의 전 과정에서 주민이 모두 참여하여 의사를 표현하며, 주민의 의사에 따라 헬스장, 도서관, 공동 테라스, 강당과 같은 공동 공간을 설치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코하우징을 도입한다면 모든 과정에서 주민의 직접적인 의사가 반영되기 때문에 귀농의 문제점 중 하나인 ‘마을 주민과의 불화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²¹⁾ 또한 농지 역시 공동 공간으로 지정하여, 공동 농지에서 기존 농촌인의 교육을 통한 신생 농촌인의 실습이 이루도록 유도하고, 강당과 같은 공용공간에선

19) 박지은기자, “일자리부족→탈 강원도→저출산’ 악순환 되풀이”, 강원도민일보, 2016.09.07.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800396>

20) 임윤희, 「코하우징의 공동육아환경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6

21) 홍성실, 「귀농인의 농촌 이탈에 관한 영향요인 및 이탈 방지를 위한 사업 우선순위 도출에 관한 연구 : 경상남도 서부권 농촌지역의 귀농과 지역재생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3

도시로부터 귀농한 신생 농촌인의 교육 봉사를 통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컴퓨터 강습, 꽃꽂이)을 들을 수 있게 한다면 올바른 농촌 정착 교육과, 기존 정착 농촌인의 문화생활에 대한 상대적인 소외감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²²⁾ 또한 거주지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교육 후 사후관리가 편하다.

또한 특히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은 강원도 일부지역 (춘천, 원주)에 위와 같은 코하우징 주거 형태의 마을이 생성된다면 주말 농장, 혹은 자연 체험 농장을 관광 상품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공동 농지에서 난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수입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강원도에는 바다와 산, 고위평탄면과 다양한 자연환경이 존재하며, 환경이 다양한 만큼 농산품역시 다양하게 재배되고 있다. 강원도는 이와 같은 농산품을 활용한 지역 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생산 환경이나 인적요인에 의해 이루어진 농산물, 가공품에 지리적 표시를 함으로써 국가의 보호를 통해 지역산업을 육성하게끔 유도하는 '지리적 표시제'와²³⁾ 농산물의 생산 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 식품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GAP 인증제도'와 같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활용하여 농산물 상권 확보에 힘을 쓰고 있다.²⁴⁾ 그러나 위와 같은 제도는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등록이 까다로운 절차이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홍보의 부족으로 인한 낮은 인지도 때문에 거래가 미흡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²⁵⁾ 따라서 강원도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아닌 강원도만의 정책을 구축하여 올바른 농산물 상권을 개척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강원도는 지역 농산품의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브랜드 관'과 '강원공간' 같은 온라인 물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화관의 지역경제 홍보 광고, 지역 라디오에서 소개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도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다. 즉, 이러한 온라인 물은 강원도 내에서만 홍보가 되고있으며, 오프라인 판매처의 수는 '시'단위에 하나씩 밖에 없는 정도로, 도민의 구매를 유도 할 수는 있겠지만 타 도민, 시민,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를 유도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강원도의 농산품을 브랜드하여 농산물 상권을 개척하기엔 큰 한계점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원도 브랜드 관'과 '강원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홍보의 단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특히 각 마켓이 온라인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전국의 타 도시의 사이트와 결합을 하여 강원도의 도청과 같은 사이트엔

22) 이시자, 「귀농자의 안정적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 곡성군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2-23

23) 이재식,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시대 활짝 열려」, 농림축산식품부, 2002.09.06, <http://www.mafra.go.kr/mafra/36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TjJGbWFmcmElMkY3MSUyRjMwMTgzNyUyRmFydGNsVmldy5kbyUzRnJnc0VuZGRlU3RyJTNEJTI2YmJzT3BlblldyZFNlcSUzRCUyNnBhZ2U1M0QxJTl2cm93JTNEMTAlMjZwYXNzd29yZCUzRCUyNnJnc0JnbmRIU3RyJTNEJTI2YmJzQ2xTZXEIM0QIMjZzcmNoQ29sdW1uJTNEc2olMjZpc1ZpZXhNaW5lJTNEZmFsc2UIMjZzcmNoV3JkTNEJUVDJUE3JTgwJUVCJUE2JUFDJUVUVDJUEwJTgxJTl2>

2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제도소개」, GAP정보서비스, http://www.gap.go.kr/jsp/BizGap/ServiceInfo2/ServiceInfo2_02.jsp

25)경남일보, 「'지리적표시제', 활성화시킬 필요있다」, 경남일보,

상대 도의 특산물 온라인 마켓 광고를 올려주고, 상대 도의 사이트엔 강원도 브랜드 관과 같은 온라인 마켓의 광고를 올린다면 도민이 아닌 전국단위의 구매자 충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쿠팡, 위메프와 같은 소셜커머스와 협약을 하여 소셜커머스의 배너에 강원도 농산품 온라인 마켓을 홍보하거나, 특별 판매 관을 설치하는 것도 전국 단위의 구매자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강원도의 주된 수입 중 하나가 '관광산업' 인 점을 활용하여, 강원도의 유명한 관광지에서 각 온라인 마켓의 오프라인 마켓 혹은 홍보 관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농산품의 경우 상태(신선도) 확인과 원산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마켓, 홍보 관의 설치는 직접 맛을 보거나, 상품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지에서 온 관광객들의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이 역시 전국 단위의 구매자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타지에서 온 관광객이 아닌, 인터넷에 접근이 불가능한 노년계층과 같은 도내의 정보 취약 계층의 구매까지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강원도는 중앙정부의 주도에서 만들어진, 즉 강원도에 맞지 않는 정책에서 벗어난 강원도만의 마켓인 온라인 마켓의 전국 단위의 구매자를 충족시키고 오프라인에서의 접근성까지 강화시킨다면 강원도는 강원도 농산품의 브랜드화를 통한 농산품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세계로 까지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현 정부는 5년간 50조원을 투자하여 전국의 낙후지역 50여 곳을 정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진행 중이다. 강원도도 해당된다. 강원도는 철원, 정선, 원주, 삼척, 영월, 태백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곳은 3~6년간 국비 800억 원을 포함해 약 7000억 원이 투입되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된다.²⁶⁾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지방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전국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제정으로 기업들이 지방 이전하는 데 용이하게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지방기업이전제도의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지방 특성에 고려하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표한다. 또한, 직장인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역시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재정적 지원은 지방 정부의 기준에 따라서 차등을 설정한 상태로 지원되며 직장인 육성 프로그램은 강원도에 강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다목적 강당 같은 홀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이지만 정책의 내용은 '중앙 정부'통제의 느낌이 다분하다. 강원도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보자면 철원, 삼척, 태백은 정부제안의 재생도시 사업이 진행 될 예정이다. 이 세 곳은 주거 지원, 문화 시설 보급과 경제 시설을 발전시키는 방향을 보여준다. 정선, 원주, 영월은 시도제안의 재생도시 사업

26) 강원도청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

이 진행되는 데, 이 곳도 역시 근린 시설 도입이나 주거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지 도입과 문화 시설 보급은 확실히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에 올바른 선택이지만, 강원도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꼭 들어가 있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가 빠진 것 같다.

현재 강원도는 '강원도에서 살고 있는 시민'과 '강원도로 이주해 오는 시민'으로 양분 된다. 여기서 강원도로 이주해 오는 시민들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강원도로 이전된 기업을 따라서 강원도로 이주해오는 시민들과 귀농을 하기 위해서 강원도로 이주해 오는 시민들을 일컫는다. 즉, 자신의 직장, 직종을 위해서 강원도로 향하는 젊은 청년 시민들이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주거 정비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 기반형으로 나뉜다. 이 네 가지 모델들은 도로 정비, 주택 정비, 문화 서비스 공간 창출, 점포 리모델링 등의 개발 계획을 내포한다. 하지만, 현재 강원도로 이주해 오는 시민들은 취업 또는 출근을 위해 주거지를 찾는 청년들이다. 즉, '취업 준비생'들이 강원도에 입거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는 취업 준비생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단지, 강원도의 '관광'특성만 활성화 시키는 모습이 보인다. 강원도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제도는 생겨났지만 제도를 뒷받침 해줄 사회기반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강원도는 취업 준비생을 위해 지역인재 의무고용제도를 도용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고용이 채용인원이 2022년까지 30%로 의무화되어 있으나 현실상 연도별 지역인재 채용율은 2015년 12.4%, 2016년 13.3%, 2017년 14.2%로 증가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기관별로 여전히 편차가 보인다. 통계에 따르면 강원도 지역 주민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선에 불과하다. 지역인재 고용 자체가 유명무실해 보인다. 또한 강원도 지역 내의 학교에서 최종학교를 나와야 지역인재로 해당되는 조항역시 강원도 기업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에게 역효과이다. 더구나 지방공기업 법 제 63조 2항에 따르면, 공사의 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임용됨을 표하는데,²⁷⁾ 이는 지방 인재들의 경쟁력 저하를 야기한다.

문제를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강원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의 지원을 그저 '관광', '주거' 같은 도시화에 필요한 요소들만 개발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된다. 도시재생뉴딜 산업만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 행사가 진행되는 강원대학교의 백령 아트센터에서 2016~2018년 동안 진행 된 행사 목록을 보면 압도적으로 음악 콘서트 같은 행사만 진행 되는 것을 알 수 있다.²⁸⁾ 대학교에 지어져 있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으로만 사용 되는 모습이다.

현재 강원도는 지방기업이전제도로 인해 기업이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취업 준비생이 강원도로 들어오는 추세이다. 취업 준비생을 위한 취업 지원 제도도 마련되어있다. 도시재생산업도 병행되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이 계속되고

2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8249&efYd=20171024#0000>

28) 백령아트센터 공식홈페이지. <http://www.kwbc.co.kr/>

있다. 하지만, 지방기업 이전 제도로 넘어오는 기업에 강원도 시민이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도적 마련도 불안정하며 취업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않은 실정이다. 지방 정부는 '관광', '주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현재 강원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기민하게 포착하여 발맞춰 움직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시장 문화를 발전시키자'라는 주장을 하고 싶다. 단순히 현재 강원도의 주요 시장인 강릉중앙시장, 속초관광수산물시장, 주문진수산물시장, 정선아리랑시장, 양양전통시장, 영월서부시장을 한정하여 발전시키자는 뜻이 아니다. 정확히는 시장문화를 발전시켜야 함을 주장한다. 시장문화의 발전이 현재의 강원도에 어떤 기대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네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 보려 한다.

우선 이유를 설명을 한다면, 강원도는 수도권처럼 큰 도시를 중심으로 위성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춘천, 속초, 원주와 같은 중심지를 동심원으로 주택단지나 상가가 모여 도시가 형성된 형태이다. 현재 도시재생산업으로 고층 아파트단지와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있지만 여전히 주택단지가 현저히 많다. 하지만, 강원도의 대부분 도시들은 고층 아파트 단지가 아닌 주택단지나 저층 아파트단지로 형성 되어있다. 주택단지로 구성된 도시는 골목 상권과 균형을 이루게 된다. 주택단지가 있는 곳에 상권이 발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즉, 시장문화를 발전시키자는 뜻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골목 상권을 '시장'과 같이 블록화 시키는 것이다.

도시와 시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시장은 예로부터 소통의 장 혹은 만남의 장이었다. 시장은 집에서 가깝기도 했으며 다양한 정보가 오고갈 수 있는 장소의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늘 사람이 붐볐다. 강원도는 아파트 단지보다 주택 단지가 더 많은데(도시 개발로 인하여 아파트 수와 주택 수의 수가 비슷해지고 있다.) 현재 취업 준비생이 들어오면서 1인 주택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취업 준비생 또는 1인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과연 대형마트나 아파트 단지만 늘리는 것이 맞는 처사일까? 골목 상권은 취업 준비생이나 1인 가구와 같은 소규모 가구에 적합하다. 자동차를 끌고 대형마트로 가는 취업 준비생이 많을지 아니면 집 앞에 마트로 걸어가서 취업 준비생이 많을지 상상한다면 바로 답이 나올 것이다. 강원도는 대형마트가 아닌 접근성 좋은 골목 상권의 발전이 더 시급해 보인다.

골목 상권을 어떻게 시장 문화로 발전시킬 것인가? 여기 네 가지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첫 째, 주택 단지와 시장 통합 지원. 둘째, 시장에서의 이벤트 활성화. 셋 째, 골목상권 기업 지원. 넷 째, 청년 기업 부스 참여 지원. 이렇게 네 가지 측면을 다루어 보겠다.

첫 번째, 주택 단지와 시장 통합 지원이다. 우선 강원도에 주요 시장 일곱 남짓이다. 주택 단지와 시장 통합의 지원에서의 '시장'은 주요 시장이 아닌 골목 상권을 블록화 하여 '시장'처럼 묶은 것을 뜻한다. 주택 단지와 시장 통합 지원에는 '주차 공간 확보', '상인 조합 형성'을 제시한다. 춘천을 예시로 들면, 식당에 들어서기 위해 주차공간을 찾아야 하는 상황을 가정할 시 춘천은 점심시간에만 도로변에 주차할 수 있다. 더구나 점심시간에 도로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곳도 한정적이다. 주택단지

와 시장을 위한 공용 주차장을 도입하면 입주민과 시장 이용객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상인 조합 형성은, 말 그대로 시장의 상인들끼리 조합을 형성하는 것이다. 조합 형성은 지방 정부에게 의견을 피력하거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다.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인 조합은 필수적이며 지방 정부는 상인 조합을 형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시장에서의 이벤트 활성화이다. 취업 준비생을 위한 취업 박람회가 강원도에서도 열린다. 취업 박람회의 목적은 취업 준비생에게 취업의 기회를, 지역 기업에게는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춘천에서는 ‘일구데이’(일자리 구하는 날)라 해서 매월 19일 행사가 열린다.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행사들이지만 문제점이 많다. 춘천 시청에서 열리는 취업 박람회 2014년에 첫 개최를 하였으며 올해로 5회 째이다.²⁹⁾ 이는 취업박람회가 년 1회가 열린다는 뜻이다. 일구데이에 열리는 행사 역시 제한적이다.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맺어준다는 순기능은 있지만 인력 시장과 다를 바 없을 뿐 취업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주택단지 인접 시장에 강원대의 백령 아트센터 역할을 하는 ‘문화의 장’같은 시설을 시장에 설치하는 것을 제안한다. 시장에 설치된 ‘문화의 장’은 ‘접근성의 극대화’와 ‘기회 창출’이란 기대 효과를 갖는다. 단순히 구인 기업과 구직자의 접선을 위한 행사가 아닌 취업 진흥 프로그램이나 기업 훈련 관련 세미나를 시장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취업 준비생의 대부분이 주택단지(원룸)에 거주한다는 점과 시장의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취업 준비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 기회 창출은 정선 시장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정선 시장에서는 정선 아리랑 공연이 열리는 데 현재까지 90여 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11월까지 60여 회를 더 공연할 계획이라 한다.³⁰⁾ 시장에서 열리는 이벤트들은 접근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용이하여 취업 준비생들의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일 수 있으며 시장의 경제적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골목상권 기업 지원이다. 99년부터 06년까지의 강원도 사업체 통계 자료를 보았을 때 전체 사업체 40만중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요식업이 15만을 차지한다.³¹⁾ 이중 회사법인 사업체는 4만에 가깝다. 소매업과 요식업 업체들이 들어서기 손쉬운 곳은 대형마트가 아닌 시장이다. 시장이 곳곳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소매업과 요식업 역시 시장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며 고용 기회 증가의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다. 또한 강원도는 요식업 관련 가업승계가 많은 편이다. 이러한 곳들은 과거 시장에서부터 시작한 곳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골목상권 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예전부터 강원도에 거주하던 시민들과 현재 강원도로 이주하는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9) 구성희 기자, 강원미래신문, <http://www.gwmirae.kr/news/articleView.html?idxno=24685>

30) 김현정 기자, 네이버 포스트,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445586&memberNo=491807&vTyp=VE>
RTICAL

31) 강원통계정보,

http://stat.kosis.kr/statHtml_host/statHtml.do?orgId=211&tblId=DT_A452&dbUser=NSI_IN_211

네 번째, 청년 기업 부스 지원이다. 청년 기업 부스는 말 그대로 청년층이 운영하는 기업이다. 강원도의 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취업 준비생뿐만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층도 분포되어 있다. 청년층이 운영하는 기업은 스타트업 기업이기 때문에 대형마트와 같은 거대 기업이 들어설 경우 시장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청년 기업에는 적절한 지원이 요구되는 데 시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세 번째와 마찬가지로 시장에 청년 기업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을 마련하는 것이다.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 핵심은 '홍보'의 유무라고 생각한다. 주택 단지 인접 시장에 스타트업 기업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을 지원한다면 기업 성장에 관련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예상한다.

지방자치·분권실현 정책제안공모 (시민부문)

김성인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114길62 내이치해밀 412호
010-2749-5827
riol989@nate.com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방안

요약본

바람직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문화유산 활용은 개인의 내적인 계발을 촉진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유기적인 조화를 촉진할 수 있다. 개인의 감성과 지성에 기반한 창조적 인간으로의 발전과, 소통과 혁신을 통한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발전을 위해서 문화유산·인프라의 개발과 교육은 공공/사회서비스적 활동이 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사회적경제, 보편적 복지, 도시재생 등 공동체와 지속가능한 번영을 추구하는 이론이 구체화되고 정책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지역문화 진흥 측면에서도 기존의 문화전문인력과 사회서비스인력의 공동 양성, 지역문화 진흥 기반의 도시재생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정책의 연계 및 융합에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단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지역문화의 진흥에는 문화유산 및 지역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하여 가치 및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고령화, 도시화 둔화 등으로 인해 도시의 역동성이 침체되어가는 상황에서 지역문화 전문인력은 문화유산 교육, 생활문화 진흥과 주민주도 문화사업 등을 통해 도시재생 및 지역활성화를 주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지역주민의 여가선용이 국가경쟁력의 핵심변수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계층별·지역별 문화양극화 해소와 효율적 문화서비스 전달을 위한 전달체계 및 교육자(문화복지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향후 지역 문화복지 전문인력 육성과 보급은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역역량 강화·지역자산 가치 증대, 사회적경제의 마을기업 육성, 자활센터의 보편적 복지 실행 등이 지향하는 지역사회·지역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형태를 가져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부흥과 문화복지 실현을 담당할 문화복지 전문인력은 기존 문화인력 양성과정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양적인 성장을 달성하고, 정책적 흐름을 반영한 지역 내 공적사업과의 유기적인 융합을 통해 질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과 보급과정의 타당성이 지역 내 운영과정에서 검증된다면 지금까지의 top-down식 정책 전파 형태에서 벗어나 지방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책발굴과 추진을 통해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과 사회서비스 활성화, 공동체 번영을 달성한 합리적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I. 현황 및 현안

1.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복지 정책 방향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단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문화의 진흥에는 문화유산 및 지역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하여 가치 및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고령화, 도시화 둔화 등으로 인해 도시의 역동성이 침체되어가는 상황에서 지역문화 전문인력은 문화유산 교육, 생활문화 진흥과 주민주도 문화사업 등을 통해 도시재생 및 지역활성화를 주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규모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성장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20년 동안 청년실업, 비정규직, 저출산, 고령화 등 경제적·사회적 지표의 양극화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는 문화적 지표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경제의 양적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계층은 해외여행, 유수의 문화행사 관람 등을 통해 높은 품질의 문화예술관광 콘텐츠를 향유하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이러한 울타리에서 제외된 소외계층은 기본적 문화여가활동조차 어려워 문화적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몇년간 사회적경제, 보편적 복지, 도시재생 등 공동체와 지속가능한 번영을 추구하는 이론이 구체화되고 정책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지역문화 진흥 측면에서도 기존의 문화전문인력과 사회서비스인력의 공동 양성, 지역문화 진흥 기반의 도시재생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정책의 연계 및 융합에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전문인력과 사회서비스인력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문화 진흥의 관점에서 도시재생 등 사회서비스영역·지역공동체사업과의 연계, 공공복지 인력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내에서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문화복지의 사례를 발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2. 사회서비스영역의 상호 업무 중복

참여정부 이후 시민의 도시정책 참여 등이 늘어나면서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등을 기치로 풀뿌리 민주주의·지역경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설립되어 운

영 중이다.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에는 많은 사회서비스인력이 참여하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0년대 이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회적경제 육성, 주거환경개선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공동체 활성화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업무의 유사성이 높고 사회적경제 육성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담당하는 사업과 중복되고 있다. 또한 기존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행하는 주거환경개선, 도시재생 분야 등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영역 및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

<표 1> 유관기관과의 비교 ³²⁾

기관	법적근거	주요업무	관련부처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교육, 지원, 시설관리 등	문화체육관광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지자체 조례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 마을기업 육성 주민조직 네트워크 구축	행정안전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회적기업 육성법 지자체 조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중앙정부지원정책 대응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지방도시공사	지방공기업법	토지취득, 임대, 개발 임대주택관리 주택 및 도시개발사업	행정안전부
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자 자활촉진	보건복지부

이러한 유사 업무 중복은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두드러지는데 서울시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의 상당한 개념 및 업무 중복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을 별개의 분야로 취급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 등 기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재생 업무 담당자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일부 지역문화 진흥 관련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지역 내 문화단체의 사회적기업화를 추진하기도 한다.

각 유관기관의 실무 담당자와 공무원조차도 각 지원기관의 업무 개념과 사업의 구분에 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마을만들기와 도시공사는 행정안전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 도시재생지

32) 김예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7, 39쪽

원센터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 및 지방정부 담당부서가 상이하여 업무의 통합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최근 지방분권이 화두로 등장했으나 이렇듯 지자체의 행정력 중복 및 예산 낭비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규정과 사업타당성 분석이 없는 지금까지의 주먹구구식 중간지원조직 운영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회서비스인력이 참여하는 문화유산 교육, 지역문화진흥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은 이러한 유사 업무와 개념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관련 법 및 규정에 제시하여야 한다.

II.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문화복지 전문인력

1. 제안배경과 당위성

공공인프라는 여러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물리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가진 건축물을 예로 들 수 있고,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공공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무형의 문화재도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사회간접자본(SOC)이 있는 반면에 사회·문화적 유산 및 콘텐츠도 존재한다.

이러한 공공인프라를 관리하는 조직은 각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은 각 지자체,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공기업 등으로 나뉘어 있다. 문화재 및 콘텐츠를 관리하는 기관은 문화재청, 콘텐츠진흥원, 지역별 문화재단 등으로 상이하다.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은 광역지자체, 개별지자체, 시설관리공단 등으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

지자체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유산·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뒷받침 되어야 하나 이러한 지역자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아직까지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정책적 측면에서의 문화유산과 공공인프라 자료 구축과 가치 증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의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등 사회서비스 부문과 최근 정부의 중점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그리고 지방정부들의 문화도시로의 육성은 서로 상호보완되는 관계에 있다. 위 영역들의 융합과정에서 창조·혁신성을 기반으로 도시의 새로운 정책과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의 도시재생 정책과 문화도시 정책은 각자 보유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영역 간 협력을 통해 유무형 인프라, 장소중심의 통합적 도시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영역간 융합과정에서 지역 문화유산 등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의 혁신이 가능할 것이다. 지역 내의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과 공공인프라 재창조 과정은 자산의 창조적 활용에도 부합하고 문화도시로의 질적 다변화와 신규수요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상호연관성이 높은 사회서비스 각 영역간의 특징을 반영한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은 최근 보편적 복지와 문화유산 교육, 지역문화 보급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자산과 인프라를 재구조화함으로써 내외부 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2. 문화복지 전문인력의 형태 - 문화인프라 코디네이터

작게는 민간단체부터 크게는 관공서와 주무부처를 아울러 수많은 문화정책과 문화복지 관련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 이들 중 중복되는 정책과 업무도 상당 수 존재하고 이를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지역주민은 담당부서와 정책의 활용방법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보인다. 재화가 유통에 의해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로 전달되듯이 문화서비스와 문화복지도 공급자와 수요자를 잇는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문화서비스 전달체계는 공공/사회서비스 재원의 낭비를 줄이고 일자리가 연계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금이 모이고 서비스가 통합되며 정보가 관리되는 지역단위 저수지형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중복 방지, 비용 절감, 문화복지 사각지대 해소, 원스톱 서비스 등이 가능해 질 수 있다.

문화인프라 코디네이터는 지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관련 플랫폼과 유·무형 문화유산 등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 수요공급의 접점, 문화유산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 불용자산 중 유허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인프라는 현황분석을 통해 문화유산 전시 및 교육공간 등으로 용도변경 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앞서 언급한 사회서비스인력 등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기관별로 나뉘어 상이하게 추진되었던 문화·콘텐츠 등의 관리는 코디네이터에 의해 일원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각 구청별 시설관리공단 등이 관리하는 도시와 농촌의 유허인프라를 발굴하여 상호간에 공유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겠다.

인프라 관련 서비스는 방대한 관할 업무, 많은 당사자, 다원화된 계층의 공존 등 다양한 사회·문화·경제적 파급력 및 인프라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따라 개별적이고 다원화된 수요층의 공존, 특수사업에서 볼 수 있는 전문성 요구·독창성 확보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러한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실례로 콘텐츠 및 문화유산 개발·관리, 조례제정 등 법적 타당성 확보, 관

련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관기관 사례연구,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문화부 및 대정부 지원 협의, 각종 사회행사·학술포럼과의 연계 및 홍보 등을 들 수 있겠다. 특성상 초기에는 단기적으로 예산 및 인력 등의 제약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지역 인적자원 활용, 철저한 전략 수립과 분석, 타당성 검토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 정책 추진을 통해 관계자와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문화복지 전문인력의 운영 거버넌스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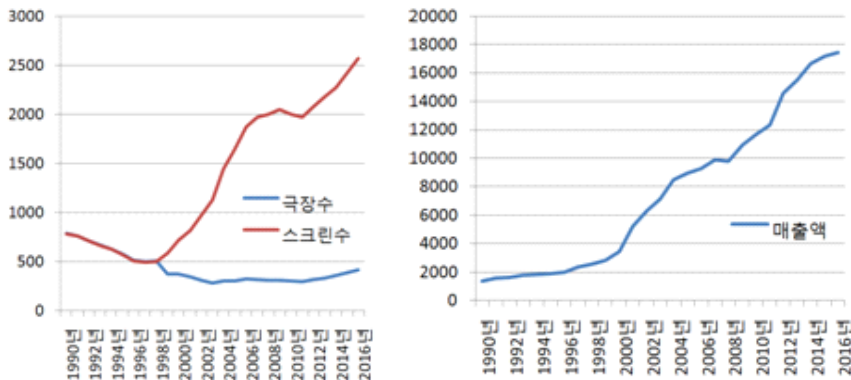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문화재단과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업무 중복을 해결하고 유관기관 간 연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지역문화 부흥과 도시재생 등 공공/사회서비스의 실질적 효과를 내려면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연계가 필수적이다. 수원시, 전주시, 시흥시 등에서 유관센터들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부처별, 기관별, 부서별 칸막이와 사업지연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유사업무 수행기관의 통합운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로 현재의 ‘도시재생 뉴딜 가이드라인’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표 2〉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방안 33)

지원조직	도시재생뉴딜 유관사업	도시재생뉴딜 연계·협력 방향
지역 문화재단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활성화 지역 역사문화 조사, 스토리텔링 주민 문화활동 지원, 행사 개최	지역 역사 및 문화자원 조사 및 발굴 협력을 통한 지역특화 전략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및 활동프로그램 연계
마을만들기 (공동체) 지원센터	주민공동체 지원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주민조직·공동체 육성 등	주민조직·공동체 의견수렴 협조 역량강화 프로그램 연계 추진 공동체 활동을 통한 지역활성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지역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 컨설팅 및 판로 지원 마을기업 활성화 행사 개최 등	마을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사회적기업 등 지역공헌·비영리 단체 활동거점 지 원, 성과 연계
자활센터	취약계층 자활기업 육성 집수리, 청소 등 사회공헌사업	집수리 재능 나눔, 마을청소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 연계 지원 지역공헌·비영리 단체 활동거점 지원 및 성과 연계
지방 도시공사	기초인프라 등 물리적 환경 개선 주택 공급, 도시개발 등	생활인프라 등 물리적환경 개선사업을 경관재생 등 으로 연계 임대주택 등에 대한 주거복지 프로그램 연계

Ⅲ. 실행가능사례 제안

1. 인프라 구조 개선과 신성장 동력 창출 사례



<그림 1> 국내 영화산업분야 추이 34)

영화진흥위원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영화산업의 성장추세와 성장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1990년 이후 약 30년 간 우리나라의 극장 수는 50% 가까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스크린 숫자는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영화산업계에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대형자본이 진출하여 영화관의 멀티플렉스화를 급속히 추진한데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의 멀티플렉스 진출을 계기로 영화산업계는 8배 가까운 폭발적인 매출액 증가를 달성했다.

IMF 경제위기로 인한 극심한 불황을 겪던 한국은 정권교체 이후 정보통신산업과 미디어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을 시도하였고 때마침 불붙고 있던 나스닥 발 닷컴 호황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위기가 변화를 이끈다는 말처럼 이 시기에 시도 한 IT 인프라 구축,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제도 마련과 투자는 후일 한국의 경제 선진화, 한류 열풍 등에 크게 기여했다.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치룬 이후 1940~196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미국 등 선진국들은 1970년대 오일쇼크로 촉발된 경제불황을 타개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출범한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 행정부 등은 내생적 성장과 신자유주의 이념에 입각한 다양한 경제정책을 펼쳤고 이는 2016년 현재 미국의 금융 산업이 GDP의 9%, IT산업이 7%, 미디어산업이 3%, 관광산업이 3%를 차지하는 산업체계 개편의 기반을 제공했다.

33) 김예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7, 52쪽

18) 좌 : 국내 극장 및 스크린 수, 우 : 매출액 추이(억원), 영화진흥위원회자료를 기반으로 재구성

기존의 영화관을 멀티플렉스라는 개념의 인프라로 개선하여 신성장 동력을 창출한 우리나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문화유산, 사회·경제적 인프라의 개선 및 제고를 통한 부가가치 등의 증대에 대한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다.

2.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활용한 실버문화 활성화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반해 노인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극장은 417곳 스크린은 2575개에 이른다. 이 중 노인들이 찾을 수 있는 실버영화관은 10곳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이 광역시 인근에 위치해 있다.

〈표 3〉 국내 실버영화관 현황

위치	극장명	비고
서울시 종로구	허리우드 클래식	사회적기업
서울시 종로구	낭만극장	
서울시 중구	청춘극장	
서울시 마포구	시네마텍 KOFA	정부운영 (실버영화관은 아님)
서울시 서초구	명작극장	
인천시 동구	추억극장 미림	
경기도 안산시	명화극장	
대구시 중구	그레이스 실버극장	
충청남도 천안시	낭만극장	

〈표 4〉 허리우드 클래식 관객

연도	관객 수
2009	65,000
2010	120,000
2011	150,000
2012	200,000
2013	230,000
2014	250,000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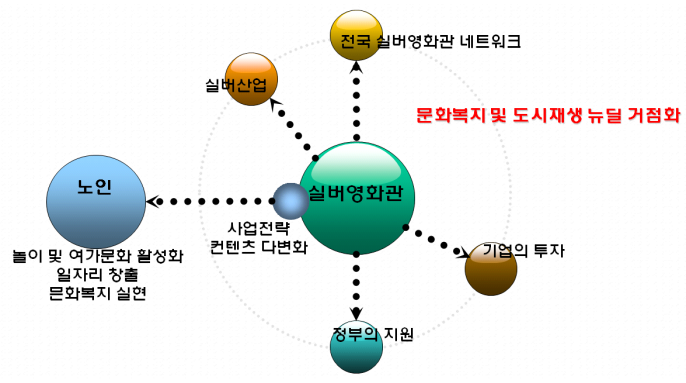
우리나라 노인의 1년에 1회 이상 문화활동 경험율이 54.8%에 불과하고 문화활동내용은 영화관람이 47.1%로 가장 높다³⁶⁾.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풍부하므로 놀이문화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주류 대중문화에서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영화라는 친근한 문화매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문화복지·보편적 복지 실현을 추구해야 한다.

대표적 실버극장인 허리우드 클래식의 경우 꾸준히 관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 시네마텍 KOFA의 경우, 실버영화관이 아님에도 관객의 70% 이상을 노인들이 차지한다(전좌석 무료). 허리우드 클래식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30명 이상의 실버일자리를

20) 허리우드 클래식 누리집

19) 서울시, 『2030 서울시 고령사회 마스터플랜』, 2015

창출 중 이다. 사회적 기업으로서 SK 등 대기업의 투자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이를 통해 허리우드 클래식이 위치한 종로에 노인문화벨트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실버영화관 정책은 지자체의 문화정책,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적 복지와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문화복지부문 등과의 연계구조

문화복지 전문인력에 의해 분산된 노인 인프라, 실버문화 관련조직들이 통합된 광역 관리체계로 효과적인 실버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를 찾는 과정에서 투입되고 낭비되는 주민들의 물적·인적 재산을 다른 경제수요에 투입할 수 있도록 도와 지자체의 실질적 GRDP 증가, 사회문제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 실버영화관 운영 예시

사용처	사용시기	사용금액	비고
공간 임차료	2019년 1월~	-	지자체 장소 협조
인허가 등	2018년 11~12월	100만원	
집기 등 구매	2018년 12월	15천만원	상영장비, 사무집기 등
인건비	2019년 1월~	월 400만원	상영기사, 행정직원
홍보비용	2019년 1월~	2천만원	
계		17천500만원	

IV. 전망되는 성과

1. 지역 문화복지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차원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차별화시도를 통해 다른 유사사업과의 경쟁적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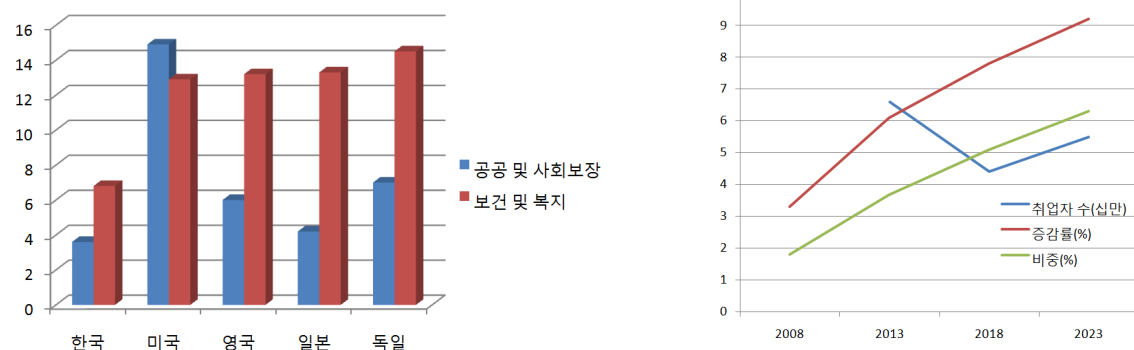
(Competitive Caution)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자체들은 다른지역에서 모방하거나 대체가능성이 낮은 지역배태성이 높은 문화유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므로 인력활용을 통한 다양한 지역 내 문화예술 유산, 인프라, 플랫폼의 특화와 상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지역자산의 인지도 및 충성도 향상은 지역 내 문화복지의 향상과 관광 등 교류인구의 증가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등 공공/사회서비스별로 분산된 조직들이 지방정부, 주민, 유관단체의 협업에 의해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통합되어 광역관리체계를 수립하면 효과적인 문화복지, 문화유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공공인프라의 공유는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 실현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수행한다. 문화유산의 지식정보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빅데이터와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장 이슈 선점의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도 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의 입장에서 업무처리 시 다양한 업무정보와 기반이 갖춰진 경우와 반대의 경우는 능률과 성과에서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유관단체, 기업, 대학 및 공공기관 등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시스템과 매뉴얼 등은 향후 유사사업의 추진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정부의 공공사업에 대한 사전검증·사후평가가 꾸준히 강화되고 있는 바, 여타 공공사업들보다 선제적으로 사업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등재한다면 공공정보 공개·활용의 취지와도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사업의 업무담당자와 업무처리의 과정이 정리되고 정보화되어 공개되었을 때 주민과 유관기관 등의 객관적인 공감대를 얻는다면 문화복지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정책과 전략의 투명성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2. 일자리 증대 차원



위 : <그림 3>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비중 비교 37)

아래 : <그림 4> 산업별 취업자 전망 - 사회복지서비스업 38)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비중은 매우 상이하다. 미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25%에 육박한다. 영국, 일본, 독일 등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비중도 15~25% 내외에 이른다. 이에 반해 한국의 산업별 고용 비중을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2~3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는 곧 한국의 사회서비스 분야 투자 증가로 인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시장의 성장 잠재성이 크다는 것을 드러내는 반증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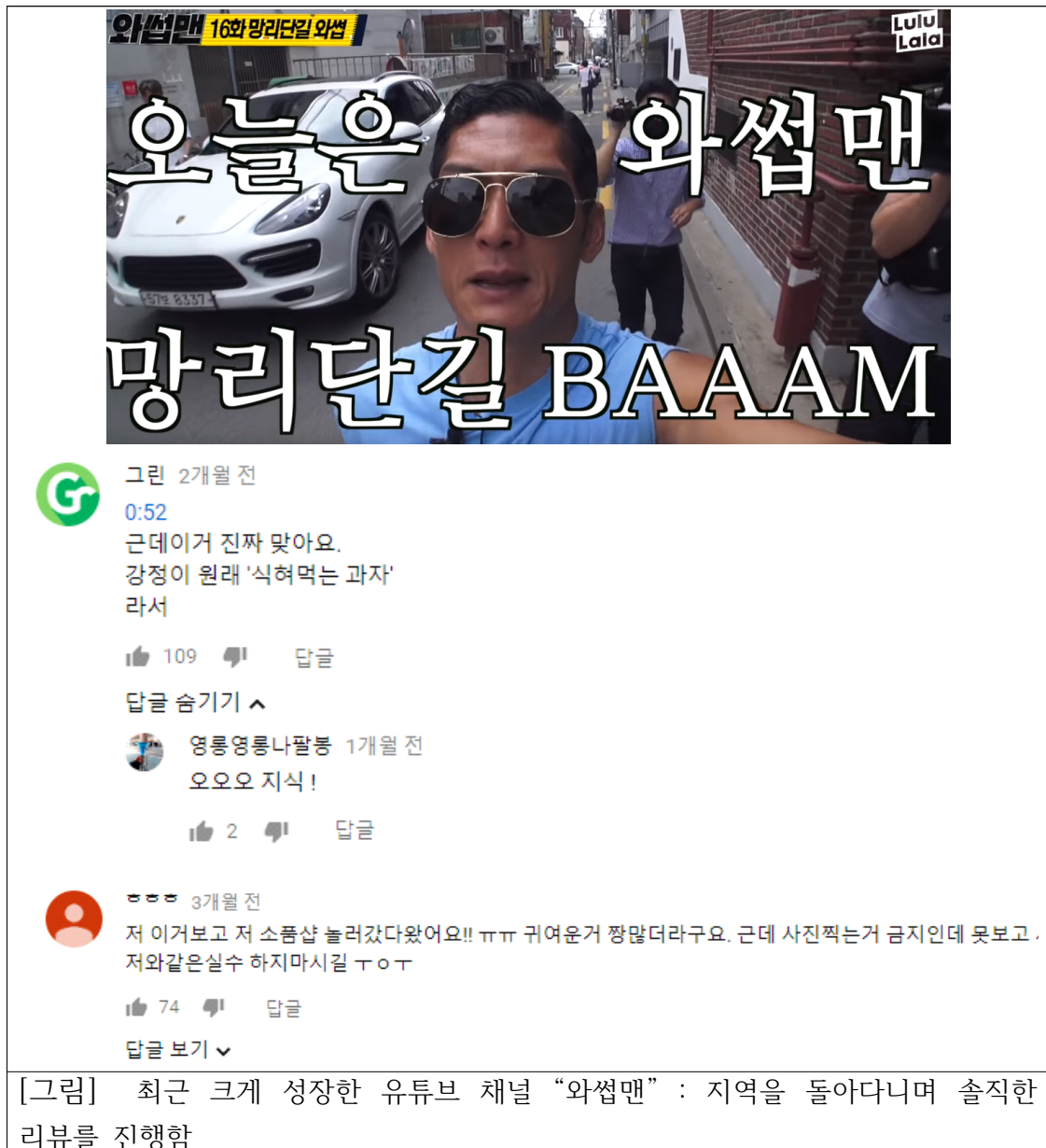
2013년부터 최근까지의 취업자 및 취업자 증가율을 보면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등의 사회서비스 영역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영역은 향후 5년 내에 전 산업부문 중 고용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버영화관을 통해 지역문화와 사회서비스 활용을 활성화시키고, 실버일자리를 창출한 허리우드 클래식 사례를 참고하여 지자체 내 문화복지 전문인력 정책 등이 현실화된다면 이러한 추세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문화유산 및 인프라 보유량이 방대하므로 장애인, 여성, 노인,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교육과 현장 투입을 통해 괄목할만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총량 증가를 기대할 수도 있다.

21)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2016 등을 기초로 재구성

22) 한국고용정보원,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지역별 고용조사』, 2014 등을 기초로 재구성

주제 : 유튜브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지역 모임의 자발적 활성화 방안

1. 최근 유튜브를 통한 소통채널의 활성화



최근 유튜브를 통한 소통채널이 활성화 되면서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위의 그림과 같이 최근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 “와썹맨”의 경우 유튜브에서 댓글을 통해 추천해주는 지역을 찾아가서 지역의 명소와 맛집을 소개하며 현실적으로 불편한 점과 애향했던 점을 솔직하게 리뷰하고 있다.

이러한 솔직한 리뷰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통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솔직한 점이 타지역에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점이

라 할 수 있다.



[그림] SNS 소통 방식이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유튜브로 플랫폼의 이동
 하지만 부산과 같은 지역의 경우 과거 페이스북을 통해서만 지역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리뷰하고 홍보해주는 채널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플랫폼이 페이스북에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영상과 그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형태로 변화하면서 이에 따른 소통 채널과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 지역을 솔직하게 리뷰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한 지방 발전을 위한 소통 창구



와쌌맨-Wassup Man ●

게시일: 2018. 6. 4.

Yo~! 완전 마니 기다려야하는 익선동 갔어..오락실 게임도 하고 ㅋㅋㅋ솔찌키 말해서 호떡도 맛있고, 딸기 수플레 완전 美味

#와쌌맨 #박준형 #god #JoonPark #스튜디오를루랄라
 #익선동 #맛집 #수플레

[와쌌맨] 1화 보러가기 ▶ <http://bit.ly/2LvyyvV>
 [와쌌맨] 2017년 ver. [사서고생_와쌌맨] ▶ <http://bit.ly/2AjbsSG>
 [스튜디오를루랄라] 유튜브▶ <https://www.youtube.com/studiolululala>



정기대 4주 전

강북의 압구정인 수유리(수유역), 청담동(광운대) 와주세요...^^

👍 2 💬 답글



배운경 3개월 전

인싸웃은 동묘에서...(메모끄적...)

👍 58 💬 답글



김영신 3개월 전

익선동 진짜 망가짐...

너도나도 한옥집들 사이에

가게 차리고 돈벌려고 프리미엄 엄청땜

그리고 원래 자주다니던 사람들은 찬밥신세에

몇년전 고깃집가던거랑 다르게

어린 커플들와서 포장마차나 근처 고깃집 식당 술집들에 낫부터
님

지금 상권은 익선동 골목에서 비싸게 파는 공방이나 카페들이 다

테이블 회전도 안되고 원래 가던 직장인들 점점 안오게되서...

골목에 진짜 바가지니까 가서 실망들하지마세요...

[그림]와썹맨에서 솔직하게 사람들이 댓글 달고 리뷰하는 장면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의견 내는 댓글이 상당히 많음

결론적으로 최신의 소통 채널인 유튜브를 잘 활용한다면 지역민의 솔직한 불편점과 개선점에 대한 소통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외부 관광객들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같이 방법을 모색하는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에 리뷰를 오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지원하여 각 지역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면, 지방의 발전을 위한 큰 온라인 소통 채널이 될 것이다.

2. 구체적인 유튜브 지원 방안



[그림] 유튜버 거제폭격기 : 지역을 돌아다니며 이벤트 및 행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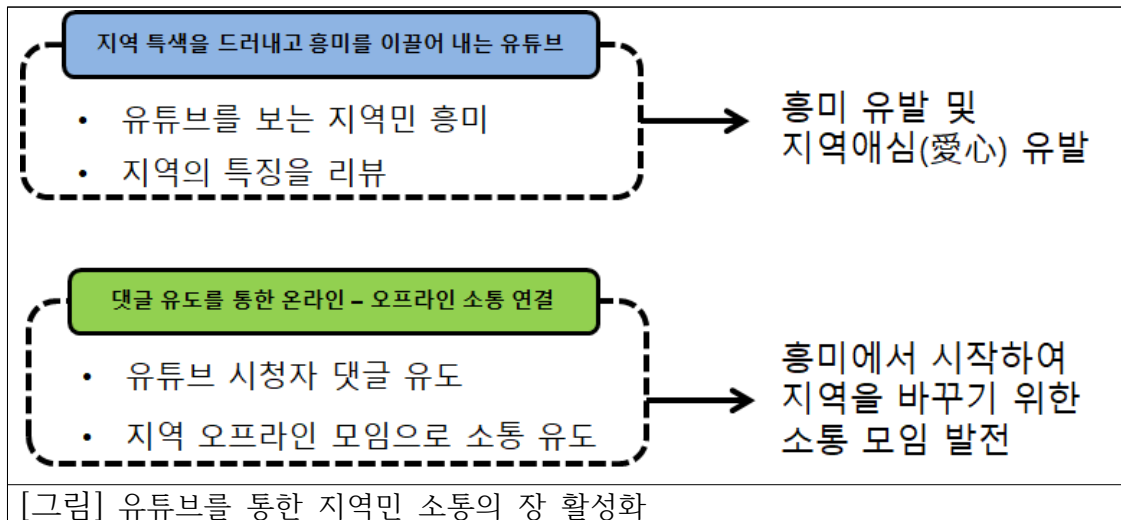
현재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리뷰해주는 유튜버와 스트리머가 많다. 이들이 보다 솔직하게 지역에 대해 세심하게 리뷰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들을 지원해 준다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댓글을 작성할 것이고, 이를 통해 외부에서 그 지방에 방문했었던 사람들 또한 댓글을 달아 줄 것이다.

위의 그림과 같이 현재 부산에서 주로 활동하는 유튜버 “거제폭격기”를 예를 들자면 현재는 부산지역의 유명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길거리 팔씨름을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변 지역에 대한 소개와 리뷰가 조금 들어간다면

그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공감을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유튜버 “거제폭격기”를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우선 각 지역의 공공 편의시설에 대해서 돌아다니고 리뷰를 진행하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저곳은 변화가인데 아직 도로정비가 안되서 불편하다.”등의 여러 의견들이 나올 것이다.

- 구체적인 유튜버 지원 내용



(1) 유튜버에게 자유로운 식대비 지원

유튜버를 지원하는 가장 첫 번째는 유튜버가 솔직하게 리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식당 식대비를 비교적 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후원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때 후원금을 지원하면서 비교적 유명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한다면 보다 지역성이 드러나는 영상을 제작해 줄 것이다.

(2) 지역 거주민과 협동한 콘텐츠 제작 지원

지역 리뷰 유튜브의 특성상 단순히 지역에 있는 자연물이나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도 있지만 지역의 거주민과 협동한 즉석 미션들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서 지역민의 솔직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으며, 보다 유쾌한 영상을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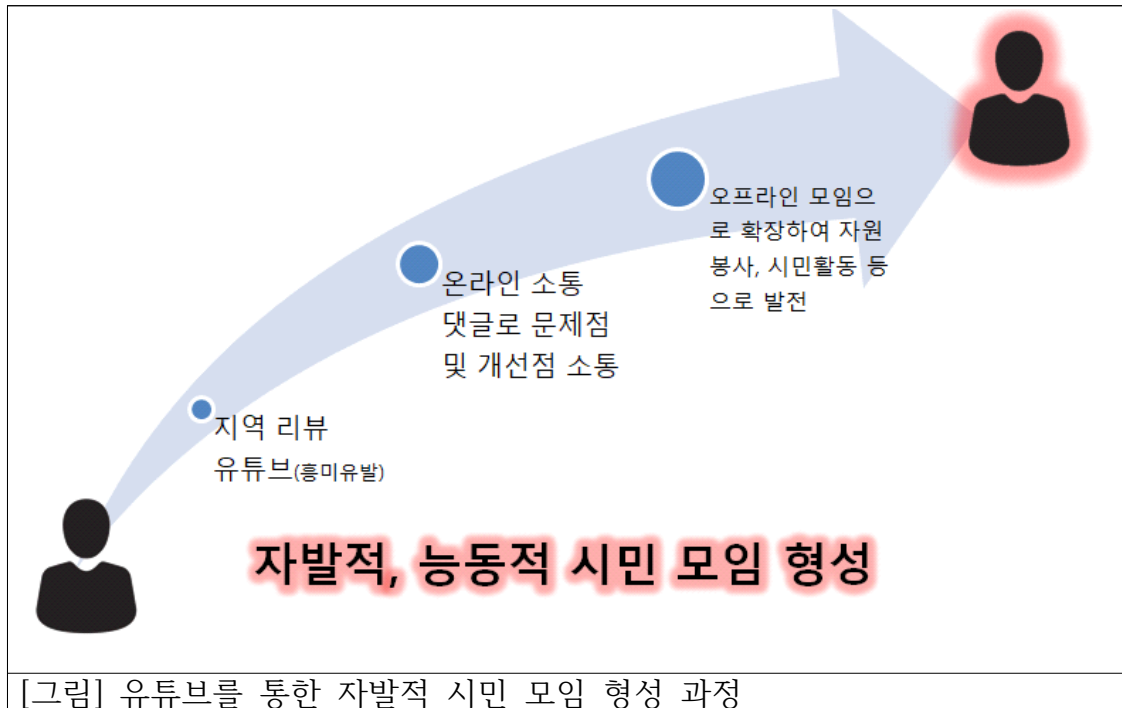
이러한 지역민과 협동한 콘텐츠를 제작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 공터를 미리 빌려주거나 지역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카페 같은 곳을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3) 댓글 유도를 위한 사은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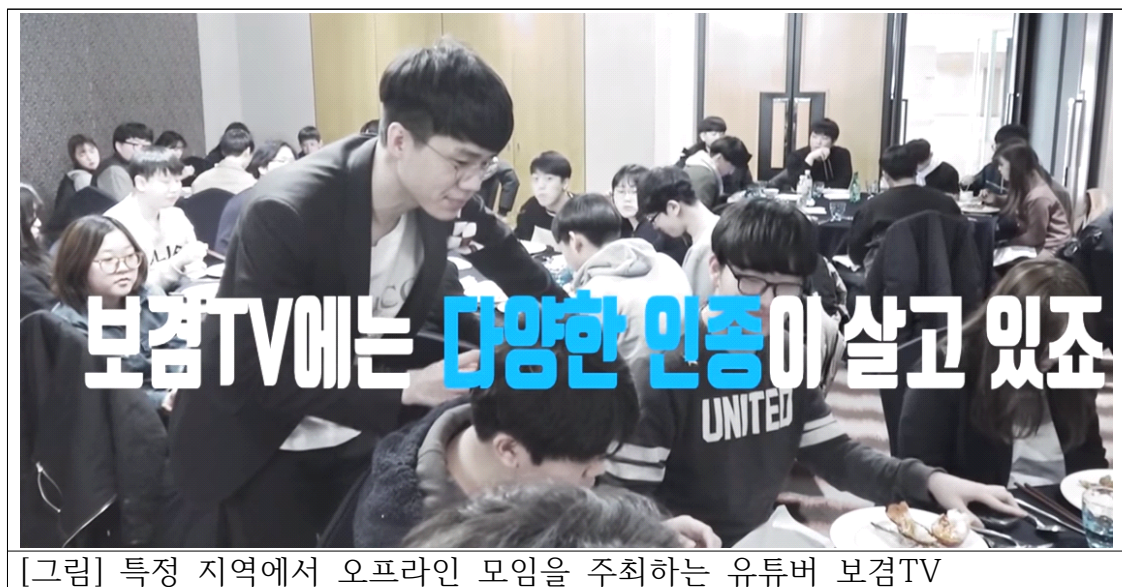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이 보다 소통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댓글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 사은품을 유튜버에게 증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지역 사은품 중에서도 유용하고 값이 저렴한 상품의 경우 유튜브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끼리 어디서 파는지 물어보기도 하는 등 활발하게 교류를 하므로 지역의

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유튜브의 댓글과 소통을 통한 지방자치의 변화 방안



- 유튜브 동영상상을 통한 지역민 오프라인 소통의 장 만들기



유튜브 동영상상을 게시하고 많은 소통 정보와 댓글을 받았다면 이를 기점으로 한 지역민 소통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간단하게는 유튜브에 댓글로 모임 장소와 시간을 게시한다면 지역민 소통을 위해 역지로 홍보하는 것보다 훨씬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소통의 장을 통해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고 변화할 수 있

는 방안에 대해 토론한 다음 지역변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자체의 프로그램으로 만든다면 훨씬 자발적인 자원봉사나 마을 만들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끈끈한 연결고리 만들기

앞서 말한 “와썹맨” 유튜버의 경우 방문했었던 지역에 유튜브를 시청한 외부 사람들이 똑같은 경로로 관광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유튜브를 보고 댓글을 달면 지역에서 주는 간단한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끈끈하게 활성화 되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다른 유튜버들도 방문하여 리뷰를 하게 만들고, 관광객들도 점점 더 많이 찾는 활성화된 지역이 될 것이다.

4. 기대효과

- 지속가능한 지역 소통 창구

지방자치를 위한 시민 의견 수렴 등과 같은 현재의 방식은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소통 플랫폼(예를 들어 구청 홈페이지)을 사용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흥미를 끌 수 있는 콘텐츠가 없기 때문이다.

위의 두 가지 이유를 해결할 수 있는 소통 플랫폼이 유튜브라 할 수 있으며, 흥미를 통한 지속적인 지역민들의 유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통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

인기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리뷰가 된다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댓글로 오프라인 모임을 지원한다면 충분히 오프라인으로 자발적인 지역민들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임은 지역의 변화를 위해 자발적인 자원봉사나 기타 다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발적인 시민 모임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외부 관광객 유입 효과

--



[그림] 와썹맨, 동해안에서 서핑 타기 강습 : 지역의 특징 및 관광 소개

지방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유튜브를 통한 외부 관광객이 많이 방문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유튜브의 특성상 다양한 체험을 리뷰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흥미 있는 요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다면 충분히 지역에 있는 관광거리들의 인기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목차>

***요약본**

1.현황

- 1.1. 장애인의 수적 열세
- 1.2. 장애인의 버스 이용현황

2.정책제안

2.1. 운영

- 2.1.1. 이용대상
- 2.1.2. 운행시간
- 2.1.3. 차량개조

2.2. 인력충원

- 2.2.1 운전기사 자격기준
- 2.2.2 도우미 자격기준

2.3. 관련 편의시설

- 2.3.1. 정류장 버스안내판
- 2.3.2. 장애인용 교통카드 발급
- 2.3.3. 버스 도착정보

3. 기대효과

4. 참고문헌

<요약본>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며 복지사회로 나아감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이 화두로 떠올랐다. 그 중에서도 이동권은 무시할 수 없는 권리인데 대부분이 비장애인의 행동양식에 맞춰져있는 사회에서 신체, 정신적으로 결여되어있는 장애인은 대중교통 하나 마저도 이용하기 어렵다. 이에 우리는 부산광역시를 기준 ‘장애인 셔틀버스 제도’(이하 ‘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장애인들의 이동권 신장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이용대상자는 기존 대중교통과 동일하며 우리 제도에서는 부산광역시의 두리발 이용대상자 기준과 같다. 셔틀버스는 오전 5시를 시작으로 오후 11시까지 운행되며 기존 저상버스나 장애인콜택시의 대기시간 문제를 고려, 배차간격은 15분정도로 설정하고 러시아워 때에는 7-8분 정도로 유동성 있게 운영한다. 다른 버스들과는 달리 장애인들만이 이용객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 버스 내부를 개조한 차량을 사용한다. 휠체어 좌석은 기존 저상버스보다 늘려 뒷 출입문쪽에 5개 배치하고 뒷 출입문은 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있게 낮은 차제바닥과 접이식 경사로를 설치한다. 차량 내부에는 위급상황을 대비한 비상용키트가 구비되어있으며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교체한다. 또한 탑승객들의 승,하차를 도울 도우미 1명을 상시 배치해 승객들의 착석여부를 확인하고, 위급 상황시 수습을 담당할 전문가의 존재가 다른 버스와는 차별화된 점이다.

버스 한 대당 1명의 운전기사과 1명의 도우미가 상주하고 있으며 주 5일에 일일 18시간을 오전오후 교대로 근무한다.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기존 버스운전사와 같이 1종 대형면허와 버스기사자격증을 요하며 도우미는 서류와 면접 과정을 통해 선발된다. 이때 직업 특성상 사회복지사나 응급구조사 등의 자격증은 고용에 있어 가산점이 부여되고 기준에 따라 고용된 후에는 약 한 달간 장애인 이해교육을 이수 받은 후에 실전에 투입된다. 또한 실전에 투입된 이후에도 인성교육과 같은 직업교육을 3개월에 1번 이수해야 한다.

장애인 셔틀버스 정류장에는 음성인식이나 터치, 음성지원등의 기술이 들어가 이용객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버스 정보를 알려줄 것이며 기존 버스들이 이용하고있는 BIMS시스템과 연계해 장애인셔틀버스의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여 활용한다. 요금은 일반 버스의 80%정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책정하며 장애인복지카드와 연계된 교통카드를 발급, 일반 대중교통과의 환승 또한 가능하다.

제도를 통해 우리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며 기존의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객이 분산됨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두리발의 문제점이었던 이용객 개인정보 유출 문제 또한 해결될 것이며 부산광역시를 기점으로 도입영역을 확장시켜 시청단위로 운영되는 이 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1. 현황

1.1. 장애인의 수적 열세

오늘날 평등과 그로인한 인권의 존중은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고, 어느 정도 경제수준에 도달한 국가들의 다음 목표는 국민을 향한 복지국가의 실현이다. 여러 주제의 복지 중 장애인 복지는 노인복지와 더불어 가장 가깝고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주제라 할 수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약자로 구분되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곳곳에서 크고 작게 내어주는 목소리들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약자이면서 수적으로도 열세인 장애인들의 인권을 주장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제 2의 수도라고 불리는 부산에서 마저도 장애인들의 수는 2018년 기준 172,275명으로(부산시청, 2018) 부산광역시 3,449,593명 인구의 약 5%로 이다(통계청, 2018). 이렇듯 장애인들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 보니 비장애인들에 비해 소외와 불편함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특히 현대인들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중교통은 현재 장애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다.

1.2. 장애인의 버스 이용현황

부산광역시에서는 현재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만디버스³⁹⁾ 등 많은 종류의 대중교통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비장애인들과는 다른 세심한 배려와 장치가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한 대중교통으로는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인 두리발 정도일 뿐, 이 마저도 운영에 있어 잡음이 많은 실정이다. 여기서 저상버스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를 수 있도록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이다(두산백과). 2002년 10월 부산광역시

뉴스정보

HOME > 복지정보 > 뉴스정보

작성일 : 11-10-24 14:58

조회 : 2012

부산, 저상버스 도입 '전국 최저 수준'

<http://news20.busan.com/search/search.jsp> [68]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부산시가 운영중인 저상버스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부산장애인이동권연대와 민주버스부산지부(준)는 19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시와 버스 업체들을 상대로 조속한 저상버스 확충과 올바른 운영을 촉구했다.

지난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7개 광역시는 전체 노선버스 가운데 절반을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법 시행 6년이 지나도록 부산지역의 도입 비율은 전국 최저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약자 증진법 무색
전체 버스 7%대 그쳐

출처: (사)부산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태평양 장애인경기 대회기간 동안 운행되었다가 대회가 끝난 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저상버스 도입사업심사를 통해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광주 5개 지자체에 협약을 맺고 제공, 운영 중인 대중교통 수단이다(나무위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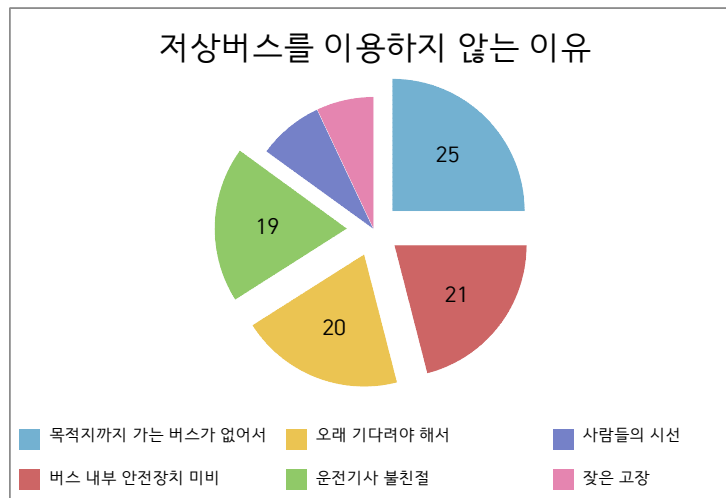
즉, 부산광역시는 저상버스의 시

39) 동구 부산역에서 출발해 중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등을 돌아볼 수 있는 일주형 버스 내일로 여행 시 쉽게 즐길 수 없는 산비탈에 숨겨진 부산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저상버스 도입 후 지난 2011년, 부산은 저상버스가 전체 7%정도에 그치는 전국 최저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이에 부산시는 올해 3월 기준, 총 532대의 저상버스를 운행 중이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합한 전체 2950대 중 약 18%에 해당한다. 이러한 확충에도 불구하고, 이용 당사자인 장애인들은 저상버스가 아무리 늘어나도 운행 노선이 제한적이고, 이용 환경도 불편해 대중교통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조영미, 2014).

경기연구원이 낸 '수도권 대중교통의 교통복지 정책방향-대중교통요금 및 이동장애인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9월 도내 휠체어 이용자 65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87명(74%)이 '저상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저상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목적지까지 가는 버스가 없어서'(25%), '버스 내부 안전장치 미비'(21%), '오래 기다려야 해서'(20%), '운전기사 불친절'(19%) 등을 들었다. 사람들의 시선(8%), '잡은 고장'(7%) 등을 꼽은 응답자도 있었다(최찬흥, 2018).



집계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장애인들의 의견은 경기지역 뿐만이 아닌 모든 지역 장애인들이 느끼는 저상버스의 현주소이며 이러한 장애인들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장애인 버스를 만들고자 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장애인 셔틀버스는 오직 장애인들만을 위한 버스로써 실제 부산 시내에서 장애인들의 활동이

활발한 기관들을 노선으로 선정, 장애인들의 교통권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기존 버스에는 없었던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 스스로 케어를 할 수 없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웠던 장애인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정책제안

2.1. 운영

2.1.1. 이용대상

등록 되어 있는 장애인들 중 기존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상이다. 2018년 3월 5일에 기존의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한다는 발표(국무조정실, 2018)

에 따라 아래 [표 2]의 장애인 셔틀버스 이용 가능한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등급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이는 현재 부산시 장애인콜택시인 두리발 이용대상자와 같은 기준이다.

장애유형	이용가능여부	장애유형	이용가능여부
지체장애	○	호흡기장애	○
뇌 병변장애	○	장루, 요루 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x
청각장애	x	안면장애	x
신장장애	○	심장장애	○
언어장애	x	간장애	○
지적장애	○	정신장애	x
자폐증	x	뇌전증	○

[표 2] 장애인 셔틀버스 이용 대상

2.1.2. 운행시간

셔틀버스는 오전 5시 첫차를 시작으로 운영을 하며 오후 11시에 운영을 종료한다. 배차시간은 운전기사의 휴식시간, 버스 내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시간 등을 고려하여 15분에서 20분사이의 배차시간을 두고자 한다. 단, 도로 사정이나 노선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하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장애인 셔틀버스 도입 후 1개월 간 이용객의 분포를 조사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시간대를 러시아워(rush hour)로 지정한다. 이 시간대에는 다른 시간대와 달리 배차시간을 7분에서 8분으로 짧게 하여 운영을 하도록 한다. 러시아워의 도입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3개월 간 시 청홈페이지, 버스 내 출입문에 공고한 후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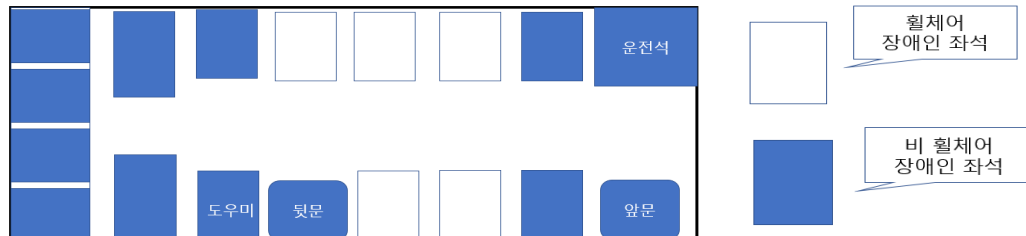
시	분	시	분
05	00, 15, 30, 45	14	00, 15, 30, 45
06	00, 15, 30, 45	15	00, 15, 30, 45
07	00, 08, 16, 24, 32, 40, 48	16	00, 15, 30, 45
08	06, 14, 22, 30, 38, 46	17	00, 08, 16, 24, 32, 40, 48
09	00, 15, 30, 45	18	06, 14, 22, 30, 38, 46
10	00, 15, 30, 45	19	00, 15, 30, 45
11	00, 15, 30, 45	20	00, 15, 30, 45
12	00, 15, 30, 45	21	00, 15, 30, 45
13	00, 15, 30, 45	22	00, 15, 30

[표 3] 러시아워 도입 이후 버스운행시간표(예시)

2.1.3. 차량개조

장애인들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이용하고 휠체어가 타고 내리기 쉽게 뒷문에 펴고 접을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한다. 휠체어 장애인의 버스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휠체어용 좌석을 5개 설치하고 그 외의 좌석은 비 휠체어 장애인 좌석으로 지정했다. 도우미는 모든 승객들의 이용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상시 대기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도움이 더 필요한 휠체어 장애인을 고려하여 뒷문으로 타고 내릴 때 도움이 용이하도록 뒷문에서 가장 가까운 좌석으로

배치하였다. 버스 운전석 뒤에 바퀴가 있어 바닥보다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비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좌석으로, 뒷문을 기준으로 뒤쪽은 비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하고 앞자리는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한다. 도우미는 배치된 좌석에서 이용객들의 착석여부를 확인 한 후, 버스가 출발할 수 있도록 확인한다.



[그림 1] 버스 좌석배치도

2.2. 인력충원

부산시 장애인 셔틀버스 제도는 시청 산하의 전혀 새로운 교통수단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새로운 인력을 뽑는 것 역시 제도가 도입되기 전 시행되어야 할 과정이며 일반인보다 배려가 필요한 서비스 이용자들인 만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역시 그에 맞게 뽑아야 한다. 또한 기존에 장애인콜택시나 바우처 택시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운전기사의 인성문제와 관련해서도 자격과 교육의 방식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먼저, 장애인 셔틀버스에는 운전기사 1명과 도우미 1명이 배치된다. 일반 저상버스보다 휠체어 인들을 위한 좌석수가 많은 뿐더러 그동안 거동이 불편하거나 돌발 상황으로 인해 대중교통이용이 힘들었던 장애인들이 서비스이용 대상자임으로 이들의 시승을 돕는 도우미를 배치한 것이 장애인 셔틀버스의 특징이다. 도우미는 뒤쪽 출입문 바로 옆 좌석에 항상 상주해 있으면서 장애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셔틀버스를 이용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일반버스처럼 주 5일에 일 18시간을 오전오후 교대근무로 운영될 것이다.

1. 2.2.1. 운전기사 자격기준

장애인 셔틀버스의 운전기사는 일반 운전기사와 같이 1종 대형면허와 버스기사자격증을 요하며 응급구조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가산점이 부여된다. 기준을 통과해 선발된 후에는 주2회 4시간씩 한 달간의 장애인 이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수기간 중에는 경찰학교처럼 일정기간 보수가 나가며 이후 주기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나 실습과 관련한 필수이수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전기사로 재직 중에도 교육을 받게 할 것이다.

2.2.2. 도우미 자격기준

도우미는 서류와 면접을 통해 선발되며 응급 구조사나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은 가산점이 부여된다. 운전기사과 마찬가지로 선발된 후 주 2회 4시간씩 한 달간의 이수교육을 통해 돌발 상황에 대처할 여러 사항들에 대해 안전교육과 시험 후 실전에 투입될 예정이다.

운전기사와 도우미는 심폐소생술과 같은 다양한 위급상황안전대처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버스 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상비약이 포함된 응급키트를 포함, 운전자와 도우미는 교육을 통해 사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고용 후에도 지속적인 인성교육을 비롯해 직업 교육을 3개월에 1번 실시할 예정이다.

2.3. 관련 편의시설

2.3.1. 정류장 버스 안내판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 정책도 요구되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책 중 하나는 장애인 셔틀버스 정류장 내 버스 도착 정보를 디지털 안내판에 나타내고 음성지원을 하여 장애인들에게 버스 노선, 도착시간 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장애인 셔틀버스 정류장의 버스 안내판 같은 경우 주 이용자가 ‘신체장애인’인 만큼 앞서 언급했듯이 안내판 화면을 터치하거나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버스 노선, 버스 도착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용객을 위해서 화면에 대고 말을 하면 버스 도착 정보를 가르쳐주는 음성 인식방식도 도입한다.

2.3.2. 장애인용 교통카드 발급

서울시 같은 경우 티머니와 장애인복지카드를 연계하여 지하철에 한해서 중증환자들이 무료로 이용 할 수 있게 해주는 카드를 발급해주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 은행에서 G-PASS를 발급하여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지하철, 전철 등을 무료로 이용 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여 부산에서도 ‘부산시 통합 장애인 교통카드’를 도입하여 일반 시내버스 80%정도의 요금으로 장애인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 교통카드는 일반버스, 지하철로 환승 할 때에도 모두 사용 가능하다.

발급조건은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부산에 거주하는 타 지역 출신, 부산으로 통학, 통근 하는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둔 장애인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타 지역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발생 하는 것을 방지한다. 실제로 서울시의 장애인 우대 교통카드나 경기도의 g-pass의 경우 아예 타 지역 주민들은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어 타 지역 주민들이 관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 통합 장애인 교통카드는 기존 장애인 교통카드와 마찬가지로 은행 한 곳을 사업체로 선정하여 주민 센터나 시청에서 발급하는 형식으로 한다. 또한 장애인들의 주 이동경로, 행선지를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 관내 전 장애인들의 의무 가입을 요하

며, 직계 가족을 통하여 대리가입이 가능하다.

2.3.3. 버스 도착정보

정류장 내의 버스 노선, 버스 도착 시간 등은 일반버스의 경우 ‘버스 정보관리 시스템(BIMS)’으로 각 정류장간 정보를 연계하고 있는데 장애인 버스 역시 기존의 BIMS에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여 각 정류장간 정보를 연계하고 이용자들에게 실시간으로 노선 정보를 제공한다.

3. 기대효과

1.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장애인들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바우처택시의 경우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 이동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제안하는 정책은 배차시간이 15분 정도여서 기존의 교통수단과 비교하여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어 이동하는데 장애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진 ‘두리발’ 장애인콜택시와 달리 제안하는 정책의 경우에는 이용하는 횟수가 제한이 없기에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용객 자체가 장애인에 초점을 맞춘 제도임으로 도우미의 상시 배치나 타 대중교통보다 많은 안전장치 또한 이동권 향상에 기여한다.

2. 개인정보 보호

기존의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한 번 탑승을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택시회사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는 고객 개인의 정보가 택시를 이용할 때마다 운전사에게 전달되었는데, 택시운전사들의 특정고객 승차거부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받은 적이 있다(온더로드,2018). 하지만 장애인 셔틀버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며 이용을 위한 교통카드는 발급업무를 기존의 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과 한 번에 이루어진다. 운전기사나 도우미 측에 일일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공공기관에서 주관하기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걱정도 줄어들 것이다.

3.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역시 기대되는 효과중 하나로 버스를 운행하는 데 있어 운전을 하는 가사는 필수적이다. 제안하는 정책에서는 운전기사와 같은 비교적 취업가능 나이의 폭이 넓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도 이점이며 도우미라는 직업은 향후 관련 업종에서 실무로서의 스펙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지방자치 강화

우선은 부산광역시를 기점으로 점점 다른 지역에도 도입을 할 예정으로 시청단위의 행정기관에서 진행을 하여 지방의 자치 능력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는 문제인 정부가 강조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다.

5. 기존 장애인 대중교통의 이용객 분산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차량 수 대비 이용대상자가 많아 이용에 횟수제한을 두거나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위해 탑승시간제한 등이 있었다면 셔틀버스의 도입으로 이용대상자들이 분산되어 기존 장애인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4. 참고문헌

- 국무조정실, 「[보도참고자료] 장애등급제 폐지 발표 관련」, 2018.03.06.,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7023>(2018.10.03
)
- 나무위키, 「저상버스」
<https://namu.wiki/w/%EC%A0%80%EC%83%81%EB%B2%84%EC%8A%A4>(2018.
10.06.)
- 두리발, 「이용대상」,
http://m.duribal.co.kr/info/price_info.html(2018.10.05.)
- 두산백과, 「저상버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22294&cid=40942&categoryId=32194>
(2018.09.24.)
- 박태우, 「부산, 저상버스 도입 '전국 최저 수준」, 부산광역시 장애인 재활협회,
2011.10.19.,
http://www.bsrd.or.kr/new/bbs/board.php?bo_table=B16&wr_id=1778&page(2018.
09.25.)
- 부산시청, 「2018년 6월말 기준 부산광역시 장애인등록 현황」, 2018.07.24.,
[http://www.busan.go.kr/welfare/ahdispersion02/1329021?curPage=&srchBeginDt=&
srchEndDt=&srchKey=&srchText=](http://www.busan.go.kr/welfare/ahdispersion02/1329021?curPage=&srchBeginDt=&srchEndDt=&srchKey=&srchText=)(2018.10.04)
- 부산시청, 「휠체어로 탈 수 있는 저상버스 올해 70대 더 도입 총 182대로」,
2011.06.20.,
<http://news.busan.go.kr/snsbusan01/view?dataNo=33547>(2018.09.28.)
- 손선영, 「저상버스 도입 노선현황」, 부산시청, 2018.08.06.,
<https://www.busan.go.kr/traffic/lowbus>(2018.10.05.)
- 온더로드, 「장애인콜택시가 안 태워주는 이용자가 있다?」, 2018.01.17.,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83&thread=04r08>(2018.09.24.)
- 조영미, 「'저상버스 운영 방안' 토론회, 장애인 저상버스 타기 너무 불편… 이용률
1%」, 부산일보, 2014.04.09.,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31230000111>(2
018.10.01.)
- 최찬흥, 「휠체어 이용자 74% "저상버스 이용 경험 없다"」, 2018.05.17.,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0517088000061&mobile>(2018.09.27.
)
- 통계청,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2018.10.01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checkFlag=N
(2018.10.03.)

대학생부문

지방자치 및 분권의 실현

: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심으로

주제 : 가정지원

연락처 : 010-8740-6133 (정원석), 010-5338-7584 (박채빈)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8길 64 103동 1701호 (정원석),
서울시 성북구 오패산로 46 114동 1708호 (박채빈)

만든이 : 정원석, 박채빈

2018-10-11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즉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서 예로부터 가정을 중시해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선 과거 사회와 달리 가족, 즉 가정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최소 3대가 함께 모여 사는 대가족의 형태였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가정 내에서 다른 구성원들의 도움들 통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지만,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가정 내의 문제가 이전과 같이 쉽게 해결되지 않아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가정 내의 문제도 이전처럼 단순한 형태에서 벗어나 그 문제가 구성원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하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리하여 국가가 가정 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여러 기관을 세워 가정을 보조하게 되었고, 이러한 취지 속에서 2004년 용산, 여수, 김해를 시범지역을 삼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센터 설치 수도 늘고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센터 운영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역사회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 및 분권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센터의 부족한 점을 점검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여덟 개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대적으로 정상가족 위주로 돌아가는 센터 운영을 결손가정이나 그 밖에도 소외계층 위한 프로그램을 현재보다 많이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다양화, 그리고 이용자 규모 확보를 위해 지자체에서 재원 확보에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본인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와 비용을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홍보와 인식 개선에 더욱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넷째,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참여 수당 등을 지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섯째, 가정지원센터의 실제 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섯째, 남성의 가정지원센터 이용을 독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곱째, 지역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독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덟째, 지역사회의 공동육아를 장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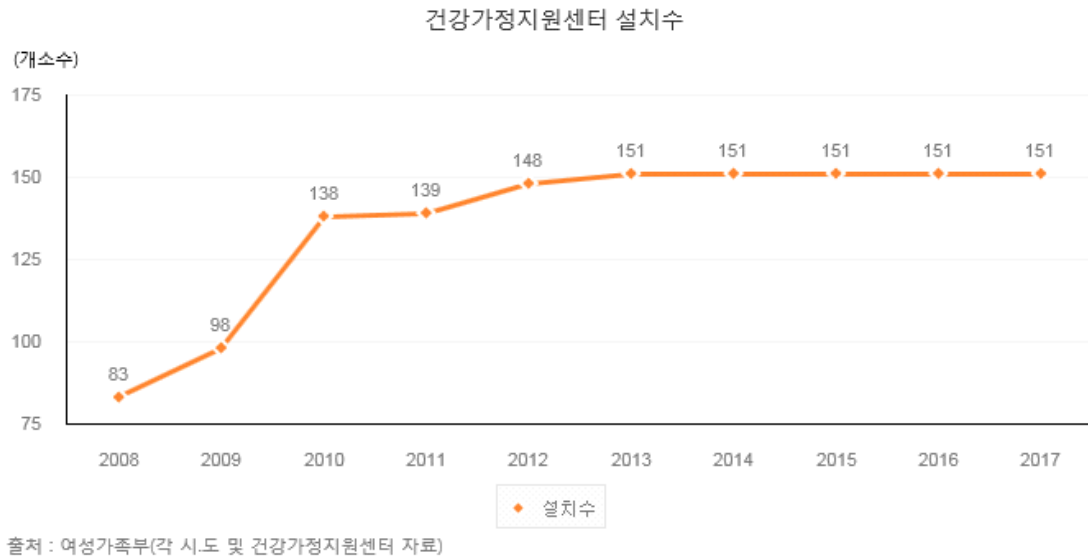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전국 187개의 센터를 가지고 있고 서울의 경우 26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센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2010년 만15세 이상 남녀 4,754명을 조사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중 79.8%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림1

(단위 : 명, %)

구분1	구분2	2010		
		사례수	들어본 적이 있다	들어본 적이 없다
☐ ☐ ☐	☐ ☐ ☐	☐ ☐ ☐	☐ ☐ ☐	☐ ☐ ☐
전체	전체	4,754	20.2	79.8
성별	남자	2,368	20.2	79.8
	여자	2,386	20.3	79.7

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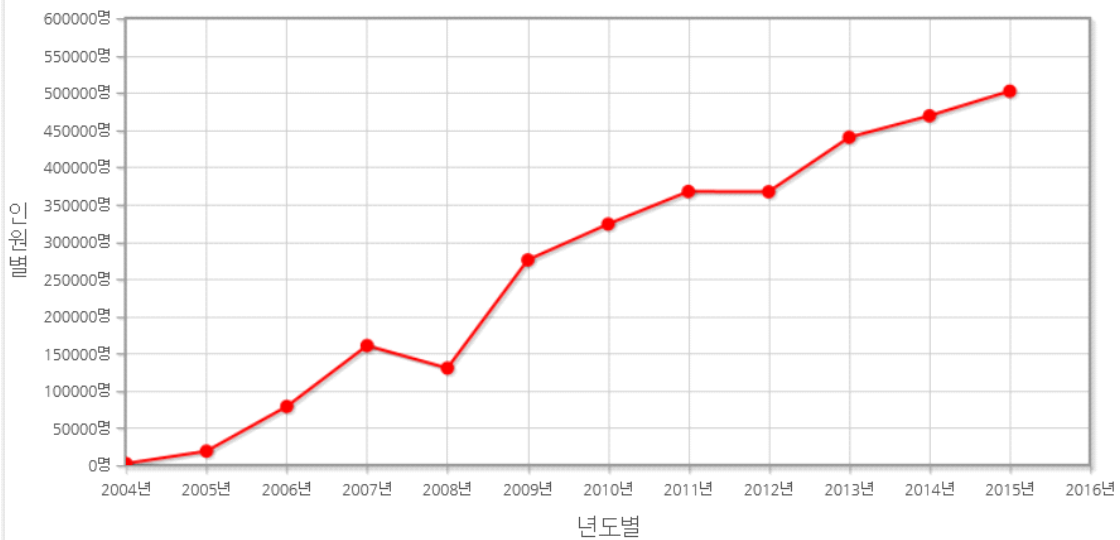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일단 센터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전생애주기 가족서비스를 해주는 가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곳이며, 크게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가족돌봄나눔, 돌봄지원, 다양한가족지원으로 총 여섯 가지 사업영역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영역에서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남성대상교육, 가족성장아카데미, 가족생활교육, 가족 간 의사소통교육, 자녀대상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교육은 전문가들에 의해 표준화되어 개발된 교육메뉴얼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에 개설된 교육은 각 주제별로 관심있는 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가족교육 외에 센터에서 하고 있는 주요사업으로는 가족상담, 가족돌봄나눔·문화사업, 공동육아나눔터운영, 아이돌봄지원, 취약위기가족지원, 미혼모 부자가족지원과 같이 다양한 가족지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센터에 올라와 있는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센터 가족교육사업 연간 참여인원은 약 50.2만 명입니다. 아래의 그래프 추세에 예상 해보자면 현재 2018년까지 이용자가 증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3

가족교육사업 연간 참여인원 현황



출처 :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이용자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서 4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3년 서울시 센터 만족도의 경우,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가 4.6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문화사업이 4.64점, 가족돌봄나눔사업 4.61점, 가족상담 4.51점, 지역사회연계 4.5점, 가족교육 4.49점 순이었습니다. 그 밖에 G구 센터의 경우, 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건강가정사의 태도, 프로그램의 질과 필요성, 향후 참여의사 등 총 10개 문항으로 측정한 센터 이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32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좋은 변화가 나타났다는 예도 많은데, 대표적 예로, H. Song et al.(2012)은 2011년 4곳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행 중이던 조손 가정 지원 시범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손자녀 세대의 학업능력 및 성적 향상이 있었으며 조부모 세대의 가사지원을 통한 부담 경감 및 양육 효능감 회복과 가족관계 개선 등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센터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하고 있지만 아래와 같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센터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 첫번째 문제점으로, 프로그램이 정상가족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데, **결손가정이나그밖의소외계층위주로프로그램을 편성하였으면합니다.** 서울시 센터를 바탕으로 조사한 논문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가구의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 참여비율이 28.6%였습니다. 여기서 좀 더 살펴보자면 일곱 가지 영역 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센터에서 진행하는 문화사업보다 돌봄지원 사업에 대한 요구가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센터를 이용한 대상자를 상대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 사업 참여한 경우가 58.1%였고, 돌봄지원사업은 27.5%였습니다. 따라서 지역구 내에서 센터를 보조하여 돌봄지원사업을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이와 더불어 조손 가정에 대한 지원이 적습니다. 한부모가정 프로그램의 경우 한부모 지원센터가 생겨 따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그 가정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조손 가정의 경우 2017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공지된 전 권역별 조손 가족 프로그램은 총 9번만 진행되었으며, 심지어 2018년에는 2018년 1월 5일에 여가부에서 조손 가족 지원 기관 확대된다는 기사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 2018년 10월까지 개설된 조손 가족 프로그램은 총 두 번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건강 가정을 이루는 데에 프로그램 활동이 촉진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 개설과 지원을 도와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에서 센터 지원을 위해 지자체는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앞서 말한 자료에서 독립형 센터의 경우 센터당 1.9억, 다기능화 센터의 경우 9750만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예산부족 문제는 시설확충,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서나 이용자 규모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므로 지자체에서 **재원확보에 힘써주었으면합니다.**

셋째, **홍보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위의 통계청 자료와 같이 센터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75%나 넘고, 심지어는 본인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와 비용도 잘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센터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역신문을 활용하고 홍보를 하는데 비용지원을 해주시고, 기존의 부족한 홍보 방식을 개선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존의 홍보 방식에 추가로 프로그램 필요 계층들이 자주 들르는 종교시설이나 어린이집 등에 직접 찾아가 홍보하는 방법을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이미지 제고 사업도 같이 한다면, 해당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들이 본인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문상담사의 영입 등 전문 인력 유치가 홍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2012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문상담사를 영입, 가족상담실을 운영한 결과 이용자가 전년도에 비해 142%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문인력 도입을 지원하는 것도 센터의 인지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참여수당등을 지급해주시시오.** 프로그램 참여수당의 제공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이트에서 부모교육을 업로드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센터에도 적용하여 교육영상을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들에게 모든 동영상 시청하고 수기 등을 작성하게 하면 일정 수당을 지급하여 교육을 독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영상 시청을 전적으로 무료로 제공해준다면, 강의 시청이 흐지부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소정의 금액을 부담하게 하여, 지불한 비용이 아까워서라도 강의를 제대로 수강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도 함께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취약계층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교육 참여수당을 지급해주고, 프로그램은 가급적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제공하여 이들이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위해 일을 포기하는 일은 만들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섯째, **연계성을 강화해주시시오.** 아동학대 사례를 통해서 제언을 하자면, 아동학대 조사관이 가해자인 부모에 대해 단순히 훈계나 처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부모들이 프로그램을 참여를 유도하거나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성을 높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모들이 본인들의 문제 원인을 치료할 수 있게 되며,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교류도 하고 지역사회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남성들의 센터 이용을 독려해주시시오.** 서울시 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성 이용자(기혼 성인)는 17.3%라고 합니다. 물론, 대개의 경우 남성이 생계를 위해 일을 하다 보니 센터의 이용이 저조하여 나온 결과이긴 하지만, 가정폭력에서 남성의 비율이 80%이고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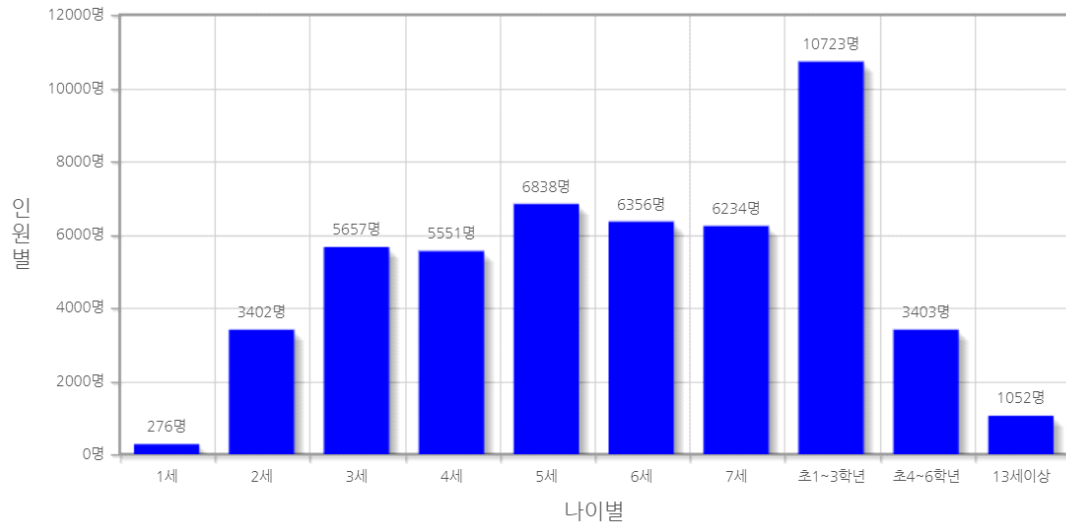
학대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5.2%이니, 예방적 차원으로 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남녀의 일과 가사 분담의 실현을 위해 남성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곱째, 지역커뮤니티를지원해주셨으면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자조모임이있습니다. 공통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함으로써 구성원 개개인도 그 안에서 도움을 얻는 자조모임은 공통 관심을 지닌 주민들의 지역 문제 자체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제도를 참고하여 각 가족의 구성들이 건강가족 만들기를 위한 정보를 교류하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활성화가 되기 위해선, 대학교에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실적을 증명하면 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건강가족을 위한 커뮤니티에게 지원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커뮤니티가 생긴다면 지역 소속감을 고취하고, 지역 주민들의 소통 강화와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도 제고 등과 같이 지방자치 강화 측면에서도 여러가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여덟째, 지역사회공동육아를장려해주셨으면합니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육아 활동에 대해 다른 가족과 함께 정보를 나누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결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 온 마을이 힘써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 지역사회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한국의 낮은 출산율은 직장을 다니는 여성의 수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이들의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렵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를 포기하는 여성이 많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경우, 육아휴직을 쓰기는 애매하지만 자녀 혼자 집에 두는 것은 아직 불안한 부모들의 고민이 많은데, 연간 이용 아동연령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의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공동육아나눔터의 활성화를 통해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 기업과 리모델링 사업 MOU를 체결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기존 탁아소와 달리 지역주민들이 함께 육아 활동을 돕는 것입니다. 이 나눔터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지역사회 역량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리모델링 지원뿐만 아니라 소방 및 안전 점검에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및 설비를 확충해 사업 확장에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림4

연간 이용 아동연령현황(2014)



출처 : 건강가정지원센터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 여덟 가지의 제안을 하였습니다. 가정은 사회조직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구성원들을 보충하고 생산적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렇기에 가정이 무너져가는 현대사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만드는 데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건강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 만들기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제안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나아가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 및 분권 실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소통을 더욱 활성화할 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된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 진미정, 차지영(2017),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가 평가한 센터 이용 만족도와 가족관계 향상: G구 센터 사례",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17.5, p207
- 진미정, 노신애, 소효종(2017)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도와 양육 스트레스 및 가족건강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5(3) 2017.9, pp 113-126
- 손서희, 계선자, "서울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 센터 이용자의 가족 건강성 및 프로그램 요구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6) 2014.12, pp 19-30

- 여성가족부(2018), 2018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지비율(통계청, 2010)
-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다양한 가족, 평등한 삶, 함께하는 지역가족, 2013
- 아동학대 10건 중 8건은 친부모가 가해... 원인은 "양육상식 부족" 가장 많아, 한국일보, 2018
- 여가부,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족 지원 기관 확대, 연합뉴스, 2018.01.05
- 이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수 142% 증가, 경기일보, 2012
- 2017년 가정폭력행위자 수탁사건 상담통계 및 피해자 사후조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7
- 건강가정지원센터 :
- 우리 동네 자조모임 : <http://www.seoulhanbumo.or.kr/business/business5.jsp>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지비율(통계청, 2010)

2018년 센터유형별 현황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2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35개소 (2018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여성가족부, 2018)

서울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 센터 이용자의 가족 건강성 및 프로그램 요구도(한국가정관리학회, 2014)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가 평가한 센터 이용 만족도와 가족관계 향상: G구 센터 사례 (한국가정관리학회, 2017) 논문에서 조사가 진행된 구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명명했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가 평가한 센터 이용 만족도와 가족관계 향상: G구 센터 사례 (한국가정관리학회, 2017)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도와 양육스트레스 및 가족건강성(한국가정관리학회, 2017)

100-199만원 9.2% / 200-299만원 19.4% (출처 : 서울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의 가족건강성 및 프로그램 요구도, 2014)

돌봄지원사업, 가족친화적인 생활환경조성, 성·세대·계층 간 갈등 완화, 다양한가족에 대한 배려 및 어울림, 일-가정 양립 지원, 기존 사회자원 통합 및 효율화, 생애주기별 가족지원사업

서울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의 가족건강성 및 프로그램 요구도, 2014

여가부,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족 지원 기관 확대, 연합뉴스, 2018.01.05

2018년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안내 2018 여성가족부

참고자료 :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다양한 가족, 평등한 삶, 함께하는 지역가족, 2013

이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수 142% 증가, 경기일보, 2012

서울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의 가족건강성 및 프로그램 요구도, 2014

2017년 가정폭력행위자 수탁사건 상담통계 및 피해자 사후조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7

아동학대 10건 중 8건은 친부모가 가해... 원인은 “양육상식 부족” 가장 많아, 한국일보, 2018

우리 동네 자조모임 : <http://www.seoulhanbumo.or.kr/business/business5.jsp>

알림

제3회 지방자치·분권실현 정책제안 공모

부산일보사는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방분권의 확대 강화'를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 제안 공모대회를 개최합니다.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한 의제·제도화 모색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행 사 명: 제3회 지방자치·분권실현 시민·대학생 정책제안 공모
- 접 수 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899, 6층(양정동, 양정센텀빌딩)
(☎부산시민재단 ((우)47213) ※우편접수만 가능
- 원고분량: A4용지 10장 이내(글자 크기 11포인트, 주제 요약 A4 용지 1장)
※ 원고 앞에 지방자치·분권실현 정책제안 공모 '시민부문' 또는 '대학생부문'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반드시 표시
- 마 감 일: 2018년 10월 13일(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 개인 또는 팀(5인 이내) 가능
- 시상내역: 대상(최우수) 1명(300만 원), 우수 2명(일반·대학생 각 1명: 1인 150만 원), 장려 4명(일반·대학생 각 2명: 1인 50만 원)
- 문 의: 051-806-9032, 051-851-2452
- 주 최: 부산일보사,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 주 관: (☎)부산시민재단
- 협 찬: **BNK** 부산은행

(제 3회 지방자치·분권실현 정책제안 공모 알림 기사/
2018년 5월 23일 부산일보<2면> 게재)

참고자료 1-2)



제3회 지방자치·분권실현 정책제안 공모

- **공모내용** : 지방자치 활성화 및 지방분권 강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제반분야
(산업, 경제, 노동, 여성, 청년, 지역대학육성, 노인, 아동, 일자리,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자원봉사, 시민운동 및 풀뿌리 주민 운동, 환경생태,
관광, 보건의료, 영화영상 등 문화예술 각 분야, 지역균형 발전 등)
- **접수마감** : 2018년 10월 13일(토)~토요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개인 또는 팀(5인 이내) 가능
- **원고분량** : A4용지 10매 이내(글자크기 11포인트, 주제요약 A4 1매)
※원고 앞에 지방자치·분권실현 정책제안 공모 '시민부문' 또는 '대학생부문' 및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반드시 표기
- **시상내역** : 대상(최우수) 1명(300만원)
우수 2명(일반, 대학생 각 1명 : 1인 150만원)
장려 4명(일반, 대학생 각 2명 : 1인 50만원)
- **우편접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899, 6층(양정동, 양정센텀빌딩)
(사)부산시민재단 (우.47213) ※우편접수만 가능
- **문의** : (051)806-9032 / 851-2452

• 주최 : 부산일보사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 주관 : (사)부산시민재단 • 협찬 : BNK 부산은행

(제 3회 지방자치·분권실현 정책제안 공모 웹 포스터)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조직현황

고문 김동석(부산예총 회장) 김만율(부산노인대학협의회 공동회장)
김민남(전 동아대 부총장) 김정각(종교인평화회의 공동대표)
김희로(부산시민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박용수(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회장) 서세욱(부산을가꾸는모임 상임대표)
송영명(전 부산예총 회장) 여창호(부산생명의숲 상임대표)
오동석(부산사회체육센터 상임부회장) 윤덕혜(여성정책연대 대표)
이경신(전)바르게살기운동부산협의회 회장) 이청산(전 부산민예총 회장) 정
영문(목사) 최소남(전 부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최영애(부산참여연대 공동대표) 하선규(전 부산YWCA 회장)

공동대표: 김대래(시민과 대안정책연구소 이사장, 신라대 교수)
김동하(언론노조 부산대표자모임 대표, 국제신문 노조위원장)
김종민(부산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창균(바르게살기운동부산협의회 회장)
박인호(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대표)
박재율(상임대표,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
오문범(부산YMCA 사무총장) 윤교숙(부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조정희(부산여성소비자연합 상임대표)

정책위원: 강재호(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순은(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전 동의대 행정학과 교수)
박명흠(전 부산외대 교수, 공동정책위원장)
박영강(동의대 행정학과 교수)
박재욱(신라대 행정학과 교수) 배준구(경성대 행정학과 교수)
서재호(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이희태(신라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차재권(사)시민정책공방 소장, 부경대 정외과 교수)
초의수(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동정책위원장)
최우용(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철행(영산대 행정학과 교수)

집행위원: 강병관(사) 정책공방 사무국장)

강호열(부산하천살리기운동본부 사무처장)

권명준(부산을가꾸는모임 상임부회장)

김영석(중소상공인살리기협의회 사무국장)

김영주(서부산시민협의회 공동회장)

김해몽(부산시민센터 센터장) 김호진(부산민예총 사무처장)

박정희(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이정화(부산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변상준(부산발전시민재단 사무처장)

안현정(부산여성단체협의회 사무부장)

오봉섭(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전 본부장)

윤경태(지역경영연구소 사무국장/공동사무처장)

윤나영(부산YWCA 정책기획국장)

이성근(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이훈전(부산경실련 사무처장/공동사무처장)

최대현(생명그물 사무국장) 하주희(부산예총 사무처장)

황재문(부산YMCA 국장)

*이상 가나다 순

< 참가단체 > 총 143개 단체

1. 부산여성단체협의회 소속단체(28개)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꽃무리회/대한기독교 여자절제회 부산지부/부산광역시 조산사회/부산목련회/부산광역시 여약사회/영남꽃예술작가연합회/소비자 교육중앙회 부산광역시지부/전문직업여성클럽/대한간호조무사협회부산광역시회/한국부인회 부산지부/한국여성유권자연맹 부산지부/한국휘트니스협회/한국여성연맹부산지부/작은봉사여성회/문화와 환경을 생각하는 여성회/한국통일여성협의회 부산지부/한국펄벅다문화회/부산복지총여성봉사회/부산광역시한국한복협회/부산광역시여성연합합창단협의회/부산광역시여성자원봉사연합회/대한미용사회부산광역시협의회/부산광역시생활개선회/한국예술봉사회/한국녹색환경여성연합/여성문제연구회/부산광역시새마을부녀회

2.부산여성단체연합 소속단체(8개)

부산교육문화센터/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사회교육원/부산여성의전화/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산여성회/여성문화인권센터/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3.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소속단체(11개)

동물자유연대 부산지부/부산경실련/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산민연련/부산민예총/부산생명의숲/부산생명의전화/부산환경운동연합/부산흥사단/부산YMCA/부산YWCA

4.부산시민단체협의회 소속단체(22개)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서부산시민협의회/부산종교인평화회의/부산여성정책연구소/우리물산장려운동본부/(사)부산여성소비자연합/부산장애인총연합회/부산안전실천시민연합/한국소비자연맹부산지회/(사)부산장애인부모회/(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영남협의회/밝은세상21시민연대/환경보호운동실천연합/(사)교통문화운동시민연합/(사)부산복지21총봉사회/부산민족학교/부산노인대학협의회/부산사회체육센터/국제물류촉진지역연구회/백산정신기념사업회/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5.부산광역시구.군여성단체협의회 소속단체(16개)

강서구여성단체협의회/금정구여성단체협의회/기장군여성단체협의회/남구여성단체협의회/동구여성단체협의회/동래구여성단체협의회/북구여성단체협의회/사상구여성단체협의회/사하구여성단체협의회/서구여성단체협의회/수영구여성단체협의회/연제구여성단체협의회/영도구여성단체협의회/중구여성단체협의회/부산진구여성단체협의회/해운대구여성단체협의회

6.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소속단체(16개)

바르게살기운동 강서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금정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기장군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남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동래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사상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사하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수영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연제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영도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부산진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해운대구협의회

7.그 외 개별 단체(42개)

(사)선양복지원/영광문화예술원/소리모아봉사회/(사)한국자유총연맹여성회/부산여성불자회/부산경남목화예술단/(사)부산색동어머니회/부산사랑여성봉사회/나라사랑회/부산여성민속회/평등가정여성회/여성권리찾기연대/부산여성예절교육회/좋은인연모임회/영광예절미학회/(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부산그림치료봉사회/부산차문화봉사회/자원봉사후원회/라오의산들바람봉사회/장군차차향회/부산예술단체총연합회/(사)지역경영연구소/포럼‘신사고’/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사회복지연대/부산시민센터/부산자치시민연합/청정화합시민연대/언론노조부산대표자모임/부산여성뉴스/부산발전시민재단/전국공무원노조부산지역본부/(사)시민정책 공방/중소상공인살리기협의회/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재)창조재단/여성정책연대/사)생명그물/부산을가꾸는모임/사)부산그린트러스트/부산하천살리기운동본부